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000-00

정책보고서 2019-

인구정책 관련 통계 지표 품질 개선 연구



임정미

이상림 · 박종서 · 강욱모 · 오신휘 · 임지혜

【책임연구자】

임정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치매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공동연구진】

이상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중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강욱모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임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출문 <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인구정책 관련 통계 지표 품질 개선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홍 식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4
제2장 인구정책 통계 정의 및 현황	5
제1절 인구정책 정의와 범위	7
제2절 인구정책 통계	8
제3절 인구정책 통계 해외사례	11
제4절 소결	36
제3장 국내 인구정책 주요 통계 현황	9
제1절 인구분야 통계	41
제2절 사회분야 통계	54
제3절 정책분야 통계	83
제4절 소결	108
제4장 인구정책 관련 통계 지표 개선방안	Ⅱ
제1절 인구 분야: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	Ⅱ4
제2절 저출산 분야: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Ⅰ
제3절 고령사회 분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	3
제4절 통계 지표 개선방안	149
제5절 소결	172
제5장 결 론	175

참고문헌 179

부록 183

표 목차

<표 2-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계획 중 저출산 대책	9
<표 2-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계획 중 고령사회 대책	0 1
<표 2-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계획 중 인구구조 변화 대비 대책	1 1
<표 2-4> OECD Family Data 지표	13
<표 2-5> OECD database의 고령사회 대응 지표	51
<표 2-6> Eurostat: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	19
<표 2-7> Eurostat: 고령화(Ageing) 대응지표 체계	2 2
<표 2-8> 인구분야 통계	0
<표 2-9> 사회분야 통계	3
<표 2-1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분야 통계	4 3
<표 3-1> 초혼 신혼부부의 자녀 출산 현황 (2016~2017년)	7 4
<표 3-2> 초혼 신혼부부의 특성별 자녀 출산 현황 (2017년)	8 4
<표 3-3> 성·연령별 건강수명 (2012~2018년)	3 5
<표 3-4> 연도별 혼인건수 및 증감률 (2008~2018년)	5 5
<표 3-5> 국제결혼 혼인건수 및 비중 (2008년~2018년)	6 5
<표 3-6> 연도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2008~2018년)	6 5
<표 3-7> 15세 이상의 연령대별 1인 가구 (2005, 2010, 2018년)	8 5
<표 3-8> 자녀수별 가구 (2018년)	06
<표 3-9> 영유아수별 가구 (2018년)	06
<표 3-10> 다문화 가구 (2010, 2015, 2018년)	16
<표 3-11> 성별·연령별 다문화 가구원 수 (2010, 2015, 2018년)	1 6
<표 3-12> 다문화 가구 구성별 다문화 가구 및 가구원 (2017, 2018년)	1 6
<표 3-13>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2009~2018년)	2 6
<표 3-14> 15~54세 기혼여성의 비취업 및 경력단절 비율 (2011~2018년)	4 6
<표 3-15> 연령별 여성 경력단절 사유 (2018년)	4 6
<표 3-16> 연도별· 시도별 초등학교 학생 수 (1990~2018년)	7 6
<표 3-17> 교원 1인당 학생 수 (2016년)	8 6
<표 3-18> 학생 사교육비 총액 규모 (2014~2018년)	9 6
<표 3-19>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014~2018년)	0 7
<표 3-20> 고용률 (2007~2018년)	37

<표 3-21> 최근 10년간 노인빈곤율 현황 (2008~2017년)	5... 7
<표 3-22> 연령별 아동·청소년 자살률 (2009~2018년)	7... 7
<표 3-23> 10년간 노인 자살률 (2009~2018년)	9... 7
<표 3-24> 연도별 학대 신고 접수 건수 (2009~2018년)	0... 8
<표 3-25>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2009~2018년)	1... 8
<표 3-26>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인지율, 도움 정도 및 중요도 (2018년) · 8	
<표 3-27> 성별·연령별 비정규직 비율 (2009~2018년)	3... 8
<표 3-28> 최저주거기준 미충족률 (2010~2018년)	4... 8
<표 3-29> 연도별 임신·출산진료비 (2009~2018년, 연도별 보험)	5... 8
<표 3-30> 연령별 1인당 연간 진료비 크기별 실인원 및 진료비 현황 (2018년)	6... 8
<표 3-31> 연령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진료현황 (2018년)	6... 8
<표 3-32> 어린이집 시설수 및 아동수 현황 (2011~2018년)	8... 8
<표 3-33> 정원 규모별 국·공립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2011~2018년)	9... 8
<표 3-34>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근로시간별 취업자 수 (2008~2018년)	1... 9
<표 3-35> OECD 주요 국가의 취업자 연평균 근로시간 (2010~2018년)	2... 9
<표 3-36> 여성 전문·관리직 종사자 구성비 (2008~2018년)	3... 9
<표 3-37>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2009~2018년)	6... 9
<표 3-38> 기혼자의 성 및 가사노동 종류별 가사노동시간 (1999, 2004, 2009, 2014년)	8... 9
<표 3-39> 출산전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 수급자 수 (2009~2018년)	9... 9
<표 3-40>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고용유지율 (2009~2017년)	10... 1
<표 3-41> OECD 주요국가 노인 장기요양기관 현황 (2013~2017년)	60... 1
<표 3-42> 최저주거기준 미충족률 (2010~2018년)	70... 1
<표 4-1>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 정책 지표	4... 1
<표 4-2> ‘인구분야’ 영역 중요도-적합도 비교	6... 1
<표 4-3> ‘인구변화 적극대비’ 영역 전문가 제안지표	7... 1
<표 4-4>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의 정책 지표	8... 1
<표 4-5>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지표 중요도-적합도	9... 1
<표 4-6>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관련 전문가 제안지표	0... 2
<표 4-7>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의 정책 지표	1... 2
<표 4-8>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지표 중요도-적합도	3... 2
<표 4-9>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영역 전문가 제안지표	4... 2

<표 4-10>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의 정책 지표	421
<표 4-11>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지표 중요도-적합도	6·2 1
<표 4-12>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영역 전문가 제안지표	7·2 1
<표 4-13>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의 정책 지표	8·2 1
<표 4-14>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지표 중요도-적합도	9·2 1
<표 4-15>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영역 전문가 제안지표	9·2 1
<표 4-16> 청년세대 지원 영역 정책 지표	3
<표 4-17>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지표 중요도-적합도	2·3 1
<표 4-18>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영역 전문가 제안지표	3·3 1
<표 4-19>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의 정책 지표	51
<표 4-20>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지표 중요도-적합도	7·3 1
<표 4-21>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영역 전문가 제안지표	8·3 1
<표 4-22>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의 정책 지표	9·3 1
<표 4-23>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지표 중요도-적합도	10·4 1
<표 4-24>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관련 전문가 제안지표	14 1
<표 4-25>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의 정책 지표	24 1
<표 4-26>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표 중요도-적합도	3·4 1
<표 4-27>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영역 전문가 제안지표	3·4 1
<표 4-28>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돌봄환경 조성'의 정책 지표	44 1
<표 4-29>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돌봄환경 조성' 지표 중요도-적합도	6·4 1
<표 4-30>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돌봄환경 조성' 영역 전문가 제안지표	7·4 1
<표 4-31>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의 정책 지표	84 1
<표 4-32>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지표 중요도-적합도	8·4 1
<표 4-33>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영역 전문가 제안지표	9·4 1
<표 4-34> 인구분야 지표 개선안	5
<표 4-35> 저출산 분야 영역별 지표 개선안	81
<표 4-36> 저출산 분야 영역별 지표 개선안(계속)	95 1
<표 4-37> 저출산 분야 영역별 지표 개선안(계속)	161
<표 4-38> 저출산 분야 영역별 지표 개선안(계속)	261
<표 4-39> 저출산 분야 영역별 지표 개선안(계속)	361
<표 4-40> 고령사회 분야 지표 개선안	6

<표 4-41> 고령사회 분야 지표 개선안(계속)	761
<표 4-42> 고령사회 분야 지표 개선안(계속)	961
<표 4-43> 고령사회 분야 지표 개선안(계속)	071
<표 4-44> 고령사회 분야 지표 개선안(계속)	171

그림 목차

[그림 2-1] 인구정책의 작동 메커니즘	8· 2
[그림 3-1] 연도별 총인구(통계청) (1960~2067년)	2· 4
[그림 3-2] 연도별 총인구(주민등록인구, 행정안전부) (2008~2018년)	2· 4
[그림 3-3] 연도별 인구성장률 (1960~2067년)	2· 4
[그림 3-4] 연도별 인구피라미드	3· 4
[그림 3-5]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 (1960~2067년)	4· 4
[그림 3-6] 연도별 노령화지수	5· 4
[그림 3-7] 합계출산율(2008년~2018년)	5· 4
[그림 3-8]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6· 4
[그림 3-9]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구성비	7· 4
[그림 3-10] 초혼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특성별 자녀 출산 현황 (2017년)	9· 4
[그림 3-11] 초혼 신혼부부의 아내 연령별, 주택소유여부별 자녀 출산 현황 (2017년)	9· 4
[그림 3-12] 초혼 신혼부부의 소득구간별 평균 출생아 수 (2016~2017년)	0· 5
[그림 3-13] 사망률 (2010~2018년)	0· 5
[그림 3-14] 연령별 사망률 (2010~2018년)	1· 5
[그림 3-15] 사망원인별 연령 표준화 사망률	2· 5
[그림 3-16] 건강수명 추이 (2012~2018년)	4· 5
[그림 3-17] 총 혼인건수와 조혼인율 추이 (1970~2018년)	5· 5
[그림 3-18]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1970~2018년)	7· 5
[그림 3-19] 성별 평균이혼연령 (1998, 2003, 2008, 2013, 2018년)	7· 5
[그림 3-20] 성별·연령별 1인 가구 비율 (2018년)	9· 5
[그림 3-21] 여성 임금 비율 (2009~2018년)	3· 6
[그림 3-22]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 격차 (2017년)	3· 6
[그림 3-23] 15~54세 기혼여성의 비취업 및 경력단절 비율 (2011~2018년)	5· 6
[그림 3-24] 연령별 여성 경력단절 사유 (2018년)	5· 6

[그림 3-25]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1990~2018년)	6
[그림 3-26]	교원 1인당 학생 수 (2010~2018년)	8
[그림 3-27]	학생 사교육비 총액 규모 (2007~2018년)	0
[그림 3-28]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2007~2018년)	0
[그림 3-29]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2013~2018년)	1
[그림 3-30]	연도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2007~2018년)	2
[그림 3-3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2007~2018년)	2
[그림 3-32]	연도별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2007~2018년)	3
[그림 3-33]	전체 고용률 및 청년 고용률 (2007~2018년)	4
[그림 3-34]	성별 고용률 (2007~2018년)	4
[그림 3-35]	노인빈곤율 추이 (2008~2017년)	5
[그림 3-36]	OECD 주요국가 노인빈곤율 (최근 년도)	6
[그림 3-37]	OECD 주요 국가의 지니계수 (2016, 2017년)	6
[그림 3-38]	성별 10대 자살률 (2009~2018년)	8
[그림 3-39]	연도별 학대 신고 접수 건수 (2009~2018년)	0
[그림 3-40]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2009~2018년)	1
[그림 3-41]	연도별 전체 비정규직 비율 및 청년 비정규직 비율 (2009~2018년)	4
[그림 3-42]	어린이집 유형별 시설 및 아동수 (2018년)	7
[그림 3-43]	전체 및 성별 취업자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08~2018년)	1
[그림 3-44]	OECD 주요 국가의 취업자 연평균 근로시간 (2018년)	2
[그림 3-45]	여성 전문·관리직 종사자 구성비 (2008~2018년)	3
[그림 3-46]	성별 저임금근로자비율 (2008~2018년)	4
[그림 3-47]	OECD 저임금근로자 비율 (2017년)	5
[그림 3-48]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2018년)	6
[그림 3-49]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국제비교 (2018년)	7
[그림 3-50]	기혼자의 성별 가사노동시간 (1999, 2004, 2009, 2014년)	8
[그림 3-51]	출산전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 수급자 수 (2009~2018년)	0
[그림 3-52]	성별 육아휴직자 수 현황 및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2009~2018년)	0
[그림 3-53]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고용유지율 (2009~2017년)	1
[그림 3-54]	연도별 노인진료비 및 구성비 (2005~2018년)	2
[그림 3-55]	연도별 노인 1인당 진료비 및 노인인구비율 (2005~2018년)	3

[그림 3-56] 노인장기요양 시설기관 보호율 (2000~2017년)	4·0 1
[그림 3-57] 노인장기요양 재가기관 보호율 (2000~2017년)	4·0 1
[그림 3-58] 노인 장기요양기관 현황 (2010~2018년)	50 1
[그림 3-59] OECD 주요국가 노인 장기요양기관 현황 (2013~2017년)	6·0 1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20년간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로 다양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재정을 투입해왔으나 그 효과는 물론 각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및 이해,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례로 2018년 전국 출산력 조사에서는 미혼 남녀의 30% 이상이 결혼 및 출산, 양육지원 정책에 대해 여전히 모른다고 응답하였다(이소영 외, 2018).¹⁾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정책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해도와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목표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다시 말해 인구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정확한 실태 진단과 그에 맞는 시의성 있는 인구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정책 목표 달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취약했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즉 인구정책 관련 통계자료(통계지표)들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활용 가능한 형태의 자료로 가공하는 작업(인구정책통계집 발행)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기존 통계자료가 지닌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여,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수립과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자료(지표)의 품질 개선을 실시하고자 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도 제고, 더 나아가 정책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서는 그 동안 추진해왔던 실적 등의 수치들을 그림, 표 등을 이용해 알기 쉽게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고, 또 부처별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통계)들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책 평가 혹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위해 필요한 핵심 자료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인구정책 관련 통계 현황을 분석하고 그

1) 결혼 및 출산, 양육지원 정책 중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제도의 인지도를 제외하였음.

래프와 그림 등을 활용해 국내 인구정책 관련 중요 정보(실태와 추세)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인구정책통계집을 발행하는 것이다. 인구정책통계집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현실에 입각한 정책입안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기존 통계지표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시에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는 통계지표를 제언하여 인구정책 관련 통계의 품질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단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안 도출, 신규 지표 제안을 개괄적으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데이터 산출 방법 등에 대한 기술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 놓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인구정책 관련 통계지표 개발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검토, 해외 사례연구, 국내 인구정책 관련 통계자료 분석, 전문가 조사 등의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에 먼저 문헌검토를 통해 인구정책 통계의 범위를 설정한다.

이어서 해외 사례연구에서는 EU와 OECD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 통계 지표들을 살펴보고 각 구성영역별 핵심가치를 측정하는 하위 통계지표를 정리한다. 이를 통해 국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수립 및 효과 분석, 더 나아가 국가 간 비교 연구의 근거자료로 추출해야하는 통계지표들의 특징을 살펴본다.

국내 인구정책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인구정책 등의 추진 실적(실태)과 변화, 장래 추세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인구정책 통계집을 발행한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단순한 수치 데이터를 복수의 데이터끼리 조합하고 그 관계를 그림이나 표로 알기 쉽게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각 영역별 정책 현황과 정책 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해 각 영역별 정책지표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고, 신규 개발이 필요한 지표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제언한다.

제 2 장

인구정책 통계 정의 및 현황

제1절 인구정책 정의와 범위

제2절 인구정책 통계

제3절 인구정책 통계 해외사례

제4절 소결

2

인구정책 통계 정의 및 현황 <

<

제1절 인구정책 정의와 범위

인구정책은 출생, 사망, 이동과 같이 인구변동의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인구정책은 인구학적 변화의 불균형을 예방하거나 연기할 목적에서, 또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목적에서 공적 기관이 추진하는 직·간접적 행동으로도 설명된다(박종서 외, 2015). 이러한 인구정책을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국가가 결혼 또는 출산을 증가와 같이 인구변동에 대한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하는 정책들을 말하며,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가족정책, 아동복지, 고령사회정책과 같이 인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정책들을 포함되게 된다(岡崎陽一, 1995). 최근의 인구정책은 특히 유럽 선진국일 수록 협의의 개념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실행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인구정책을 출생, 사망이라는 인구변동에의 국가적 개입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국민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그들이 출산과 육아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정책,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 산물로서 해석한다(岡崎陽一, 1995). 이러한 인구정책의 추진은 자연스럽게 출생, 사망 등의 인구 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인구정책은 인구조정정책과 인구대응정책으로 나뉜다(권태환, 김두섭, 2002). 인구조정정책은 1960년대에 추진된 가족계획정책과 같이 인구의 양적 통제를 목표로 하는 인구억제정책, 질병률과 사망률 감소 등 모자보건의 질과 인구의 자질 향상을 목표로 실시된 인구자질향상정책,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거나 재배치하기 위한 인구 분산정책으로 구성된다(권태환, 김두섭, 2002). 인구대응정책은 인구의 양적규제 및 질적 개선에 뒷받침되는 각종 경제·사회개발 정책들을 말하며, 인구조정정책과 인구대응정책은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박종서 외, 2015).

제2절 인구정책 통계

인구통계는 인구집단의 크기, 구조, 분포, 변동 및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에 관한 현상을 나타내는 통계를 말하며 인구현상과 인구문제를 다루는 기본 수단이 된다(김태현, 전광희, 이윤석, 조영태, 2011). 또한 인구정책 통계는 인구정책의 범위에 들어 있는, 인구정책과 연관되는 통계를 지칭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대표하는 것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다(박종서 외, 2015, 김종훈, 201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부 정책들과 관련된 통계지표(정책지표)들을 인구정책 관련 통계지표로 정의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정책 관련 통계지표를 전통적인 사망, 출생, 이동의 개념에서 보다 확장하여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지표들을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일 것이다. 인구정책의 작동 메커니즘은 인구, 사회, 정책이라는 세 영역의 상호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박종서 외, 2015).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년부터 시행)은 3차 기본계획(수정)(2016~2020년)이 시행 중이다. 기존의 3차 기본계획이 수정되고,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진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으면 기본계획의 정책목표가 국가 주도적 인구성장전략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김종훈, 2018). 3차 기본계획의 최종 정책목표는 합계출산율과 노인빈곤율인데(김종훈, 2018), 이는 국가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 출산 등 인구변화에 직접적으로 개입, 간섭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욕구(결혼과 출산 등은 개인의 선택적 권리)와는 거리가 있다. 정책수요자인 국민은 국가주도적 인구정책 그 자체를 반대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일례로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간섭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자칫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생각하게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비판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수용해 현재 3차 기본계획(수정)의 정책목표는 삶의 질 향상, 성 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로 설정되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의 인구정책은 기존의 3차 기본계획 내 194개 과제 중에서 우선 집중해서 추진해야 하는 역량집중과제 35개와 계획관리과제 65개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94개 과제는 부처자율과제로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다.

1. 저출산 분야: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저출산 분야는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2040세대 안정적 삶의 기반’이라는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야는 역량집중과제 18개, 계획관리 과제 29개, 부처자율과제 42개로 구분되었다.

<표 2-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계획 중 저출산 대책

영역	중영역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의료비 제로화
	안전한 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동수당 지급
	다자녀 지원 확대
	출산 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출산 친화적 국민연금 및 세제 개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생애 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휴식있는 삶을 위한 시간권 보장
	남성 육아참여 확대
	일·생활 균형 환경조성
	육아휴직 개편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보육의 공공성 강화
	유치원 공공성 강화
	온종일 돌봄
	가정 내 돌봄 지원
	지역 협력체계 구축
	아동이 안전한 환경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모든 아동 차별 없는 보호 여건 마련
	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2040세대 안정적 삶의 기반	안정된 일자리
	차별없는 일자리
	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교육 혁신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2019).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에서 재구성.

2. 고령사회 분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

고령사회 분야는 ‘노후소득보장 체계 내실화’, ‘신중년, 새로운 인생출발 지원’,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돌봄환경 조성’,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7개의 역량집중과제, 31개의 계획관리과제, 49개의 부처자율과제로 되어 있다.

<표 2-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계획 중 고령사회 대책

영역	중영역
노후소득보장 체계 내실화	다층 노후보장소득체계 내실화
	공적연금 역할 강화
	사적연금 실효성 제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
신중년, 새로운 인생출발 지원	인생 3모작 기반 구축을 통한 신중년 일자리 기회 확대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는 신중년 새출발 지원 인프라 확충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80만 개 창출·지원
	노인일자리 인프라 확충
	고령자 여가 및 교육 기회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돌봄환경 조성	의료·건강관리
	돌봄·요양
	주거·환경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2019).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에서 재구성.

3. 인구 분야: 인구구조 변화 대비

인구 분야는 사회시스템 및 지역, 인구변화 대응기반 강화 및 인식개선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량집중과제 0개, 계획관리과제 5개, 부처자율과제 3개로 되어 있다.

<표 2-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계획 중 인구구조 변화 대비 대책

영역	중영역
사회시스템 및 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 대비가 필요한 분야별 대책 마련
	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인구대응 사업 활성화
인구변화 대응기반 강화 및 인식 개선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2019).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에서 재구성.

제3절 인구정책 통계 해외사례

이 절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현황 제시에 활용되고 있거나 또 최근에 새롭게 제안된 지표들을 OECD, EU 데이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OECD 등 국제기구의 통계들은 회원국 간 상호 논의를 통해 수집 가능한 통계항목(지표)들을 결정하고 또 생산방법을 논의하므로 다른 통계지표보다 국가 간 비교의 활용성이 높다(장영식 외, 2011). 이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국내 통계지표 점검 및 개발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OECD의 사회지표 체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²⁾. OECD는 2001년부터 발간하는 ‘Society at a Glance’에서 사회지표를 사회환경(Social Context), 사회수준(Social Status) 및 사회반응(Social Response)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사회환경지표들은 사회정책이 전개된 배경 내지 문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표로 어떠한 사회정책이 수행되는 여건의 차이에 대한 감을 제공한다. 사회수준지표는 사회의 모습, 특히 사회정책이 대응의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있는 사회의 주요 관심사와 관련된 현황을 기술하고 있는 지표이며, 사회반응지표는 사회 또는 정부가 사회정책 등을 통해 사회수준지표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사회환경지표로 국민소득(National Income), 출산율(Fertility Rates), 노인 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es), 외국인(Foreigners and Foreign-born Population), 망명·난민(Asylum Seekers and Refugees), 이혼율(Divorce Rates)

2) OECD 사회 지표 관련 내용은 OECD(2009)의 내용을 요약, 발췌하였음

및 한부모가정(Lone-parent Families) 지표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소득수준 지표는 보건통계, 사회보장통계 등 여타 사회지표의 실질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표인 관계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제외하면 대체로 장기적 인구 추세나 가구구성 추이 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사회수준지표와 사회반응지표는 사회정책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로서, 사회수준지표는 사회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달성도라는 측면을 관찰하는 것이고, 사회반응지표는 사회정책의 규모와 성격이라는 또 다른 측면을 관찰한다. 사회반응지표와 사회수준지표를 비교하게 되면 사회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

1. OECD의 가족 및 고령사회 대응지표

가. OECD 가족 지표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으로 출산율 상승에 필요한 가족지출 규모 등을 파악(국제 비교)하기 위해 OECD family database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OECD 데이터는 가족정책과 그 성과를 비교 가능한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Adema et al, 2009). 특히 가족정책은 가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가족정책에 투입되는 지출은 가족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가족 내 출생, 사망, 이동, 가족규모 등 인구구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포괄적 의미에서의 인구정책 통계에 해당한다.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족구조, 가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가족과 아동에 관한 정책, 아동에 대한 성과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4> OECD Family Data 지표

대영역	측정지표
A. 가족구조	
가족과 아동	가족 규모와 세대원
	아동의 부모 결혼상황
	아동의 동거자
	아동의 주거 상황
출산지표	출산율
	이상과 현실의 아동 수
	출생 시 모친연령과 연령별 출산율
	기혼 외 출산율
	무자녀 비율
기혼, 파트너쉽 지위	혼인율과 이혼율
	가족해체와 아동
	가족 간 폭력
B. 가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가족, 아동, 종사자 지위	부모의 지위별 아동 수
	부모의 취업 비율
	기혼 속성별 모친 취업비율
	라이프코스과 취업
	남녀 임금 격차와 교육별 수입
	고용에서의 남녀차이비율
취업시간과 케어시간	주당 남녀노동시간
	유자녀부부의 취업유형과 취업시간 분포
	한부모가정의 취업유형과 취업시간 분포
	가족친화적 직장 실천
	일, 케어, 가사에 쓰는 시간
	통근시간
	일생활균형에 관한 주관적 만족감
C. 가족과 아동에 관한 정책	
아동과 가족에 관한 일반정책	가족정책 지출
	공교육 지출
	가족 현금급여 지출
	세제의 중립성
	양육비에 관한 제도
	아동 연령별 가족정책 지출
	세대 간 연대
	성인연령
	아동양육
아동 관련 휴가	양친휴가의 주된 특징
	출산휴직 급여의 이용
	취업한 모 이외의 휴직 사용
	양친의 휴가 대체율
	출생 전후의 휴업권의 추이

14 인구정책 관련 통계 지표 품질 개선 연구

대영역		측정지표
미취학아 보육과 교육		취업 전 보육교육에 대한 공적지출
		취학 전 보육교육에의 참가율
		비공식 보육 지출
		아동양육비용
취학전 보육교육의 유형화		취학 전 보육교육의 유형화
		취학 전 보육교육의 질
		방과후 보육
D. 아동에 대한 성과		
아동의 건강		영유아 사망률
		출생시 평균여명
		저체중아 출생률
		예방접종률
		모유 수유율
아동빈곤		당뇨병과 천식
		비만율
		흡연율
		장애율
		세대 유형별 격차와 소득
교육학력		아동 빈곤율
		물질적 박탈
		남녀별 교육성과와 풀타임 교육 기대연수
		대학전공의 남녀차
		10세 남녀별 학력
사회참가		15세 남녀별 학력
		니트율
		이민학생의 비율과 교육적 성과
		15-29세 봉사활동과 NGO 참가율
		10대 자살률

자료: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 재구성.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9. 10.26.인출.

나. OECD의 고령사회 대응 관련 지표

OECD database의 고령사회 대응 관련 지표는 크게 11개 분야, 89개 측정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회(Society) 23개, 교육(Education) 15개, 보건(Health) 12개, 일자리(Jobs) 11개, 정부(Government) 8개, 금융(Finance) 6개, 경제(Economy) 4개, 개발(Development) 4개, 에너지(Energy) 1개, 환경(Environment) 1개, 혁신·기술(Innovation and Technology) 1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5> OECD database의 고령사회 대응 지표

분야	측정지표
A. 사회 (Society) 23개 측정지표	
1. 인구통계학 (Demography)	노동 연령 인구(Working age population)
	65세 이상 노인 인구(Elderly population)
	총 출산율 (Fertility rates)
	15세 이상 청소년 인구 (Young population)
2. 이주 (Migration)	외국인 고용률(Foreign-born employment)
	외국인 노동시장 참여율(Foreign-born participation rates)
	외국인 실업률(Foreign-born unemployment)
	자국민 고용률(Native-born employment)
	자국민 노동시장 참여율(Native-born participation rates)
	자국민 실업률(Native-born unemployment)
3. 사회보호 (Social protection)	연금 지출(Pension spending)
	가족수당 지출(Family benefits public spending)
	공적 실업급여 지출(Public unemployment spending)
	공적 이전 소득(Social benefits to households)
	공적 지출(Social spending)
	무능력에 대한 공적 지출(Public spending on incapacity)
	노동시장에 대한 공적 지출 (Public spending on labour markets)
4. 불평등 (Inequality)	사회제도적 성차별(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조기 결혼, 이혼 후 부모 권한, 법적 결혼 연령 등 가족 차별화 코드 [Discriminatory family code(early marriage, parental authority after divorce, legal age of marriage)]
	가처분소득 불평등(Income inequality)
	빈곤율(Poverty rate)
	빈곤갭(Poverty gap)
	여성 의원·관료 비율(Women in politics)

16 인구정책 관련 통계 지표 품질 개선 연구

분야	측정지표
B. 교육 (Education) 15개 측정지표	
1. 교원 (Teachers)	교원 수(Teaching staff)
	교원 연령(Teachers by age)
	교원의 총급여(Teachers' salaries)
	여성 교원(Women teachers)
	교원 당 학생 비율(Students per teaching staff)
	교육 시간(Teaching hours)
	교육 원칙(School principals)
2. 학생 (Students)	유아교육·보육 등록률 (Enrolment rat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중등·고등교육 등록률 (Enrolment rate in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연구 분야별 고등교육 졸업생 분포 (Tertiary graduates by field)
3. 교육자원 (Education resources)	공교육비 지출 (Public spending on education)
4. 교육성과 (Education attainment)	25-64세 성인교육 수준(Adult education level)
	고등교육 인구(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
	PISA 읽기 점수(Reading performance (PISA: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5. 청년 노동시장 (Youth and the labour market)	청년 NEET 비율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C. 보건 (Health) 12개 측정지표	
1. 보건상태 (Health status)	영아 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s)
	암 사망률(Deaths from cancer)
	조기 사망률(Potential years of life lost)
	자살률(Suicide rates)
	65세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65)
	출생시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2. 보건위험 (Health risks)	알코올 소비량(Alcohol consumption)
	상시 흡연자 수(Daily smokers)
	과체중·비만인구(Overweight or obese population)
3. 보건처치 (Health care use)	아동 백신 접종률(Child vaccination rates)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Influenza vaccination rates)
4. 보건자원 (Health resources)	간호 졸업생 수(Nursing graduates)
D. 일자리 (Jobs) 11개 측정지표	
1. 고용 (Employment)	고용률(Employment rate)
	연령별 고용률(Employment rate by age group)
	학력별 고용률(Employment by education level)
	노동인구 노동시장 참여율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시간제 고용률(주 30시간 미만) (Part-time employment rate)
	임시직 근로자 비율(Temporary employment)
	자영자 비율(Self-employment rate)

분야		측정지표
	2. 실업 (Unemployment)	실업자, 구직자, 근로가능자 등을 포함한 실업률 (Harmonized unemployment rate(HUR))
	3. 급여·임금 지표 (Benefits and wages)	보육센터이용·보호고용에 따른 재무적 불이익 (Financial disincentive to enter employment with child-care costs) 순보육비 (Net child-care costs)
	4. 임금 (Earnings and wages)	고용인 보상(임금 및 기타 인건비) (Employee compensation by activity)
E. 정부 (Government) 8개 측정지표		
1. 정부 일반회계 (General government)		중앙정부 지출(Central government spending) 정부 일반회계 지출(General government spending) 정부 일반회계 재무자산 (General government financial wealth) 정부 일반회계 최종 지출 (General government spending by destination) 정부공여 생산비용 (Government production costs)
	2. 세금 (Tax)	세수(Tax revenue) 급여세(근로소득세)(Tax on payroll) 사회보장 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F. 재무 (Finance) 6개 측정지표		
1. 연금 (Pensions)		연기금 자산(Pension funds' assets) 총 연금자산(Gross pension wealth) 연금의 퇴직 전 총소득 대체율 (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s) 순 연금자산(Net pension wealth) 연금의 퇴직 전 순소득 대체율 (Net pension replacement rates) 개인연금 자산(Private pension assets)
G. 경제 (Economy) 4개 측정지표		
1. 가계계정 (Household accounts)		가처분소득(Household disposable income) 가계 저축률(Household savings forecast)
	2. 생산성 (Productivity)	노동시간 당 노동 보상 (Labour compensation per hour worked)
	3. 주가 지수 (Prices)	주가 지수(Share prices)
H. 개발 (Development) 4개 측정지표		
1. 개발자원 유출 (Development resource flows)		민간 자발적 기관·비정부기구 보조금 (Grants by private agencies and NGOs) 기타 공식적 유출(Other official flows(OOF))
	2. 공식개발지원: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식 개발 순지원금(Net ODA) 국가 지원 프로그램(Country Programmable Aid (CPA))

분야	측정지표
I. 에너지 (Energy) 4개 측정지표	
1. 교통 (Transport)	교통인프라 투자(Infrastructure investment) 교통인프라 유지관리(Infrastructure maintenance)
2. 에너지 (Energy)	원유 수입 가격(Crude oil import prices) 1차 에너지 공급(Primary energy supply)
J. 환경 (Environment) 1개 측정지표	
1. 대기·기후 (Air and climate)	온실가스 배출량(Air and Green House Gas emissions)
K. 혁신·기술 (Innovation and Technology) 1개 측정지표	
1. 기업가 (Entrepreneurship)	고용인 수(Employees by business size)
합계	[89 측정지표]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PISA 국제학력조사 등에서 2019. 11.26.인출.

2. 유럽연합(EU)의 인구 및 사회여건, 고령사회 대응 지표

가. Eurostat 통계

Eurostat는 EU(유럽연합)의 통계를 관리하는 통계국으로 유럽연합 내 정책입안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고품질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Eurostat는 정책입안자뿐 아니라 시민, 연구자 등이 접근하기 쉽도록 웹 사이트를 공개 운영 중이며, 동시에 통계의 변화와 흐름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각 통계의 현황 제시, 더 나아가 그래프와 표, 각종 해설과 통계작성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Eurostat에서 제공하는 통계는 크게 일반·지역별 통계(General and regional statistics), 경제와 재정(Economy and finance), 인구와 사회여건(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 산업 및 교역과 서비스(Industry, trade and services), 농업과 어업(Agriculture and fisheries), 국제통상(International trade), 운송(Transport), 환경과 에너지(Environment and energy), 과학, 기술과 디지털 사회(Science, technology, digital society)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들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인구 관련 통계는 인구와 사회여건(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s)이다. 인구통계는 Eurostat 기준으로 ‘Population: demog-

raphy, population projections, census, asylum & migration' 부분이고, 범위를 확장하면 건강통계를 포함할 수 있지만(박종서 외, 2015), 본 연구는 인구정책 관련 통계의 범위를 출생, 사망, 이동의 개념에서 보다 확장해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통계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구 및 사회여건 영역의 15개 통계와 각 세부 지표들을 제시한다.

<표 2-6> Eurostat: Population and Social Condition

영역		주요 부분
Population (Demography, Population, Projections, Census, Asylum and Migration)	Population (Demography, Migration and Projections)	Population data, Birth and fertility data, Death and life expectancy data, Migration and citizenship data, Marriages and divorces data, Population projections data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1 Census Hub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Census – time series of selected indicators, Census 2011, Census 2001 – national level, Census 2001 – regional level, Census 1990/91 round – national level)
	Asylum and managed migration	Asylum and first time asylum applicants, Persons subject of asylum applications pending at the end of the month, First instance decisions on asylum applications by type of decision, Final decisions on asylum applications, Asylum applicants considered to be unaccompanied minors, Resettled persons, First permits by reason, All valid permits by reason on 31 December of each year
Health		Health status and determinants, Health care, Disability, Causes of death, Health and safety at work
Education and training		Education, Lifelong learning,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and outcomes of education, Education and training, Particip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Learning mobility, Education personnel, Education finance, Education and training outcomes, Languages, Education-administrative data until 2012, Past series
Labour market		Employment and unemployment (Labor Force Survey, LFS), Job vacancies, Earnings, Labour costs, Labour market policy
Income, social inclusion and living conditions		People at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 (Europe 2020 strategy), Income distribution and monetary poverty, Living conditions, Material deprivati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on social protection, Total expenditure on social protection per head of population. ECU/EUR, Expenditure on social protection per inhabitant, Total expenditure on social protection by type, Total expenditure on social benefits, Total expenditure on administration costs, Other expenditure on social protection, Social benefits by function, Social benefits per head of population by function, Expenditure on pensions, Expenditure on care for elderly, Social protection receipts by type

영역	주요 부분
Household Budget Surveys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Consumption expenditure of private households,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Time use survey – collection round 2010, 2015
Youth	Youth population, Youth education and training, Youth employment, Youth health, Youth social inclusion, Youth – culture and creativity, Youth participation, Youth volunteering, Youth in the digital world
Culture	Cultural employment, Cultural participation, Trade in cultural goods, private, Private households expenditure on culture, Public expenditure on culture, recreation and religion
Sport	Employment in sport, Trade in sport goods, private households expenditure on sport
Quality of life indicators	Material living conditions, Productive or other main activity, Health, Education, Leisure and social interactions, Economic security and physical safety, Governance and basic rights, Natural and living environment, Overall experience of life
Crime and criminal justice	Political and social importance of crime, Public concern about crime
Equality (age and gender)	Age equality (Education, Labour market, Earnings and social inclusion, Health, Digital economy and society) Gender equality (Education, Labour market, Earnings and social inclusion, Childcare, Health, Digital economy and society)

자료: eurostat. Database.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statistics-by-theme>에서 2019.12.31. 인출.

나. Eurostat 고령화 대응지표(Ageing Europe, 2019 edition)

2018년 초 EU-28개국에는 전체 인구의 19.7%를 차지하는 1,011만 명의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고 있다(Eurostat, 2019: 8). 향후 30년 동안 EU의 노인 수는 상승 경로를 따라갈 것으로 예측되며, 2050년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28.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Eurostat, 2019). 유럽 전역에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인구 고령화와 함께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 지속 여부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즉 “사람들이 경제나 사회 그 어느 곳에서든 일정 부분 기여하

도록 하고,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책입안자들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위기 등의 문제를 기회로 전환하여 노인의 근로 생활을 연장하고, 적절한 사회보호와 필요한 경우 보충연금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Eurostat, 2019).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3년마다 경제 및 예산 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통화적 관점(monetary perspective)에서 고령화를 분석하는데, 2018년에 최신 버전이 출시되었다. 이 보고서는 Eurostat 인구추계를 기반으로 한 연령 관련 지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고령화로 인한 공공재정(예산)에의 영향 관계 등을 파악한다. 또 유럽의 고령화, EU 노인들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인구체계(제1장), 노인들의 주거 및 생활 조건(제2장), 건강 및 장애(제3장), 근로에서 은퇴로의 전환(제4장), 연금, 소득 및 지출(제5장), 그리고 노인들의 사회생활과 의견(제6장)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Eurostat(Ageing Europe, 2019 edition)의 고령화(Ageing) 대응지표(Indicator)를 정리하면 크게 6개 분야, 101개 측정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추계(Population Development) 9개, 주택·주거환경(Housing and Living condition) 9개, 보건·장애(Health and disability) 20개, 고용·은퇴(Working and moving into retirement) 18개, 연금·소득·지출(Pension, income and expenditure) 21개, 사회생활·견해(Social life and opinion) 24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7> Eurostat: 고령화(Ageing) 대응지표 체계

분야	측정지표
A. 인구추계 (Population Development)	
1. 인구추계 (Population overview)	인구추계 (Population development)
	연령대별, 55세 이상 고령인구 (People aged ≥ 55 years, by age class)
	인구 피라미드 (Population pyramids)
2. 성별 차이 (Differences between the sexes)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성별 불균형 (Gender imbalance for People aged ≥ 65 years)
3. 고령화 의존성 (Increasingly old and with growing dependency)	인구 중위 연령 (Median age of the population)
	고령인구 부양 비율 (Old-age dependency ratio)
	성별, 85세 이상 고령인구 (People aged ≥ 85 years, by sex)
4. 글로벌 인구추계 (Global development)	연령대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People aged ≥ 65 years, by age class)
5. 거주지 (where do they live?)	농촌·도시거주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People aged ≥ 65 years, by urban-rural typology)
B. 주택·주거환경 (Housing and Living condition)	
1. 가구구성 (Household composition)	성별·동거인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People aged ≥ 65 years living in institutional household, by sex)
2. 적정 공간 이상 주택 (underoccupied dwellings)	가구원 수의 적정 공간보다도 더 많은 공간을 가진 주택 소유자 비율 (People living in under-occupied dwelling, by age class)
3. 주택 경제성 (Housing affordability)	주택점유형태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People aged ≥ 65 years, by tenure status)
	연령대별, 가처분소득 40% 이상의 주택비용 부담률 (Housing cost overburden rate, by age class)
4. 물질적 박탈 (Material deprivation)	성별·연령대별, 9 가지 물질적 박탈 중 4 가지 이상의 심각한 물질적 박탈 비율 (Severe material deprivation rate, by sex and age class)
	가구유형별, 모기지론,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채납 가구 (Households in arrears, by type of household)
5. 주거환경 (Living conditions)	가구유형별, 적정 난방유지 불가능한 가구 (Households unable to keep their home adequately warm, by type of household)
	연령대별, 열악한 주택 거주자 (People living in a dwelling with a leak, damp or rot, by age class)
	가구유형별, 열악한 주거환경 가구 (Households facing noise, environmental problems or crime in their local area, by type of household)

분야	측정지표
C. 보건·장애 (Health and disability)	
1. 기대수명·건강한 삶 유지기간 (Life expectancy and healthy life years)	성별, 65세 고령인구의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of people aged 65, by sex)
	성별 65세 고령인구의 기대수명·건강유지기간 (Life, expectancy and healthy life years of people aged 65 years, by sex,)
2. 자기평가식 건강상태 (Self-perceived health)	연령대별, 자기평가식 건강상태 (Self-perceived health, by age class)
	소득분위별, 65세 노인인구의 자기평가식 건강상태 (Self-perceived health among people aged ≥65 years, by income quintile)
3. 건강한 생활습관 (Healthy lifestyles)	매일 신선한 과일·채소 섭취인구 비율 (People who ate fresh fruit and vegetables daily)
	지난 1주간 1회 이상 음주자 비율 (People who consumed alcohol at least once a week)
	상시 흡연자 비율 (People who smoked tobacco products on a daily basis)
	연령대별, 비만인구 (Obese people(BMI ≥30 kg/m ²), by age class)
4. 건강 제약 (Health limitations)	연령대별, 자기평가식 신체·감각기능 제약 인구비율 (Self-reported physical and sensory functional limitations, by age class: Seeing, Hearing, Walking)
	연령대별, 자기평가식 장기질환·건강문제자 비율 (Self-reported long-standing illnesses or health problems, by age class)
	성별, 75세 이상 고령인구의 케어활동가구의 자기평가식 난제들 (Self-reported severe difficulties for household and personal care activities among people aged ≥75 years, by sex)
	성별, 자기평가식 홈케어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 (Self-reported use of homecare services among people aged ≥ 75 years, by sex)
5. 의사 상담·의료·보건 서비스 이용 (Use of doctors, medicines and health services)	연령대별, 의료상담자 (People having consulted a doctor, by age class)
	연령대별, 자기평가식 처방전 약제 이용자 (Self-reported use of prescribed medicines, by age class)
	연령대별, 자기평가식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자 (Self-reported vaccination against influenza, by age class)
	성별·연령대별, 자기평가식 만성 질환자 (Self-reported chronic diseases, by sex and age class)

분야	측정지표
	연령대별, 병원 퇴원 횟수 (Number of hospital discharges, by age class)
	성별·연령대별, 의료진단에 대한 불만 이유 [Self-reported reason for unmet needs(waiting list, too expensive, too fat to travel) for medical examination, by sex and age class]
6. 사망 원인 (Causes of death)	성별·연령대별, 고령인구의 사망 원인 (Main causes of death among older people, by sex and age class)
	성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사망 원인을 (Standardised death rates for the main causes of death among people aged ≥ 65 years, by sex)
D. 고용·은퇴 (Working and moving into retirement)	
1. 고용 (Employment)	연령대별, 고령인구 고용률 (Older persons in employment, by age class)
	성별·연령대별, 고용률 (Employment rate, by sex and age class)
	국적별·연령대별, 인구·고용인 추계 (Developments for the population and employed persons, by citizenship and age class)
	성별·연령대별, 시간제 고용률 (Part-time employment, by sex and age class)
	성별·연령대별, 자영자 비율 (Self-employment, by age class)
	성별·연령대별, 재택근로자 비율 (Employed people usually working at home, by sex and age class)
2. 일자리 (Common jobs)	65세 이상 경제활동고령인구 (Employment of people aged ≥ 65 years, by selected economic activity)
	연령대별·활동분야별, 65세 이상 경제활동고령인구 (Number of persons employed aged ≥ 65 years, by age class and selected economic activity)
	55-74세 고령인구 고용률 (People aged 55-74 years in employment)
3. 근로시간 (Duration of works)	성별·연령대별, 주간 근무시간 (Usual weekly hours in main job, by sex and age class)
	성별, 직장생활 기간 (Duration of working life, by sex)
4. 근로이슈에 대한 견해 (Opinions of work-related issues)	성별·연령대별, 일자리 만족도 (Job satisfaction, by sex and age class)
	연령대별, 성역할·성차별에 대한 태도 (Attitudes concerning gender and work, by age class)
5. 근로사고 (Accidents at work)	연령대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무능력정도·기간 (Accidents at work, by duration and age class)
	연령대별·재해정도별, 업무재해자수 (Number of accidents at work, by type of accident and age class)

분야	측정지표
	class)
6. 은퇴 (Retirement)	성별, 실질·희망은퇴연령·연금수령연령 (Statutory pension ages and average ages up to which people want to work, by sex)
	50-60세 경제활동 고령인구의 근로 이유 (Main reason to continue working among people aged 50-69 years)
	연령대별, 마지막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유 (Main reason for people not in employment leaving their last job, by age class)
E. 연금·소득·지출 분야 (Pension, income and expenditure)	
1. 연금 (Pensions)	연령대별, 소득이전계정 (Age profile of transfer accounts)
	고령·유족연금 수령자 비율 (Beneficiaries of an old-age and/or survivors pension)
	성별, 노령·유족연금 수령자 비율 (Beneficiaries of an old-age and/or survivors pension, by sex)
	연금급여 (Pension benefits)
	사회보호지출·GDP 대비 노령·장애·유족 연금급여 비율 (Old-age, disability and survivors benefits)
	연령대별, 노년기 노후소득에 대한 우려도(10점 척도) (Concern over not having sufficient income in old-age, by age class)
	정부의 연금지급능력에 대한 시민의 견해 (Citizens' views concerning the ability of governments to pay for pensions)
	퇴직연령 연장에 대한 시민의 견해 (Citizens' views concerning the need to increase the retirement age)
2. 소득 (Income)	연령대별, 균등화 순 중위소득 (Median equivalised net income, by age class)
	성별·연령대별, 균등화 순 중위소득 (Median equivalised net income, by sex and age class)
	총 소득대체율 (Aggregate replacement ratio)
	연령대별, 균등화 순 중위소득 150% 이상 고소득자 비율 (People with an income $\geq 150\%$ of median equivalised net income, by age class)
3. 빈곤위험 (Risk of poverty)	성별·연령대별, 55세 이상 고령인구 빈곤율 (At-risk-of-poverty rate among people aged ≥ 55 years, by sex and age class)
	연령대별, 공적이전의 빈곤 감소효과 (Reduction in the at-risk-of-poverty rate as a result of social transfers, by age class)
	연령대별, 근로빈곤자 비율 (In-work at-risk-of-poverty rate, by age class)

분야	측정지표
4. 자산부채 (Wealth and debt)	연령대별, 가구 순 중위자산 (Median net wealth of households, by age class)
	연령대별, 가구 총부채 (Households holding debt, by age class)
3. 지출 (Expenditure)	가구유형별, 평균 소비지출 (Mean consumption expenditure, by type of household)
	고소득노인 대비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상대적인 소비지출 비율 (Relative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with a reference person aged ≥ 60 years—relatively high levels of consumption for older people)
	가구유형별, 긴급 재정비용에 대처할 수 없는 가구 비율 (Households unable to face unexpected financial expenses, by type of household)
	성별·연령대별, 자신만을 위한 소비지출할 수 없는 5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People aged ≥ 55 years who cannot afford to spend a small amount of money on themselves each week, by sex and age group)

F. 사회생활·견해 분야 (Social life and opi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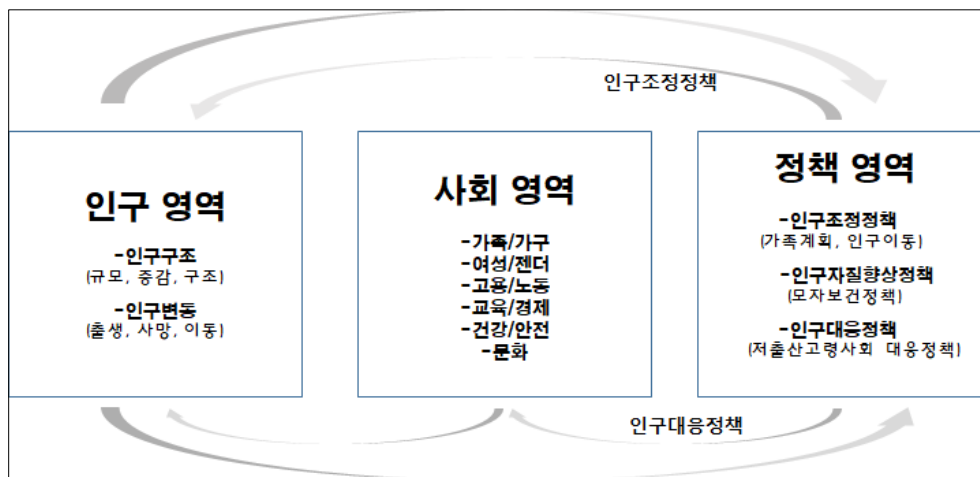
1. 신체활동 (Physical activity)	연령대별, 주 3시간 이상 외부 신체 활동한 50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People aged ≥ 50 years spending at least three hours per week on physical activity outside of work, by age class)
	연령대별, 문화·체육행사에 참여한 50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People aged ≥ 50 years participating in cultural and/or sporting events, by age class)
	연령대별, 예술 활동 행위자로 참여한 50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People aged ≥ 50 years practising artistic activities, by age class)
2. 교육·디지털사회 (Education and digital society)	연령대별, 교육·훈련 참여율 (Participation rate in education and training, by age class)
	연령대별,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고령인구 비율 (People never having used a computer, by age class)
	연령대별, 디지털 기술 비율 (Digital skills of people, by age class)
	연령대별, 인터넷 활동 가능자 비율 (Internet activities of people, by age class)
	연령대별, 인터넷 소통 활동 가능자 비율 (Internet communication activities of people, by age class)
	연령대별, 인터넷 구매자 비율 (Internet purchases in the last 12 months, by age class)
	연령대별, 사적 여행자 비율 (Participation in tourism for personal purposes, by age class)
	연령대별, 1박 이상 사적 여행 경비 지출자 비율 (Expenditure on tourist trips of at least one night for personal purposes, by age class)
	연령대별, 여행에 참여 못한 이유

분야	측정지표
	(Reasons for non-participation in tourism, by age class)
3. 자발적 활동·시민권 행사 (Voluntary activities and active citizenship)	자발적 활동·시민권 행사 참여 비율 (Participation in voluntary activities and active citizenship, by sex and age class)
	연령대별, 공식적인 자발적 활동·시민권 행사 참여 비율 (Participation in formal voluntary activities and active citizenship, by age class)
	성별·연령대별, 가족, 친척 및 친구와의 접촉 빈도 (Frequency of contacts with family, relatives or friends, by sex and age class)
	연령대별, 가족, 친척 및 친구와의 모임 빈도 (Frequency of getting together with family or relatives, by age class)
4. 지원망 (Support networks)	연령대별, 개인사를 상의할 사람이 없는 인구의 비율 (People without anyone to discuss personal matters with, by age class)
	연령대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인구의 비율 (People without anyone to ask for help, by age class)
	성별·연령대별, 비공식 홈케어 서비스 제공 인구 비율 (People providing informal homecare services, by sex and age class)
	연령대별, 주간 20시간 이상 비공식 홈케어 서비스 제공 인구 비율 (People providing at least 20 hours per week of informal homecare services, by age class)
	연령대별, 손주 돌봄자 비율 (People caring for grandchildren, by age class)
	연령대별, 고령 장애인·허약한 가족구성원·이웃·친구 돌봄자 비율 (People caring for elderly disabled or infirm family members, neighbours or friends, by age class)
5. 고령인구에 대한 견해 (Opinions of older people)	연령대별, 특정 공적이슈에 대한 견해 (Public opinion concerning a range of selected issues, by age class)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by age class)

4. 인구정책 통계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정책은 크게 국가가 인구조정정책이나 인구자질향상정책을 통해 어떠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인구(출생, 사망, 이동, 규모, 증감, 구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과 인구대응정책을 통해 법률, 제도, 사회에 개입해 이것이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쳐 인구동태(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1] 인구정책의 작동 메커니즘



자료: 岡崎陽一(1995); 박종서 외(2015)를 참고로 재구성.

이하에서는 위의 인구정책 작동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작성되고 있는 각 영역별 통계를 인구분야, 사회분야, 정책분야별로 정리하고 개별 통계의 생산기관 및 작성주기 등을 정리하였다. 앞서 살펴본 해외통계, 특히 OECD 통계의 경우 관련 지표들을 크게 사회환경지표(장기적 인구 추세나 가구구성 추이 등을 보여주는 지표), 사회수준지표(사회의 주요 관심사와 관련된 현황을 기술하고 있는 지표), 사회반응지표(정부가 사회정책 등을 통해 사회수준지표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인구피라미드, 출산율, 노인부양비 등으로 구성되는 인구분야 지표, 혼인율, 이혼율, 빈곤율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분야 지표, 주택보급률, 청년고용률, 공적연금수급율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들의 추진 현황과 규모 등으로

구성되는 정책분야 지표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분류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박중서 외, 2015;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9, KOSIS 국가통계포털(e-지방지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2019)]를 참고하여 인구분야는 출생, 사망, 이동의 규모, 증감, 구조에 관련된 핵심 통계, 사회분야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회 관련 통계들을 분류하였다. 이어서 정책분야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관련 통계(사회분야에 영향을 주는 행동이며 정책의 규모와 성격 등을 관찰가능)들을 정리하였다. 단, 사회분야 통계와 정책분야 통계는 저출산·고령사회대응 정책 등을 포함한 사회 정책과 관련된 지표로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달성도, 규모 등을 관찰할 수 있지만 엄밀히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사회분야 지표와 정책분야 지표들을 비교하게 되면 본 연구에서 집중하는 저출산·고령사회대응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

<표 2-8> 인구분야 통계

구분			사용통계	통계명	생산기관	작성주기
인구 (28)	인구구조 (10)	규모	총인구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5년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	월
			인구피라미드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5년
			전국 지자체 인구현황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	월
			시도별 고령인구	인구총조사	통계청	1년
		증감	인구성장률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5년
		구조	연령별 인구구조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5년
			중위연령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5년
			인구 부양비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5년
			노인인구비율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월, 1년
	인구변동 (18)	출생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1년
			모의 연령별 출산율 및 출생아 수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1년
			시도별 합계출산율	출생통계	통계청	1년
			초혼 신흰부부의 특성별 자녀 출산 현황	신흰부부통계	통계청	1년
			초혼 신흰부부의 소득구간별 자녀 출산 현황	신흰부부통계	통계청	1년
			국적별 출산율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년
			연령별 출산율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1년
			출생순위별 출생아수와 비율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1년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OECD Family Database	OECD	-
		사망	사망률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1년
			연령별 사망률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1년
			영아 사망률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1년
			평균수명	생명표	통계청	1년
			사망원인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1년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1년
		이동	국제이동	국제인구이동통계	통계청	1년
			지자체별 이동수와 비율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1년
			체류외국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1년
				외국인주민현황통계	행정자치부	1년

자료: 박종서 외(2015);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19); KOSIS 국가통계포털을 참고로 재구성.

<표 2-9> 사회분야 통계

구분			사용통계	통계명	생산기관	작성주기
사회 (80)	가족/ 가구 (18)	가족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1년
			신혼부부 수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1년
			시도별 신혼부부 수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1년
			초혼 신혼부부 특성별 거처종류별 신혼부부 수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1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1년
			성별 초혼연령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1년
			모의 평균 출산연령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1년
			국제결혼건수와 비율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1년
			인공임신중절 현황과 중절률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불규칙
			기혼여성의 임신중절 현황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년
		가구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비율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5년
			자녀수별 가구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5년
			영유아수별 가구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5년
			한부모가족 비율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5년
			노인가구 구성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5년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5년
			연령 및 성별 다문화가구원 수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5년
			다문화가구 구성 및 가구원수별 가구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5년
	여성/ 젠더 (4)	여성/ 젠더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비율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반년
			임금격차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1년
			여성 관리자 비율	안전행정 통계연보 인사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통계청	1년
			가사노동 시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5년
	양육/ 교육 (16)	양육	보육서비스 이용대상 연령 인구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	월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1년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이용 아동 수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1년
			어린이집 정원·현원 현황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1년
			보육시설 이용률	OECD Family Database	OECD	-
		교육	학년별 학생 수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1년
			시도별 학생 수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1년
			교원 수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1년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1년
			사교육비 총액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통계청	1년
			월평균 사교육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통계청	1년
			사교육 참여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통계청	1년

구분			사용통계	통계명	생산기관	작성주기
사회 (80)	양육/ 교육 (16)	교육	사교육 참여시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통계청	1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1년
			대학진학률	고등교육기관졸업자 취업통계조사	한국교육개발원	1년
			대학 입학 정원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1년
	고용/ 노동 (9)	고용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월
			고용률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월
			고령자 고용률과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월
			근로시간별 취업자 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월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월
			구직기간별 실업자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월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월
		노동	임금수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1년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OECD	1년
	경제 (6)	경제	빈곤율	OECD Poverty rate	OECD	1년
			노인빈곤율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분기 1년
				OECD Poverty rate	OECD	1년
			OECD 주요국의 노인빈곤율	OECD Poverty rate	OECD	-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아동빈곤율	OECD Poverty rate	OECD	1년
			지니계수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분기
				OECD Income distribution- Gini Coefficient	OECD	1년
	건강 (12)	건강	영유아 필수예방 완전접종률	전국예방접종률조사	질병관리본부	1년
			아동 십만 명당 안전사고사망률	e-지방지표	통계청	1년
			건강수명	생명표, e-나라지표	통계청	1년
			우울증상경험율	국민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년
			(초기/고령)노인만성질환유병률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본부	1년
			추정 치매환자 수 및 치매유병률	대한민국 치매현황	중앙치매센터	2년
			암검진율	국민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년
			노인교통사고사망률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경찰청	1년
			노인사고율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1년
			아동자살률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1년
			노인자살률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1년
			노인학대 발생빈도와 노인학대율	노인학대 현황보고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1년
	가치 관 (15)		결혼·이혼·재혼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	통계청	2년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	사회조사	통계청	2년
			결혼식 문화에 대한 인식	사회조사	통계청	2년

구분			사용통계	통계명	생산기관	작성주기
사회 (80)	가치 관 (15)	결혼 / 부양 부담 / 가사 분담	미혼 남녀의 결혼 필요성 인식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년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년
			결혼하지 않은 이유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년
			기혼여성의 자녀의 필요성 및 이상자녀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년
			미혼남녀의 자녀의 필요성 및 이상자녀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년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	통계청	2년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	통계청	2년
		교육	학생과 부모의 기대하는 교육수준	사회조사	통계청	2년
			학생의 기대하는 교육목적	사회조사	통계청	2년
			부모의 자녀 기대 교육 목적	사회조사	통계청	2년
			교육비에 대한 인식	사회조사	통계청	2년
			교육비 부담 요인	사회조사	통계청	2년

자료: 박종서 외(2015);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19); KOSIS국가통계포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2019)를 참고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영역에 한정하여 재구성.

<표 2-1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분야 통계

구분			사용통계	통계명	생산기관	작성주기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정책 (56)	청년 일자리 · 주거 대책 강화	청년 고용률	청년 고용률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1년
			OECD 청년 니트율	OECD Neet rate	OECD	1년
			주택보급률	국토교통통계연보	국토교통부	1년
		신혼부부 주택지원과 임대주택 수혜율	신혼부부 주택지원과 임대주택 수혜율	국토교통통계연보	국토교통부	1년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건수	저출산·고령사회정 책 성과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년
			난임치료 휴가제도 활용실적현황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고용노동부	1년
			난임치료 휴가 사용 일수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고용노동부	1년
			임신유지율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3년
			아동 1인당 진료비	건강보험진료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1년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 개혁	연령별 보육아동수	연령별 보육아동수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보건복지부	1년
			유형별 보육시설 현황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1년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현황과 비율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현황과 비율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보건복지부	1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보육정책DB	보건복지부	1년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보건복지부	1년
			직장보육시설 현황과 의무이행률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1년
	일· 가정 양립 사각 지대 해소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고용보험 DB	고용노동부	1년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고용보험 DB	고용노동부	1년
			육아휴직 사용근로자의 고용유지율	고용보험 DB	고용노동부	1년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1년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현황	가족친화 인증제	여성가족부	1년
		OECD 주요국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월
			OECD 주요국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OECD	1년
			일평균 여가시간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1년
			OECD 주요국의 여가시간	OECD Gender data portal	OECD	1년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OECD Family Database	OECD	-
			여성·전문 관리직 종사자 구성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1년
			OECD 회원국의 여성관리직 종사 자 구성비	OECD Family Database	OECD	-
			기혼자의 성별 일평균 가사노동시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5년
		공적연금 가입률 공적연금 수급자 수와 수급률	공적연금 가입률 공적연금 수급자 수와 수급률	국민연금통계·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년

구분			사용통계	통계명	생산기관	작성주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56)	고령화대응정책 (24)	노후소득보장	기초연금 지급률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1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OECD Pension at a glance 2019	OECD	2년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가입자 수	퇴직연금통계·주택연금통계	고용부 주택금융공사	1년 월
			개인연금 가입률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1년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율	OECD Pension at a glance 2019	OECD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노인진료비 비율 및 총 진료비	2005~2007년 건강보험통계지표·2008~2017년 진료비 통계지표·2018년 진료비 심사실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년
			노인미치료율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본부	1년
			치매안심센터 수	대한민국 치매현황	중앙치매센터	2년
			치매환자 실증현황	대한민국 치매현황	중앙치매센터	2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혜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1년
			장기요양보험 수혜자 중 재가급여 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1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수	OECD Health stats·Long term care facility	OECD	1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 및 재가 보호율	OECD Health stats	OECD	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수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년
			고령자친화기업 현황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년
			경로당 설치운영 수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1년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수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1년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사회조사	통계청	2년
			노인운동실천율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본부	1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수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1년
			고령자용 주택공급 비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년
			노인 최저주거기준 미충족률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인구구조변화대응 (4)	예산 및 재정	인구정책예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부부처합동	5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용	OECD Social spending	OECD	1년
			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	OECD Family benefits public spendings	OECD	1년
			GDP 대비 의료비 지출	OECD Health spending	OECD	1년

자료: 박종서 외(2015);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19); KOSIS국가통계포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2019)를 참고로 재구성.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인구정책 통계에 대한 정의와 이에 따른 범주 및 구성요소들을 국내외 관련 통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인구정책 통계는 인구현상에 국한하지 않고,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회 및 정책분야까지 그 범주를 확대한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살펴본 OECD, EU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인구정책 통계는 국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으며, 인구, 사회, 정책의 3가지 영역의 상호관계를 통해 결정됨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통계 및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인구정책 통계를 크게 인구분야, 사회분야, 정책분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인구분야 지표는 인구 피라미드, 출산율, 노인부양비 등으로 구성되며, 출생, 사망, 이동의 규모, 증감, 구조에 관련된 핵심 통계 지표를 말한다. 사회분야 지표는 혼인율, 이혼율, 빈곤율 등으로 구성되며,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회의 주요 관심사와 관련된 현황을 기술하는 지표를 말한다. 정책분야 지표는 주택보급률, 청년고용률, 공적연금 수급율 등으로 구성되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들의 추진 현황과 규모 등을 기술하는 지표를 뜻한다.

해외통계 지표들을 정리하면서 그 특이점 및 한국의 인구정책 통계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Family Data는 인구정책 관련 통계들을 가족과 아동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특이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특정 대상이나 단위에서 인구·사회현상을 조망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같은 통계지표라 하더라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예를 들어 아동빈곤율을 OECD Family Data에서는 세대 유형별 격차와 소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근로시간과 케어시간을 한부모가정과 유자녀부부라는 가족유형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 통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게 한다. 앞서 분류된 국내의 인구정책 통계 역시 여성/젠더적 관점 등에서 통계를 정리하기도 했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구정책 통계 구축 및 관리에 있어 정책대상이나 이론 등 특정 관점에 주목해서 스크리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통계 구축 및 관리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OECD나 EU의 각 분야별 통계는 개별 지표들이 갖는 의미를 보다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세부 지표들을 보다 자세하게 수집, 공표하고 있다. 배우자 관계별 출생

률과 사망률 등을 제시하거나 세대 특성별 출생률과 사망률, 세대 특성별, 유형별 격차와 소득비율, 그리고 성별·연령대별 시간제 고용률, 성별·연령대별, 자영자 비율, 성별·연령대별 재택근로자 비율 등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 현상이 경제, 가치관, 노동, 주거 등 매우 복잡한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개별 지표가 주는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또 개별 지표들의 조합은 단순한 현황파악에서 벗어나 그 현상의 배경과 원인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점, 더 나아가 정책목표 달성의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준다.

셋째, 앞서 정리된 지표들은 각 국가의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주요 지표들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OECD나 EU의 통계들이 발표하고 있는 지표들은 회원국 간 상호 논의를 통해 각종 사회현황에 대처할 필요성이 높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표들을 수집,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지표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년 NEET율, 노인 디지털 사용 기회지표(연령대별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고령인구 비율, 연령대별 인터넷 소통 활동 가능자 비율과 인터넷 구매자 비율 등), 사회적 보호수준 관련 지표(비공식 홈케어 서비스 제공 인구 비율, 연령대별 손주 돌봄자 비율 등) 등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생산되지 않거나 혹은 정기적인 생산과 관리가 필요한 지표들이다. 청년 NEET율은 OECD에서 제공하는 청년 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지표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에 대한 공식통계가 없고 연구자별로 제한된 자료로 상이하게 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년 NEET율 산출을 위한 기준에 대한 논의와 필요한 경우 통계 생산 및 산출을 위한 책임기관 지정이 필요하다.

노인 디지털 사용 기회지표와 사회적 보호수준 관련 지표의 일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행하는 노인실태조사에서 3년마다 파악하고 있지만 지표의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인의 컴퓨터 이용률, 비공식 홈케어 서비스 이용률 등은 파악할 수 있지만 관련 통계가 연속적으로 매년 생산되지 않고, 측정지표가 약간씩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표는 인구고령화와 함께 접하게 될 사회현상과 관련되며 고령 인구 노동력 활용가능성, 사회서비스 인력 확보라는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지표들이므로 관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OECD, EU 통계에서는 제공되지 않았지만 인공임신중절률과 치매유병률과 발생률 WHO에서 제공하는 지표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달성도, 규모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주요 지표라는 점에서 정기적인 생산과 관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공임신중절률은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핵심목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여성의 건강권 제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나 인공임신중절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책임지고 생산하는 기관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치매유병률과 발생률은 중앙치매센터에서 생산, 공표하고 있으나 국가 승인 통계가 아니다. 보다 정밀한 표본 설계나 데이터 수집 등의 품질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제 3 장

국내 인구정책 주요 통계 현황

제1절 인구분야 통계

제2절 사회분야 통계

제3절 정책분야 통계

제4절 소결

3

국내 인구정책 주요 통계 현황 <

<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인구, 사회, 정책 분야 구분에 맞춰 국내 인구정책 관련 주요 통계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통계 구축 및 관리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특히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관련 통계들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서 현재의 정책적 환경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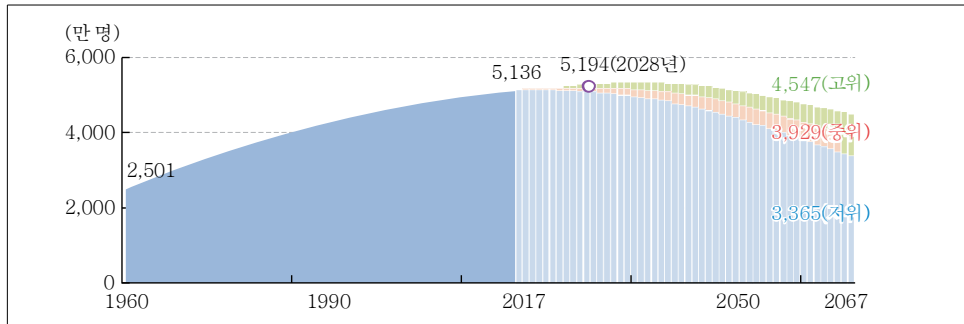
제1절 인구분야 통계

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7년 3,92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9년부터 총인구의 감소가 시작된다. 2067년의 인구 규모는 1982년의 인구 규모와 유사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등록인구는 2008년~2018년 사이에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은 미세하게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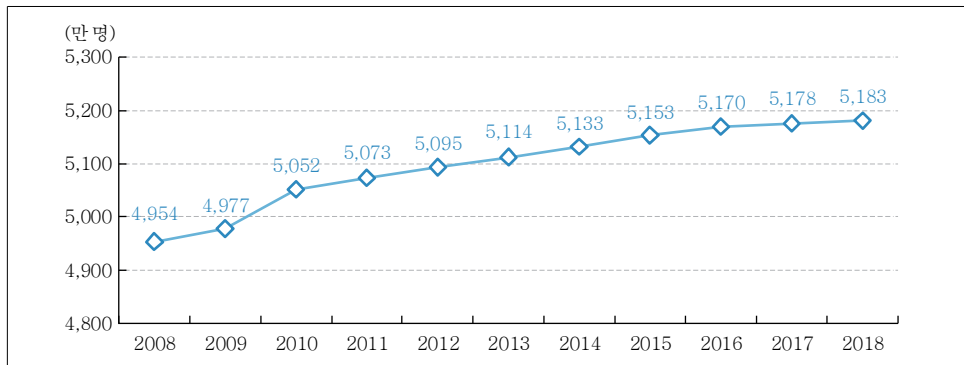
한편 인구성장률은 1965년 이후 가파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2017년 0.28%에서 감소, 2029년에 인구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시작, 2067년에는 -1.2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에서 사망을 제외한 자연증가를 보면, 중위 추계에서는 2019년 (*2019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기간 중)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져 인구 자연 감소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연도별 총인구(통계청) (1960~206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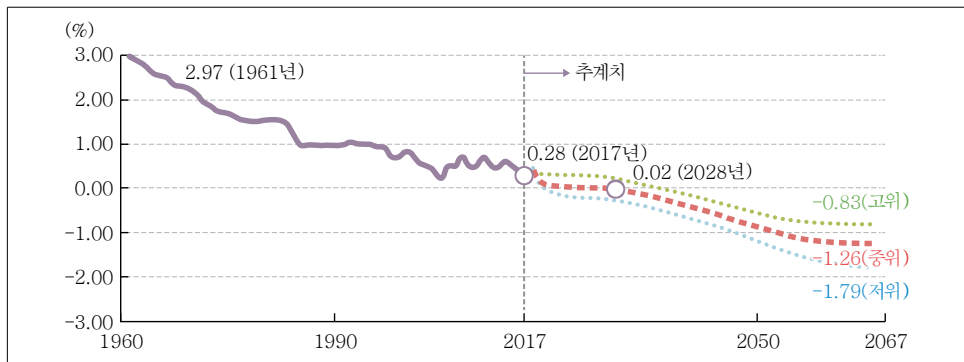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 장래인구추계(특별).

[그림 3-2] 연도별 총인구(주민등록인구, 행정안전부) (2008~2018년)



자료: 행정안전부(각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

[그림 3-3] 연도별 인구성장률 (1960~206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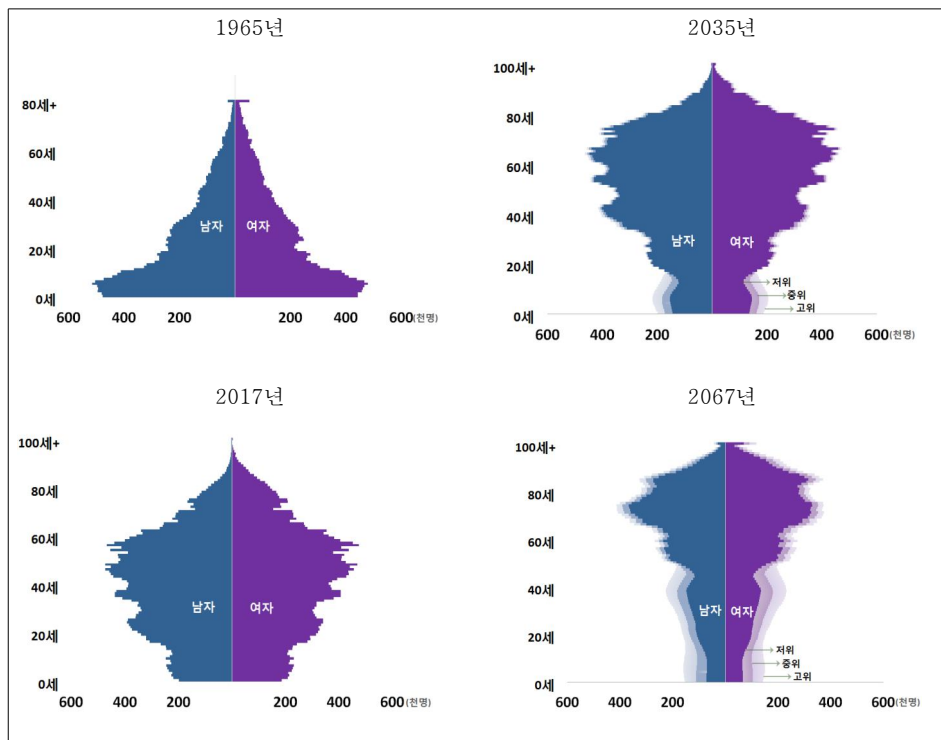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 장래인구추계(특별).

2. 인구 피라미드

한국 인구의 1960년 연령구조는 아랫부분이 넓은 전형적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냈으나,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점차 아랫부분이 좁아지는 방추형으로 변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2017년 현재 인구피라미드는 30~50대가 두터운 항아리형이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점차 60세 이상이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가 예상된다. 연도별 중위연령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42세이지만 2067년 62.2세가 될 전망인데, 이는 2017년에는 전체 연령 중 42세가 가장 중간(가운데) 연령이고 2067년에는 전체 연령에서 62.2세가 가장 중간 연령임을 의미하며,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4] 연도별 인구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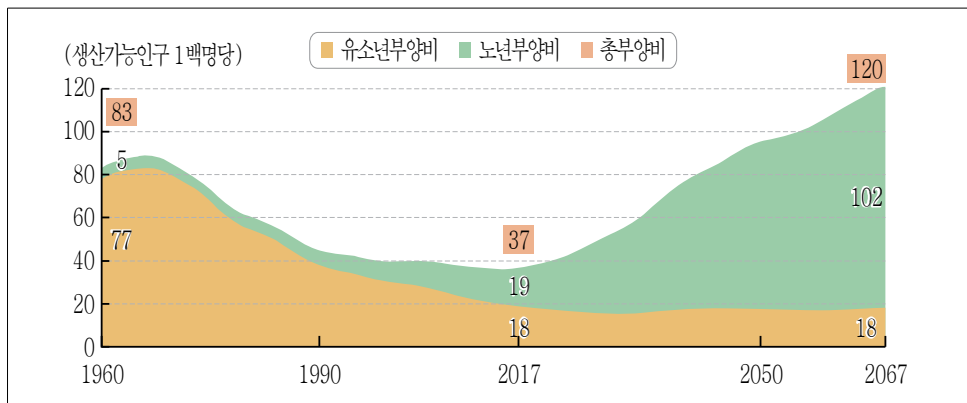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9). 장래인구추계(특별).

3. 인구 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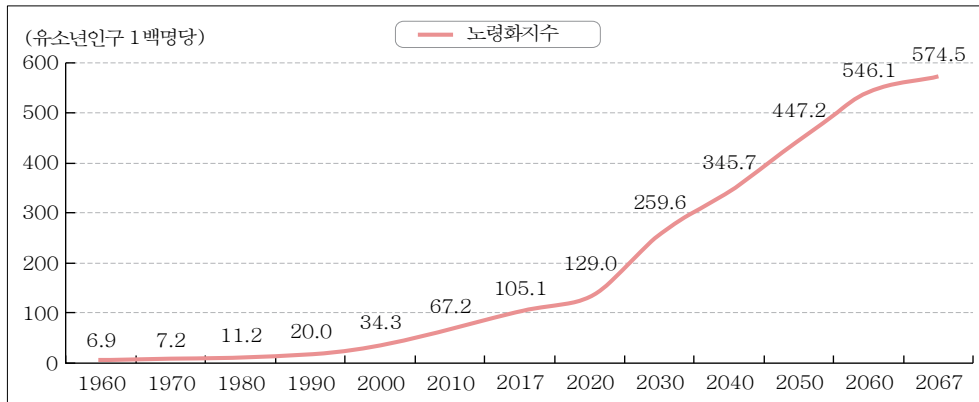
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 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38년에 70명을 넘고,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인구 고위 추계에서는 2067년 115.5명, 저위 추계에서는 2067년 126.8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년부양비는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동시에 감소함에 따라 2017년 17.9명, 2067년 17.8명으로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함에 따라 2017년 18.8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고, 2067년 102.4명 수준으로 2017년 대비 5.5배 증가할 전망이다. 유소년인구 1백 명당 고령인구수인 노령화지수는 2017년 105.1명에서 2026년 206명, 2056년 502.2명으로 높아져, 2056년부터는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5배 이상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5]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 (1960~2067년)



자료: 통계청(2019). 장래인구추계(특별).

[그림 3-6] 연도별 노령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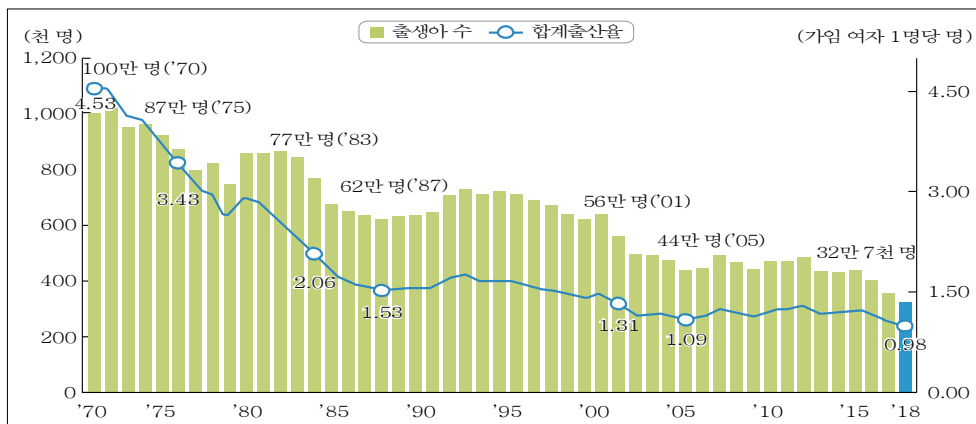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9). 장래인구추계(특별).

4.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은 15세에서 49세의 여성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며, 합계출산율이 높을수록 여성이 출산하는 자녀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76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한 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8년 0.977로 1 이하로 떨어지는 등 역대 최저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총 출생아 수는 32만 6천 8백 명으로 전년(35만 7천 8백 명)보다 3만 9백 명 (-8.7%) 감소하였다.

[그림 3-7] 합계출산율(2008년~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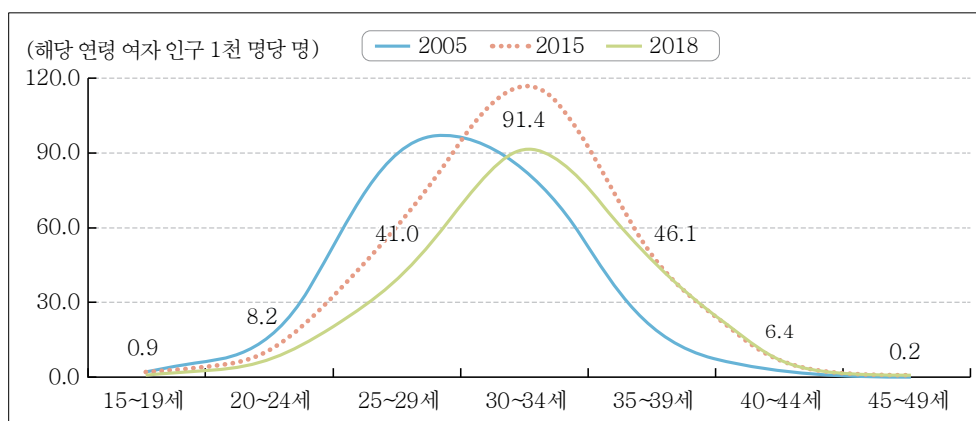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5. 모의 연령별 출산율 및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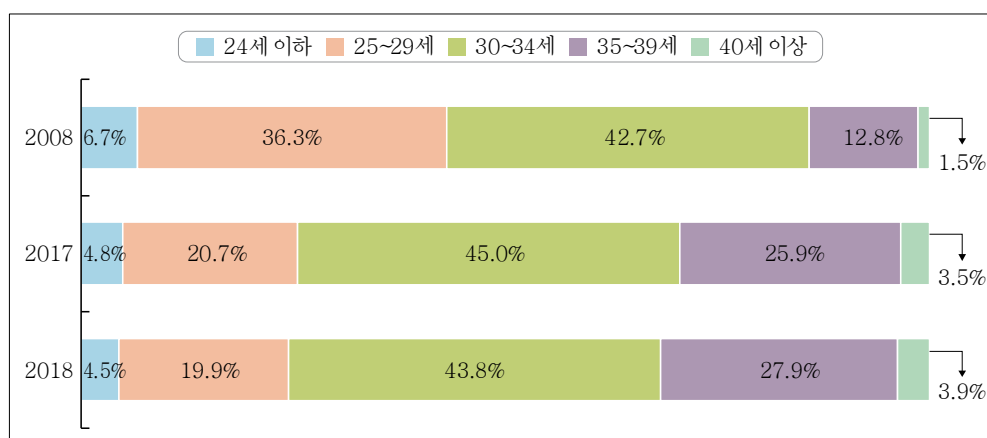
전년 대비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출산율이 감소하였다.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91.4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이 46.1명, 20대 후반이 41.0명 순이었다. 20대 후반의 출산율이 처음으로 30대 후반의 출산율보다 낮아졌다. 20대 후반의 출산율은 6.9명(전년 대비 -14.4%), 30대 초반은 6.3명(전년 대비 -6.4%)으로 전년 대비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출산율이 크게 감소였다. 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감소하였는데 전년 대비 30대 초반 모의 출생아 수는 1만 7천 9백 명이 감소하였고 20대 후반 모의 출생아 수도 9천 명 감소하였다.

[그림 3-8]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 통계청(2019). 출생통계.

[그림 3-9]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구성비



자료: 통계청(2019). 출생통계.

6. 초혼 신혼부부의 특성별 출생아 수/자녀출산 현황

초혼 신혼부부 중 2017년 11월 1일 기준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는 약 41만 4천 쌍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도와 비교해 1.2%p 증가하였다.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78명으로 전년도의 0.80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자녀가 있는 경우 62.5%이며 1명이 47.3%, 2명 14.6%, 3명 이상 0.6%였다.

<표 3-1> 초혼 신혼부부의 자녀 출산 현황 (2016~2017년)

(단위: 쌍, %, %p, 명)

구분	합계	자녀 없음	자녀 있음				평균 출생아 수
			소계	1명	2명	3명 이상	
2016년	1,151,131	418,270	732,861	548,672	177,254	6,935	0.80
(구성비)	(100.0)	(36.3)	(63.7)	(47.7)	(15.4)	(0.6)	
2017년	1,103,270	413,938	689,332	522,265	160,940	6,127	0.78
(구성비)	(100.0)	(37.5)	(62.5)	(47.3)	(14.6)	(0.6)	
전년 대비	증감	-47,861	-43,529	-26,407	-16,314	-808	-0.02
	증감률	-4.2	-1.0	-5.9	-4.8	-9.2	-11.7
	비중차	(0.0)	(1.2)	-(1.2)	-(0.3)	-(0.8)	(0.0)

주: 출생아 수는 아내 기준으로 혼인신고 이전에 낳은 자녀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

자료: 통계청(각년도). 신혼부부통계.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혼인 1년차 0.22명, 2년차 0.53명, 3년차 0.80명, 4년차 1.03명, 5년차 1.24명이다. 맞벌이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의 비중은 56.7%로 외벌이 부부 (68.0%)보다 낮으며, 맞벌이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70명으로 외벌이 부부(0.86명)에 비해 낮은 편이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56.3%(0.69명)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 (68.9%, 0.88명)보다 낮았다. 주택을 소유한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가 0.85명으로 무주택 부부 (0.73명)에 비해 높았다. 초혼 신혼부부의 소득 구간별 출산 현황은 상위 소득구간에 위치한 신혼부부일수록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의 비중이 하위 소득구간에 위치한 신혼부부에 비해 많아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는 부부의 소득이 맞벌이 여부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 3-2> 초혼 신혼부부의 특성별 자녀 출산 현황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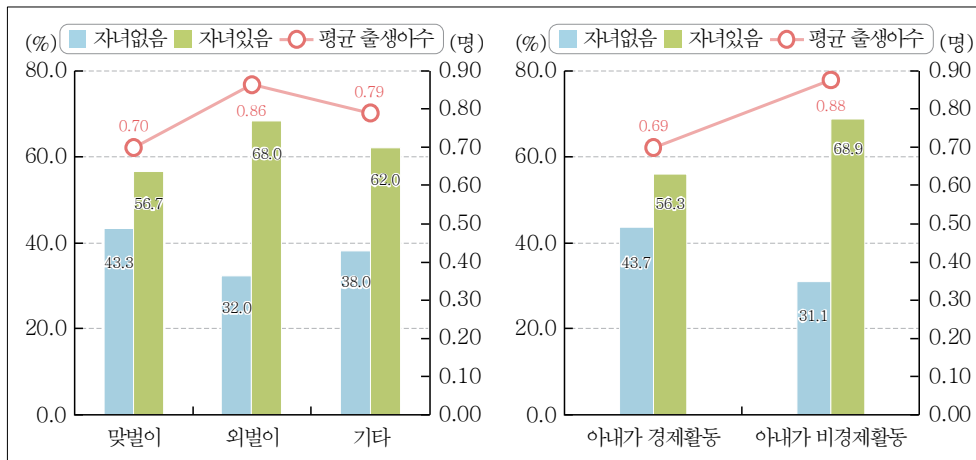
(단위: 쌍, %, %p, 명)

구분		합계	자녀 없음	자녀 있음				평균 출생아 수
				소계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1,103,270	413,938	689,332	522,265	160,940	6,127	0.78
(구성비)		(100.0)	(37.5)	(62.5)	(47.3)	(14.6)	(0.6)	
혼인 연차	5년차	235,133	35,046	200,087	112,600	83,310	4,177	1.24
		(100.0)	(14.9)	(85.1)	(47.9)	(35.4)	(1.8)	
	4년차	227,593	47,086	180,507	127,275	51,848	1,384	1.03
		(100.0)	(20.7)	(79.3)	(55.9)	(22.8)	(0.6)	
	3년차	222,211	67,103	155,108	133,511	21,207	390	0.80
		(100.0)	(30.2)	(69.8)	(60.1)	(9.5)	(0.2)	
	2년차	216,077	105,080	110,997	107,038	3,836	123	0.53
		(100.0)	(48.6)	(51.4)	(49.5)	(1.8)	(0.1)	
	1년차	202,256	159,623	42,633	41,841	739	53	0.22
		(100.0)	(78.9)	(21.1)	(20.7)	(0.4)	(0.0)	

주: 출생아 수는 아내 기준으로 혼인신고 이전에 낳은 자녀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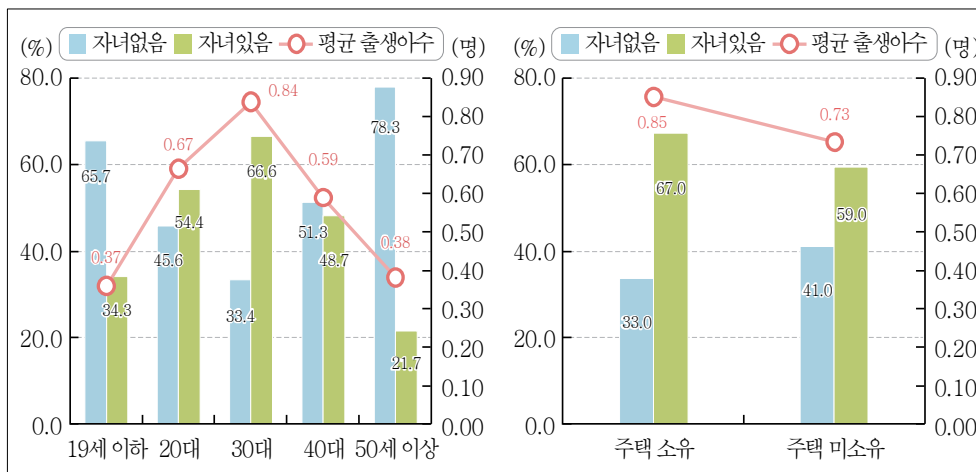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8). 신혼부부통계.

[그림 3-10] 초혼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특성별 자녀 출산 현황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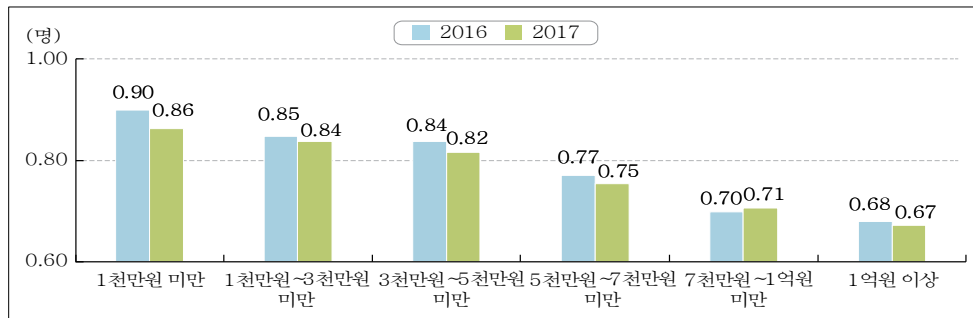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8). 신혼부부통계.

[그림 3-11] 초혼 신혼부부의 아내 연령별, 주택소유여부별 자녀 출산 현황 (2017년)



자료: 통계청(2018). 신혼부부통계.

[그림 3-12] 초혼 신혼부부의 소득구간별 평균 출생아 수 (2016~2017년)



자료: 통계청(각년도), 신혼부부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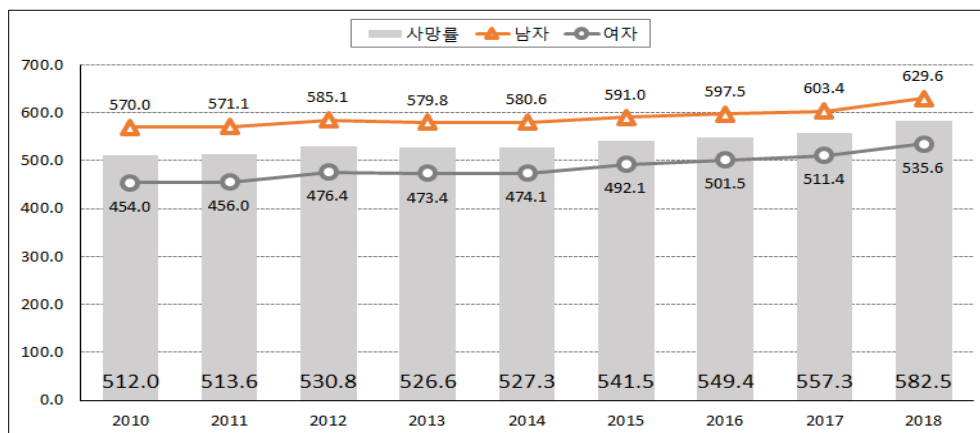
7. 사망률

사망률은 일정 인구에 대한 그 해의 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하며 인구 및 보건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사망률 계산 방식은 인구 십만 명당 사망자 수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사망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사망률 성비를 보면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보다 높다. 연령별 사망률을 살펴보면 15세 미만과 15세에서 65세 미만인 자의 사망률은 대체적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률은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률은 2017년보다 상승하였다.

[그림 3-13] 사망률 (2010~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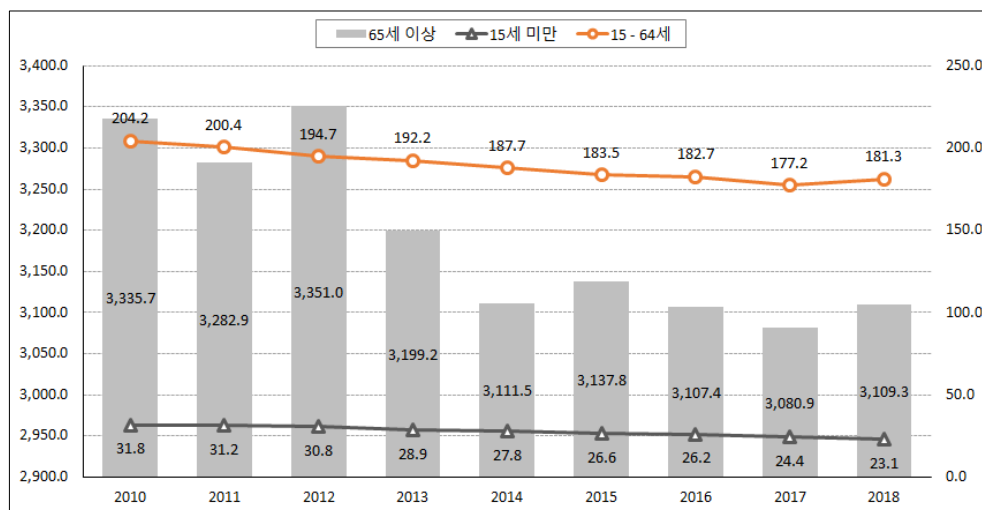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그림 3-14] 연령별 사망률 (2010~2018년)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자료: 통계청(2018). 사망원인통계.

9. 건강수명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은 WHO가 2000년에 제창한 개념으로 평균 수명에서 의료나 돌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출생시점으로부터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 또는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아프지 않은 기간이라 할 수 있다(통계청 e-나라지표. 2019.12.1.일 인출). 산출 방식은 먼저 통계청 사회조사 유병기간으로 장애 유병률을 산출하고, 생명표의 정지인구를 이용하여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을 산출하는 식이다(통계청 e-나라지표. 2019.12.1.일 인출). 건강수명이 높아질수록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은 기간이 적어지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간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건강수명(출생시점 기준)은 남자가 64.0년, 여자는 64.9년으로 2016년 대비 남자는 0.7년, 여자는 0.4년 감소하였다. 기대수명 중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의 비율(건강기간의 비율)은 남자가 80.3%로 여자 75.6%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3> 성·연령별 건강수명 (2012-2018년)

(단위: 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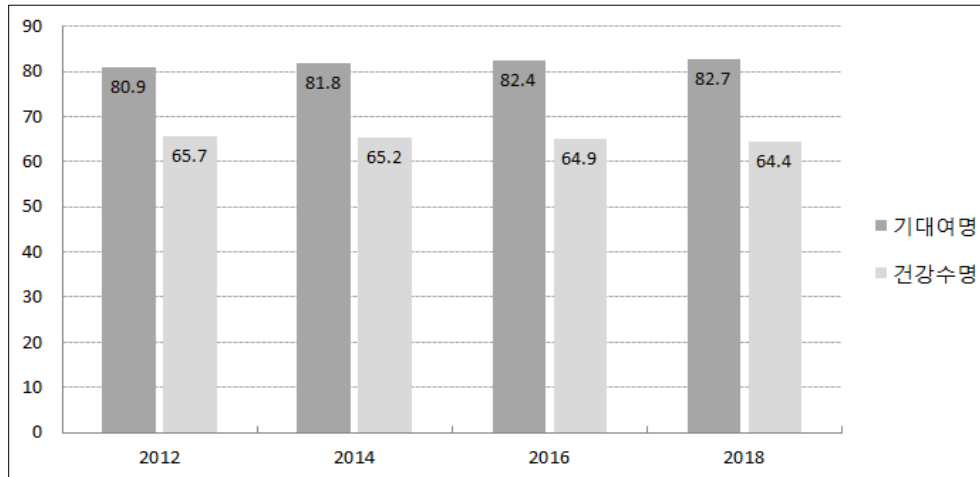
구분		기대여명 (A)			건강수명 (B)			건강기간 비율 (B/A*100)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2	0세	80.9	77.6	84.2	65.7	65.0	66.5	81.3	83.8	79.0
	2014	0세	81.8	78.6	85.0	65.2	64.7	65.7	79.7	82.4	77.3
	2016	0세	82.4	79.3	85.4	64.9	64.7	65.2	78.8	81.6	76.4
2018		0세	82.7	79.7	85.7	64.4	64.0	64.9	77.9	80.3	75.6
		10세	73.0	70.1	76.0	55.4	55.1	55.8	75.9	78.6	73.4
		20세	63.1	60.2	66.1	45.9	45.5	46.2	72.6	75.6	69.9
		30세	53.4	50.4	56.3	36.4	36.1	36.8	68.3	71.5	65.5
		40세	43.7	40.8	46.5	27.3	26.9	27.7	62.5	66.0	59.5
		50세	34.2	31.5	36.9	18.7	18.5	18.9	54.6	58.6	51.3
		60세	25.2	22.8	27.5	11.2	11.1	11.4	44.6	48.8	41.4
		70세	16.7	14.8	18.3	6.0	5.9	6.1	35.8	39.7	33.2
		80세	9.3	8.1	10.3	2.8	2.5	3.0	30.0	31.1	29.5
	85세 이상	6.6	5.7	7.1	2.1	1.8	2.3	31.8	31.4	32.0	
증감	'16 대비	0세	0.4	0.4	0.3	-0.5	-0.7	-0.4	-1.0	-1.3	-0.7
	'14 대비	0세	0.9	1.2	0.7	-0.8	-0.7	-0.8	-1.8	-2.1	-1.6
	'12 대비	0세	1.9	2.2	1.6	-1.3	-1.0	-1.6	-3.4	-3.5	-3.3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생명표: 기대수명(0세 기대여명) 및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건강수명).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8에서 2020. 1. 14. 인출.

[그림 3-16] 건강수명 추이 (2012-2018년)

(단위: 년)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생명표: 기대수명(0세 기대여명) 및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건강수명).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8에서 2020. 1. 14. 인출.

제2절 사회분야 통계

1.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혼인 건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08년 32.77만 건에서 2018년 25.76만 건으로 10년간 약 7만 건 정도 감소하였다. 2018년 혼인은 25만 7천 6백 건으로 전년(26만 4천 5백 건)보다 2.6%(−6천 8백 건) 감소하였고 2012년 이후 7년 연속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은 5.0건으로 전년 대비 0.2건 감소하였다. 조혼인율³⁾도 최근 들어 점차 감소하는 데, 이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혼과 비혼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 CMR)은 1년 동안에 발생한 혼인 건수를 해당연도 연앙인구(7월 1일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지표를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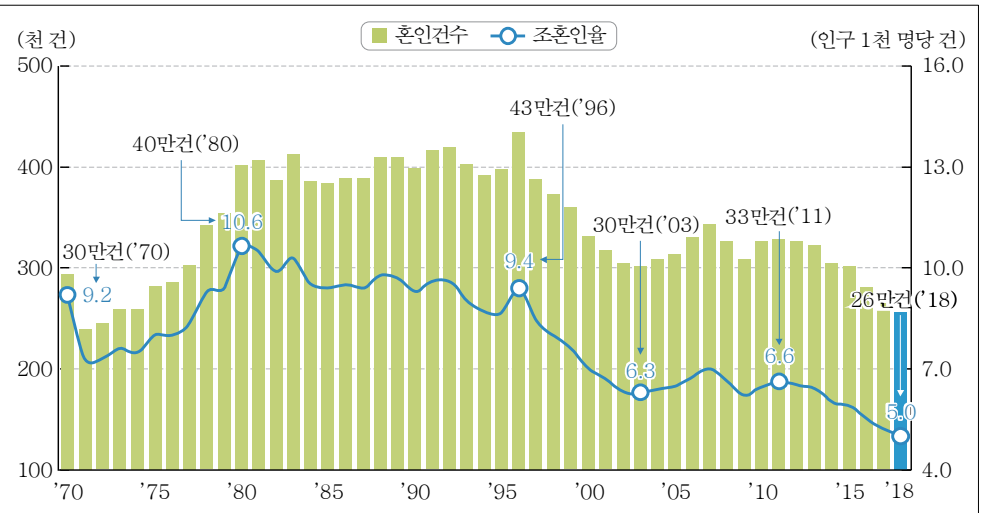
<표 3-4> 연도별 혼인건수 및 증감률 (2008~2018년)

(단위: 천 건, %, 인구 1천 명당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혼인건수	327.7	309.8	326.1	329.1	327.1	322.8	305.5	302.8	281.6	264.5	257.6
증감건수	-15.8	-18.0	16.3	3.0	-2.0	-4.3	-17.3	-2.7	-21.2	-17.2	-6.8
증감률	-4.6	-5.5	5.3	0.9	-0.6	-1.3	-5.4	-0.9	-7.0	-6.1	-2.6
조혼인율	6.6	6.2	6.5	6.6	6.5	6.4	6.0	5.9	5.5	5.2	5.0

자료: 통계청, 혼인·이혼통계, 각 연도.

[그림 3-17] 총 혼인건수와 조혼인율 추이 (1970~2018년)



자료: 통계청(각년도), 혼인·이혼통계.

2. 국제결혼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2천 7백 건으로 전년 대비 1천 9백 건, 8.9% 증가하였다.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은 1만 6천 6백 건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하였고, 외국인 남자와의 혼인은 6천 1백 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다.

<표 3-5> 국제결혼 혼인건수 및 비중 (2008년~2018년)

(단위: 천 건,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혼인건수	327.7	309.8	326.1	329.1	327.1	322.8	305.5	302.8	281.6	264.5	257.6
외국인과의 혼인	36.2	33.3	34.2	29.8	28.3	26.0	23.3	21.3	20.6	20.8	22.7
국제결혼 비중(%)	11.0	10.7	10.5	9.1	8.7	8.1	7.6	7.0	7.3	7.9	8.8

자료: 통계청(각년도). 혼인·이혼통계.

3.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2018년 이혼은 10만 8천 7백 건으로 전년(10만 6천 건)보다 2.5%(2천 7백 건) 증가하였다. 2018년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 2.1건은 1997년(2.0건) 이후 최저 수준이며, 유배우 이혼율(유배우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은 4.5건으로 전년 대비 0.1건 증가하였다.

남자의 평균이혼연령은 48.3세로 전년에 비해 0.7세 상승하였으며, 10년 전에 비해서는 4.0세 상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자의 평균이혼연령은 44.8세로 전년에 비해 0.7세 상승하였으며, 10년 전에 비해서는 4.3세 상승하였다. 남녀 간의 평균이혼연령 차이는 3.5세로 2012년(3.9세)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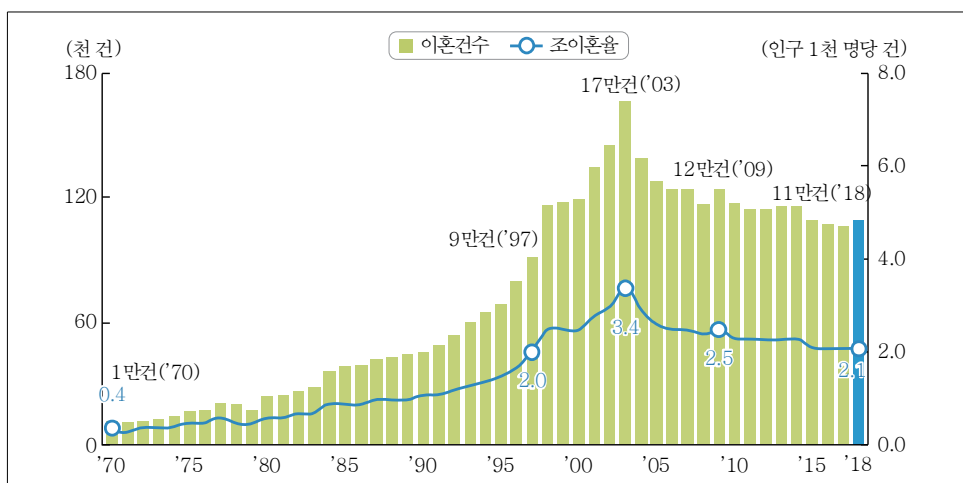
<표 3-6> 연도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2008~2018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이혼건수(천 건)	116.5	124.0	116.9	114.3	114.3	115.3	115.5	109.2	107.3	106.0	108.7
전년대비 증감(천 건)	-7.5	7.5	-7.1	-2.6	0.0	1.0	0.2	-6.4	-1.8	-1.3	2.7
전년대비 증감률(%)	-6.1	6.4	-5.8	-2.2	0.0	0.9	0.2	-5.5	-1.7	-1.2	2.5
조이혼율*	2.4	2.5	2.3	2.3	2.3	2.3	2.3	2.1	2.1	2.1	2.1
유배우 이혼율**	4.9	5.2	4.8	4.7	4.7	4.8	4.8	4.5	4.4	4.4	4.5

주: * 인구 1천 명당 건, ** 15세 이상 유배우 인구 1천 명당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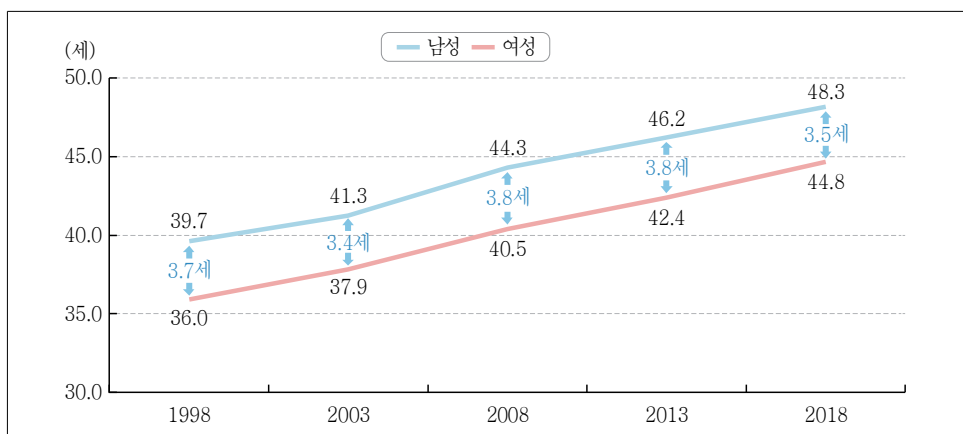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그림 3-18]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1970~2018년)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그림 3-19] 성별 평균이혼연령 (1998, 2003, 2008, 2013, 2018년)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4. 1인 가구 비율

2018년 1인 가구는 5백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전 연령대에서 증가 추세에 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 독거노인가구를 제외하고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구간은 25~29세였다. 한편 2010년 대비 증가율은 55~59세, 60~64세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1인 가구 비율은 성별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20세 미만, 85세 이상 제외한 경우 전체 남성 1인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25~29세이며,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 1인 가구는 40~44세 때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낮고 60~64세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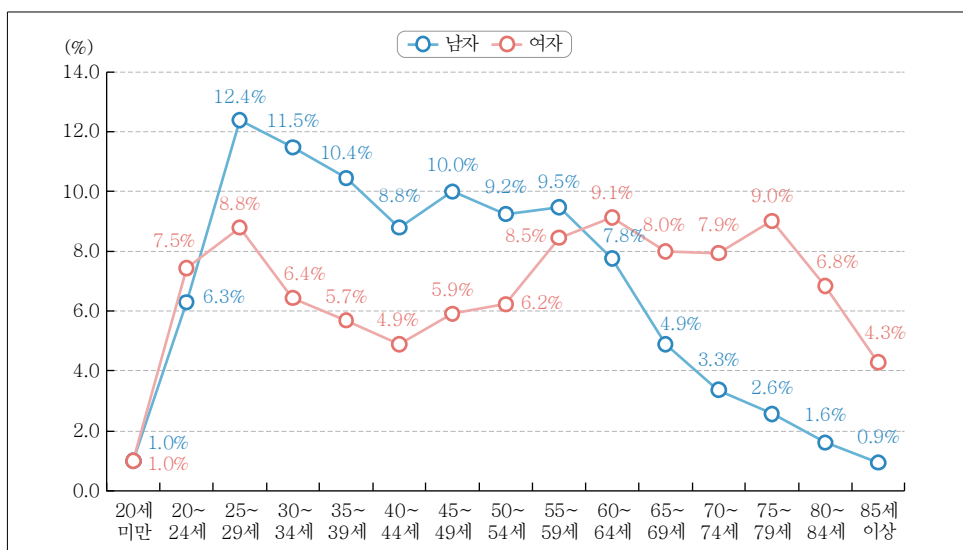
<표 3-7> 15세 이상의 연령대별 1인 가구 (2005, 2010, 2018년)

(단위: 가구, %)

구분	2005년	2010년		2018년	
	가구 수	가구 수	'05년 대비 증가율	가구 수	'10년 대비 증가율
전체	3,168,005	4,142,113	30.7	5,848,594	41.2
15~24세	309,041	325,393	5.3	460,630	41.6
25~29세	396,670	493,913	24.5	617,468	25.0
30~34세	348,146	427,745	22.9	522,405	22.1
35~39세	255,046	358,830	40.7	470,332	31.1
40~44세	228,903	307,852	34.5	400,122	30.0
45~49세	239,154	313,146	30.9	464,099	48.2
50~54세	192,517	319,056	65.7	450,375	41.2
55~59세	184,700	265,806	43.9	524,069	97.2
60~64세	201,333	255,029	26.7	494,506	93.9
65~69세	242,672	275,088	13.4	375,398	36.5
70세 이상	569,823	800,255	40.4	1,069,190	33.6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3-20] 성별·연령별 1인 가구 비율 (2018년)



자료: 통계청(2018). 인구주택총조사.

5. 자녀수별 가구

다자녀 가구는 보통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개별 법률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분류하기도 한다. 2018년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는 527만 가구로 일반가구(1997만 가구)의 26.4%이고, 다자녀 가구는 54만 5천 1백 가구로 3자녀 가구가 50만 가구, 4자녀 가구가 4만 가구, 5자녀 이상이 6천 가구였다. 전체 자녀 동거 가구 대비 다자녀 가구의 비중은 10.3% 수준이다.

6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는 188만 가구로 일반가구(1997만 가구)의 9.4%이다. 1자녀가 86만 가구(45.6%), 2자녀가 82만 가구(43.6%), 3자녀 이상 20만 가구(10.8%)였다.

<표 3-8> 자녀수별 가구 (2018년)

(단위: 가구, %)

구분	전체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가구 수	5,272,356	2,111,012	2,616,197	499,093	40,269	5,785
비율	100.0	40.0	49.6	9.5	0.8	0.1

자료: 통계청(2018). 인구주택총조사.

<표 3-9> 영유아수별 가구 (2018년)

(단위: 가구, %)

구분	전체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가구 수	1,884,247	858,600	821,521	204,126
비율	100.0	45.6	43.6	10.8

자료: 통계청(2018). 인구주택총조사.

6. 다문화 가구

다문화 가구는 내국인(귀화) 및 외국인(결혼이민자)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를 말한다. 2018년 다문화 가구는 33만 가구로 남성 가구원 48만 명, 여성 가구원 53만 명으로 구성되어 2010년에 비해 가구 수와 남성 가구원 수 규모(내국인 포함)는 하락하였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성별·연령대별로 증감의 수준은 상이하게 나타나나 0~19세 연령대의 가구원 수가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 가구의 출생 자녀가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8년 다문화 가구는 335천 가구로 2017년(319천 가구)에 비해 16천 가구(5.0%) 증가하였다.

내국인(출생) + 외국인(결혼이민자) 가구는 120천 가구이며 가구원은 393천 명으로 가장 많고, 내국인(출생) + 내국인(귀화) 가구는 77천 가구이며 가구원은 285천 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전년 대비 내국인(출생)+다문화자녀 가구는 5천 가구(19.2%) 증가하였다.

<표 3-10> 다문화 가구 (2010, 2015, 2018년)

(단위: 가구, 명)

구분	2010년			2015년			2018년		
	가구 수	가구원 수		가구 수	가구원 수		가구 수	가구원 수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386,977	499,018	440,361	299,241	419,398	468,406	334,856	479,983	528,537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표 3-11> 성별·연령별 다문화 가구원 수 (2010, 2015, 2018년)

(단위: 명)

구분	2010년		2015년		2018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499,018	440,361	419,398	468,406	479,983	528,537
0~9세	58,630	56,219	93,999	90,065	97,334	93,053
10~19세	23,747	24,717	30,849	30,624	47,175	46,370
20~29세	83,480	98,942	18,285	74,648	18,989	63,188
30~39세	116,256	88,723	50,490	92,473	54,962	116,060
40~49세	119,108	74,530	114,682	68,292	115,826	79,192
50~59세	60,388	50,395	65,166	48,855	89,958	58,172
60세 이상	37,409	46,835	45,927	63,449	55,739	72,502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표 3-12> 다문화 가구 구성별 다문화 가구 및 가구원 (2017, 2018년)

(단위: 천 가구, 천 명, %)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가구기준)	증감률 (가구기준)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계	319	964	335	1,009	16	5.0
내국인(귀화)	58	110	61	120	3	5.0
내국인(출생)+내국인(귀화)	76	283	77	285	1	1.7
내국인(출생)+외국인(결혼이민)	116	387	120	393	4	3.8
내국인(출생)+다문화자녀	26	85	31	104	5	19.2
내국인(귀화)+외국인(결혼이민)	14	44	16	50	2	12.8
기타	29	55	29	56	0	1.7

주: 1) 내국인(귀화):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외국인(결혼이민자): 내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외국인

3) 내국인(출생) + 다문화자녀: 내국인(출생) 가구주와 다문화자녀가 같이 생활하는 가구

4) 기타가구: 결혼이민자 + 기타외국인, 결혼이민자 + 다문화자녀 등 그 외 다문화 가구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7. 임금 격차(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남성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UNDP 여성권한척도⁴⁾를 나타내는 중요 지표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의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남성 근로자의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2017년 64.7%에서 2018년 66.6%로 1.9% 증가하였다. 여성임금은 2018년 2,087천 원으로 2017년 대비 7.2% 증가했으며, 2009년 대비 46.8% 증가했다. 남성 근로자의 임금은 2018년 3,135천 원으로 2017년 대비 4.2% 증가했으며 2009년 대비 37.6%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주요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크며,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보다 35% 정도 임금을 덜 받고 있다. 이 수치는 OECD 평균 13.5%보다 약 2.6배 높은 편이다.

<표 3-13>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2009-2018년)

(단위: 천 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여성	월급여액	1,422	1,477	1,548	1,654	1,705	1,742	1,781	1,869	1,946	2,087
	남성대비비율	62.3	62.6	63.3	64.4	64.0	63.1	62.8	64.0	64.7	66.6
남성	월급여액	2,284	2,361	2,444	2,569	2,664	2,761	2,837	2,918	3,010	3,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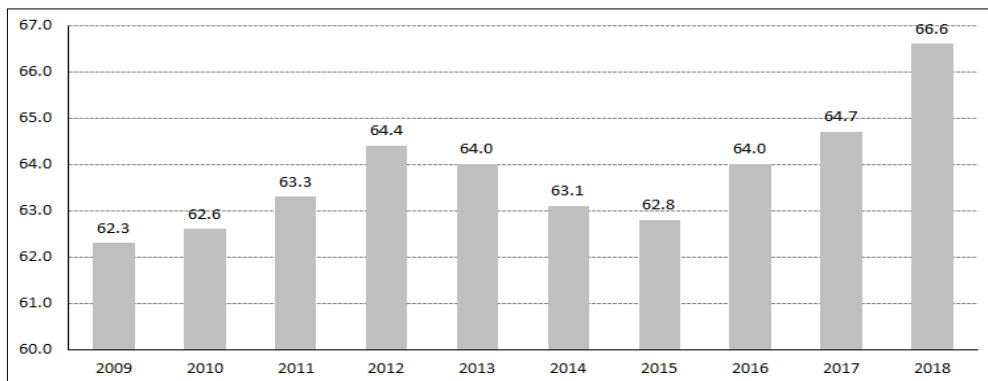
주: 월급여액= 정액급여+초과급여(상여금과 특별급여는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각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4) 1995년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성평등 관련지수로 남녀평등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와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를 개발하여 UNDP 인간개발보고서에 매년 발표(UNDP, Human Development Report)하고 있음.

[그림 3-21] 여성 임금 비율 (2009-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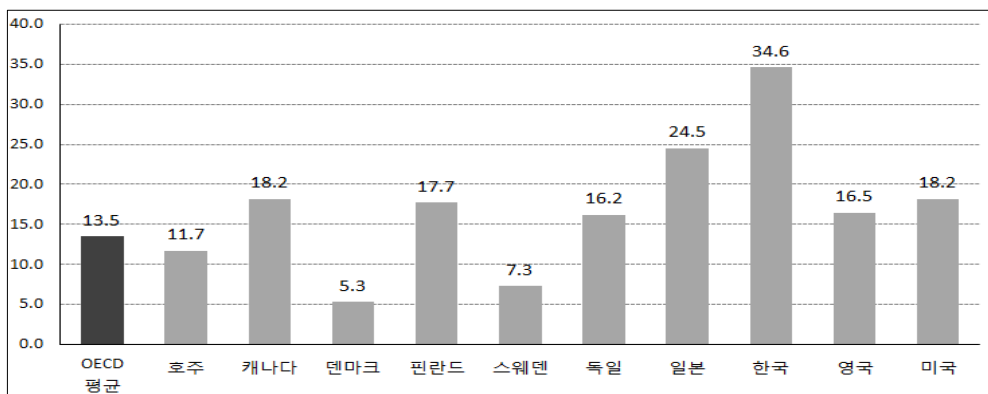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각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그림 3-22]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 격차 (2017년)

(단위: %)



주: OECD의 남녀 임금격차는 남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는 차이가 있음.

자료: OECD Gender Data Portal(Gender wage gap). <https://www.oecd.org>에서 2020.01.21. 인출.

8.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규모

15~54세의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⁵⁾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취업 중이 아닌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지표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018년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은 1,847천 명으로 15~54세 기혼여성 중 20.5%를 차지한다.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2011년 193만 명(19.2%)에서 2014년 216만 명(22.2%) 정도로 증가 하였으나, 2018년 185만 명(20.5%) 정도로 다시 감소하였다. 2018년 여성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이 34.4%로 가장 많고 이어서 육아(33.5%), 임신·출산(24.1%), 가족돌봄(4.2%), 자녀교육(3.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4> 15~54세 기혼여성의 비취업 및 경력단절 비율 (2011~2018년)

(단위: 천 명,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5~54세 기혼여성(A)	10,033	9,940	9,868	9,733	9,561	9,376	9,159	9,005
비취업여성(B)	4,145	4,122	4,123	3,957	3,863	3,727	3,574	3,457
비율(B/A)	(41.3)	(41.5)	(41.8)	(40.7)	(40.4)	(39.8)	(39.0)	(38.4)
경력단절여성(C)	1,926	2,011	1,980	2,164	2,073	1,924	1,831	1,847
비율(C/A)	(19.2)	(20.2)	(20.1)	(22.2)	(21.7)	(20.5)	(20.0)	(20.5)

자료: 통계청(각년도) 지역별고용조사.

<표 3-15> 연령별 여성 경력단절 사유 (201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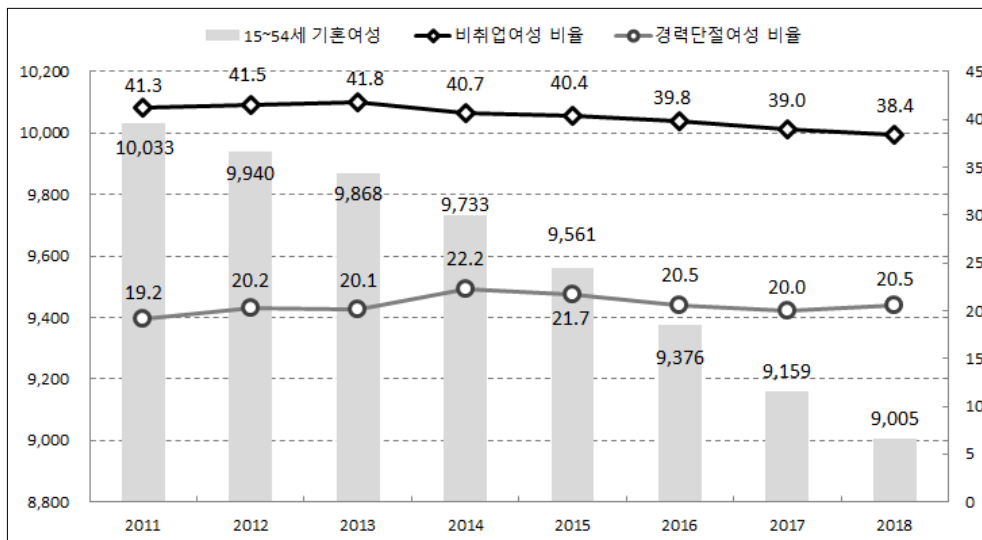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15~54세 기혼여성	34.4	24.1	33.5	3.8	4.2
15~29세	33.6	36.3	29.1	0.5	0.5
30~39세	30.6	27.5	38.5	2.4	1.0
40~49세	36.5	20.1	31.4	6.3	5.7
50~54세	46.9	10.8	18.3	4.4	19.5

자료: 통계청(2018). 지역별고용조사.

5) 2014년 조사부터 경력단절 여성 범위에 '가족돌봄'이 추가됨.

[그림 3-23] 15~54세 기혼여성의 비취업 및 경력단절 비율 (2011~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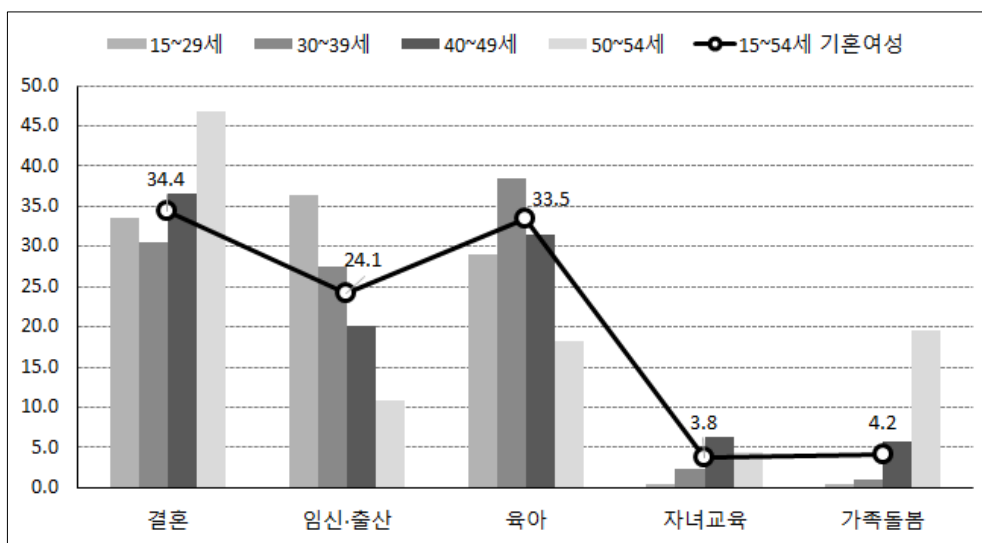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각년도),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3-24] 연령별 여성 경력단절 사유 (201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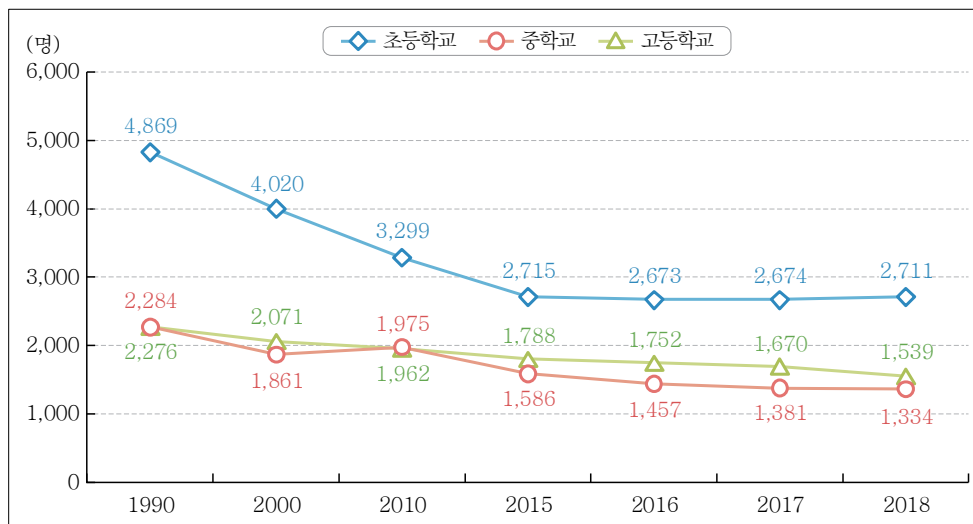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8), 지역별고용조사.

9. 전체 학생 수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2018년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5,584,249명으로 전년 대비 141,011명(2.5%)으로 감소하였다. 2017년부터 초등학교 학생 수는 소폭 증가하였고, 중·고 전체 학생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18년의 초등학생 수는 전년 대비 37,158명(1.4%)으로 증가하였고 중학생 수는 47,046명(3.4%)으로 감소, 고등학생 수는 131,123명(7.9%)으로 감소하였다.

이 중 시도별 초등학생 수는 경기도가 752,499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가 424,800명(15.7%), 그 외에는 모두 10% 미만에 해당되었다. 2018년까지의 추이를 볼 때, 전국 초등학생 수 대비 지역별 초등학생 수 비율은 인천, 세종, 경기, 충남, 경남, 제주가 약소하나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정체 내지는 낮아지고 있었다.

[그림 3-25]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1990~2018년)



자료: 교육부(각년도), 교육기본통계.

<표 3-16> 연도별·시도별 초등학교 학생 수 (1990~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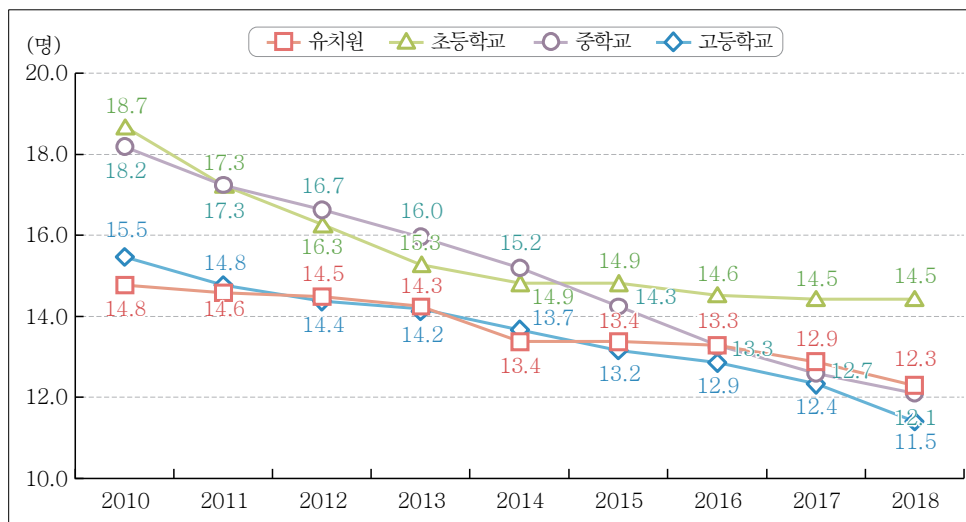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1990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전체	4,868,520 (100.0)	4,019,991 (100.0)	3,299,094 (100.0)	2,714,610 (100.0)	2,672,843 (100.0)	2,674,227 (100.0)	2,711,385 (100.0)
서울	1,141,839 (23.5)	759,443 (18.9)	566,149 (17.2)	450,675 (16.6)	436,121 (16.3)	428,333 (16.0)	424,800 (15.7)
부산	457,057 (9.4)	294,929 (7.3)	197,397 (6.0)	154,283 (5.7)	151,207 (5.7)	150,863 (5.6)	152,775 (5.6)
대구	255,071 (5.2)	216,465 (5.4)	167,548 (5.1)	129,583 (4.8)	125,541 (4.7)	124,708 (4.7)	125,160 (4.6)
인천	208,236 (4.3)	245,716 (6.1)	183,261 (5.6)	157,099 (5.8)	155,590 (5.8)	156,470 (5.9)	158,871 (5.9)
광주	134,493 (2.8)	126,820 (3.2)	115,827 (3.5)	91,862 (3.4)	89,095 (3.3)	88,189 (3.3)	88,622 (3.3)
대전	120,318 (2.5)	125,748 (3.1)	109,013 (3.3)	89,464 (3.3)	85,939 (3.2)	84,240 (3.2)	83,453 (3.1)
울산	0 (0.0)	106,554 (2.7)	81,678 (2.5)	66,134 (2.4)	65,629 (2.5)	66,016 (2.5)	67,290 (2.5)
세종	—	—	—	13,353 (0.5)	17,910 (0.7)	20,764 (0.8)	24,865 (0.9)
경기	656,022 (13.5)	889,034 (22.1)	848,135 (25.7)	733,359 (27.0)	727,380 (27.2)	733,941 (27.4)	752,499 (27.8)
강원	188,114 (3.9)	122,613 (3.1)	99,797 (3.0)	78,414 (2.9)	76,772 (2.9)	75,722 (2.8)	75,412 (2.8)
충북	153,273 (3.1)	124,176 (3.1)	105,026 (3.2)	85,290 (3.1)	84,052 (3.1)	84,240 (3.2)	85,344 (3.1)
충남	216,850 (4.5)	151,526 (3.8)	138,404 (4.2)	115,484 (4.3)	115,309 (4.3)	116,963 (4.4)	120,152 (4.4)
전북	240,029 (4.9)	159,683 (4.0)	126,869 (3.8)	100,260 (3.7)	97,895 (3.7)	97,383 (3.6)	97,606 (3.6)
전남	290,117 (6.0)	163,677 (4.1)	123,912 (3.8)	94,368 (3.5)	92,981 (3.5)	93,233 (3.5)	94,134 (3.5)
경북	317,812 (6.5)	217,710 (5.4)	164,230 (5.0)	129,743 (4.8)	127,825 (4.8)	127,642 (4.8)	129,290 (4.8)
경남	433,256 (8.9)	269,119 (6.7)	227,813 (6.9)	187,075 (6.9)	185,325 (6.9)	186,619 (7.0)	191,016 (7.0)
제주	56,033 (1.2)	46,778 (1.2)	44,035 (1.3)	38,164 (1.4)	38,272 (1.4)	38,901 (1.5)	40,096 (1.5)

자료: 교육부(각년도), 교육기본통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년 대비 각각 0.6명, 0.6명, 0.9명 감소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16.5명, 중학교가 14.7명, 고등학교가 13.8명으로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수보다 높은 편이다.

[그림 3-26] 교원 1인당 학생 수 (2010~2018년)



주: 1) 교원 1인당 학생 수 = 재적학생 수 / 교원 수

2) 교원에는 정규 교원(휴직 교원 포함)과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며, 퇴직교원과 강사는 제외됨

자료: 교육부(각년도), 교육기본통계.

<표 3-17> 교원 1인당 학생 수 (2016년)

(단위: 명)

구분	교원 1인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	16.5	14.7	13.8
OECD 평균	15.0	12.8	13.0

주: 교육통계에서는 교장, 교감 및 영양·사서·보건·전문상담교사를 포함하여 산출하나, OECD 통계에서는 수업담당 교원(교장·교감·사서·보건·전문상담교사 제외)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OECD Stat. <http://stats.oecd.org>.

10. 사교육비 총액과 월평균 사교육비

2018년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 5천억 원으로 전년 18조 7천억 원에 비해 8천억 원(4.4%) 증가하였다. 초등학생은 8조 6천억 원, 중학생은 5조 원, 고등학생 5조 9천억 원이고, 전년 대비 초등학생은 5.2%, 중학생은 3.5%, 고등학생은 3.9%로 모두 증가하였다. 월 평균 사교육비는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천 원으로 전년 27만 2천 원에 비해 1만 9천 원(7.0%)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 고등학생 32만 1천 원, 중학생 31만 2천 원, 초등학생 26만 3천 원 순이었고, 전년 대비 초등학생(3.7%)와 중학생(7.1%), 고등학생(12.8%) 모두 증가하였다.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전년(71.2%)에 비해 1.7%p 증가하였다.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상급학교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초등학생 82.5% → 중학생 69.6% → 고등학생 58.5%). 전년 대비 참여율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 각각 2.2%p, 2.6%p 증가한 반면, 초등학생은 0.1%p 감소하였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2시간으로 전년(6.1시간) 대비 0.1시간 증가하였다. 주당 참여시간은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 각각 6.5시간, 6.5시간, 5.3시간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참여시간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 각각 0.2시간, 0.4시간 증가하였다. 반면, 초등학생은 0.2시간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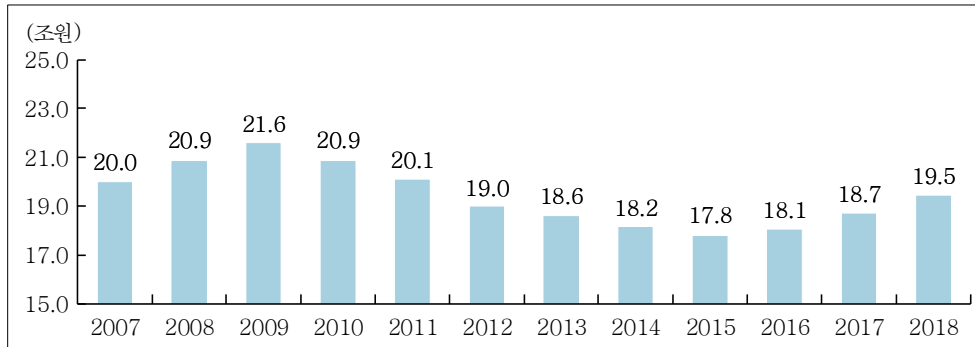
<표 3-18> 학생 사교육비 총액 규모 (2014~2018년)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	182,297	178,346	180,606	186,703	194,852	4.4
초등학교	75,949	75,287	77,438	81,311	85,531	5.2
중학교	55,678	52,384	48,102	48,297	49,972	3.5
고등학교	50,671	50,675	55,065	57,095	59,348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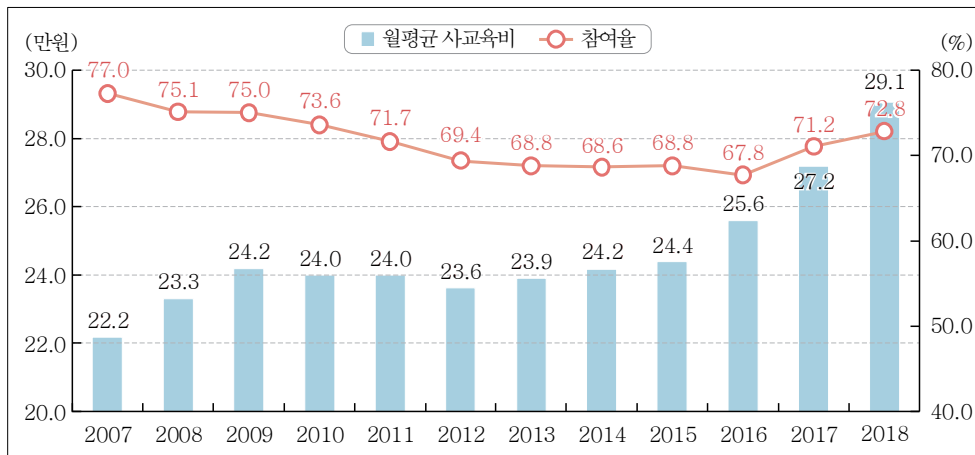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그림 3-27] 학생 사교육비 총액 규모 (2007~2018년)



자료: 통계청(각년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그림 3-28]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2007~2018년)



자료: 통계청(각년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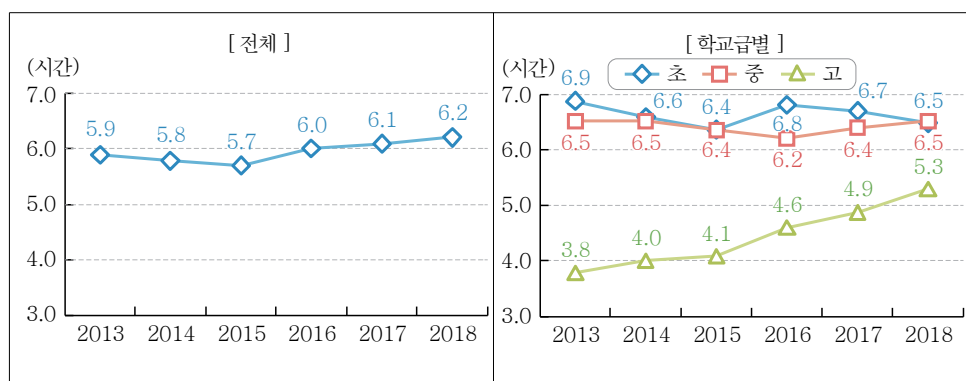
<표 3-19>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014~2018년)

(단위: 만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	24.2	24.4	25.6	27.2	29.1	7.0
초등학교	23.2	23.1	24.1	25.3	26.3	3.7
중학교	27.0	27.5	27.5	29.1	31.2	7.1
고등학교	23.0	23.6	26.2	28.5	32.1	12.8

자료: 통계청(각년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그림 3-29]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2013~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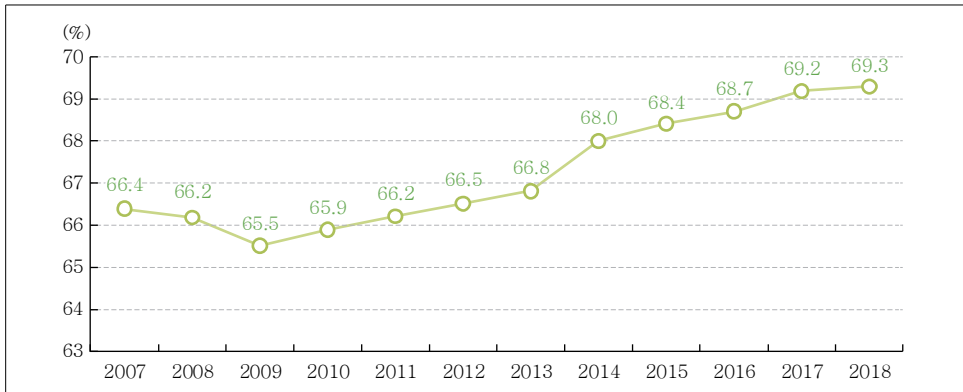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11.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경제활동에 참가한다는 것은 취업하고 있거나 혹은 실업자로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미세하게 감소하다가(2007년: 66.4%→2009년: 65.5%)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2010년: 65.9%→2018년: 69.3%). 2018년 기준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약 19.7%p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큰 격차에도 불구하고 2007년~2018년의 기간 동안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5~29세의 청년 인구의 경제활동은 관찰기간인 2013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였다(2007년: 46.5%→2013년: 42.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2013년: 42.9%→2018년: 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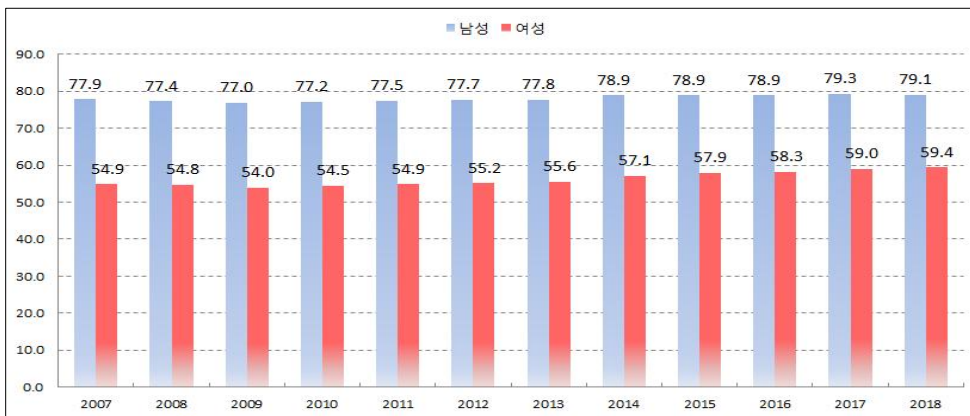
[그림 3-30] 연도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2007~2018년)



주: 경제활동참가율 = (15~64세 경제활동인구 ÷ 15~64세 인구) × 100
 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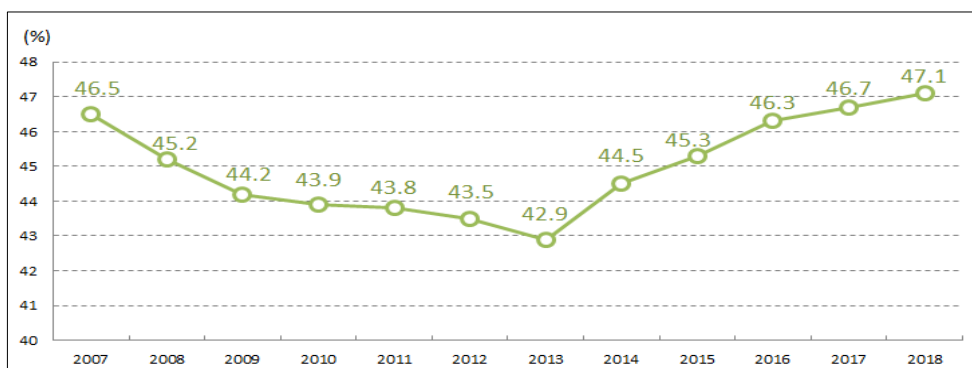
[그림 3-3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2007~2018년)

(단위: %)



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32] 연도별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2007~2018년)



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12. 고용률

2007~2018년 기간의 전체 고용률은 미세하게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약 2.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고용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고용률의 경우, 2007~2018년 기간에 대하여 다른 연령계층은 모두 결과적으로 증가한 양상이 나타난 반면, 15~29세의 청년 고용률은 2013년을 기점으로 최저점을 찍고 이후 지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013년: 39.5%→2018년: 42.7%). 또한 청년 고용률은 15세-29세가 42.7%, 30세-39세가 75.7%로 다른 연령층의 고용률 40세-49세 79%, 50세-59세 75.2%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3-20> 고용률 (2007~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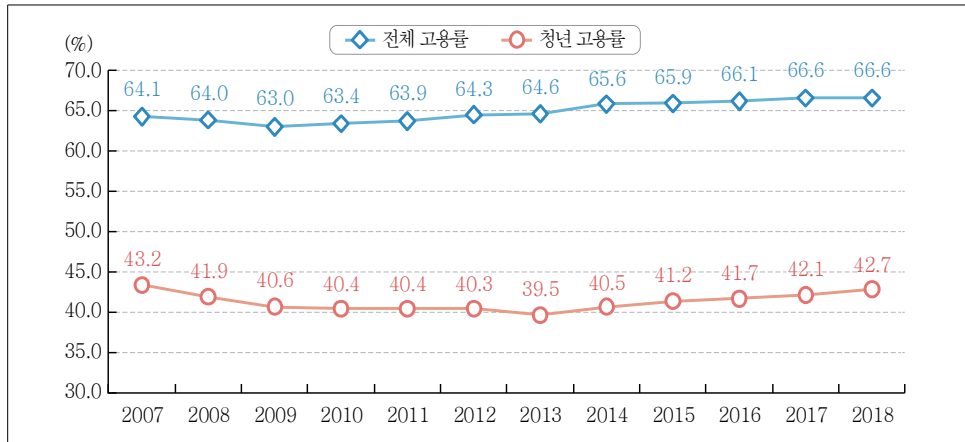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64.1	64.0	63.0	63.4	63.9	64.3	64.6	65.6	65.9	66.1	66.6	66.6
성별	남성	74.9	74.6	73.7	74.0	74.6	75.1	75.2	76.0	75.9	76.3	75.9
	여성	53.4	53.3	52.3	52.7	53.1	53.5	54.0	55.0	55.7	56.1	57.2
연령	15~29세	43.2	41.9	40.6	40.4	40.4	39.5	40.5	41.2	41.7	42.1	42.7
	30~39세	73.0	73.0	71.4	72.0	72.2	72.8	74.1	74.4	74.7	75.3	75.7
	40~49세	78.4	78.4	77.6	77.9	78.4	78.3	78.4	79.1	79.1	79.3	79.0
	50~59세	69.6	70.5	70.2	70.9	71.6	72.3	74.2	74.4	74.3	75.3	75.2
	60~64세	54.8	54.0	53.8	53.7	55.3	56.3	57.4	58.5	59.6	59.7	60.6

주: 고용률 = (15~64세 취업자수 ÷ 15~64세 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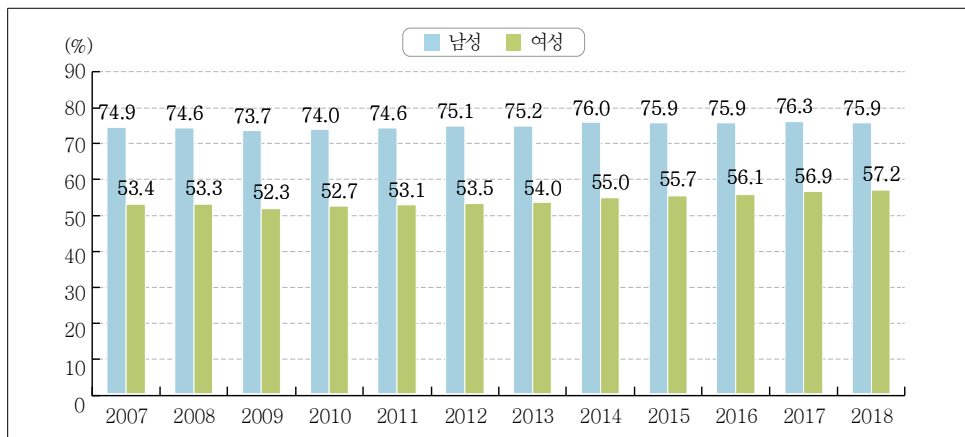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33] 전체 고용률 및 청년 고용률 (2007~2018년)



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34] 성별 고용률 (2007~2018년)



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13. 노인빈곤율

노인빈곤율은 전체 노인인구 중 빈곤선(전체 인구의 균등화소득¹⁾의 중위소득²⁾ 50%)보다 소득이 적은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2017년 노인빈곤율은 42.3%로 전년 대비 4.2%p 감소하였다. 전체 빈곤율 17.3%에 비해 노인빈곤율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

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8%('17년)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미국(23.1%), 멕시코(24.7%), 호주(23.2%)도 노인빈곤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표 3-21> 최근 10년간 노인빈곤율 현황 (2008~2017년)

(단위: %)

소득별	연령구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처분가능 소득*	65세 이상(韓)	44.1	45.9	46.3	47.6	47.2	48.1	47.4	44.8	46.5	42.3
	66세 이상 (국제기준)	45.5	47.0	47.2	48.6	48.5	49.6	48.8	45.7	47.7	44.0
	전체인구	15.2	15.3	14.9	15.2	14.6	14.6	14.4	13.8	14.7	17.3
시장 소득**	65세 이상(韓)	53.9	57.3	59.1	60.2	60.3	61.3	62.5	63.2	65.5	56.7
	66세 이상 (국제기준)	54.9	58.3	60.0	61.1	61.6	62.8	63.8	64.0	66.5	58.3
	전체인구	17.5	18.1	18.0	18.3	17.6	17.8	17.9	18.6	19.5	19.7

주: 2016년까지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수치, 2017년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분배지표 수치로 소득분배지표 산출 데이터 변경에 따른 해석에 주의 요망

* 처분가능소득: 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¹⁾-공적 지출²⁾

1)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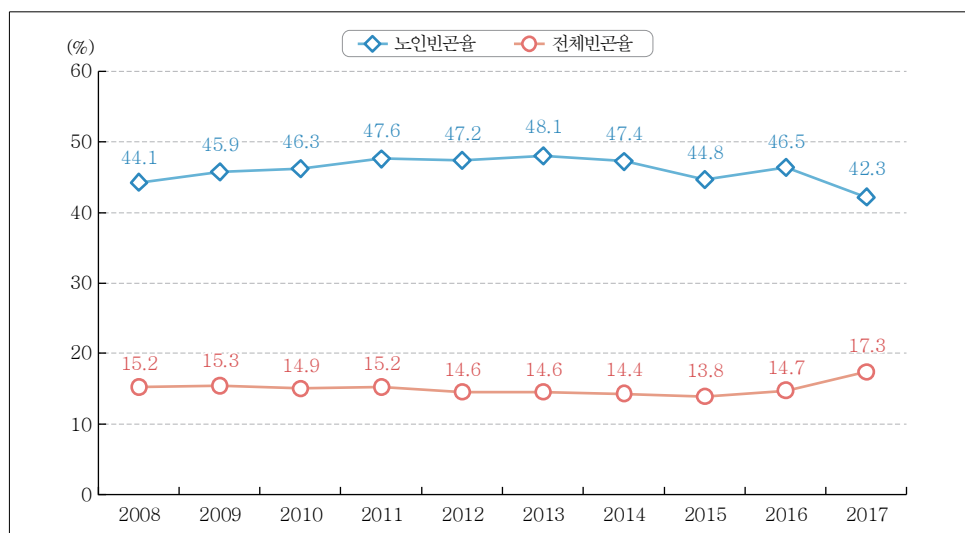
2) 공적 지출: 소득세,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

** 시장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통계청(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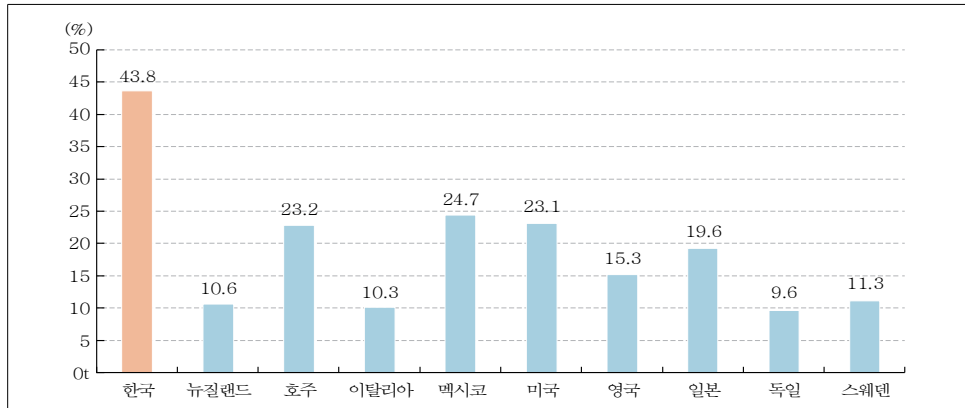
[그림 3-35] 노인빈곤율 추이 (2008~2017년)



자료: 통계청(각년도). 가계동향조사.

통계청(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3-36] OECD 주요국가 노인빈곤율 (최근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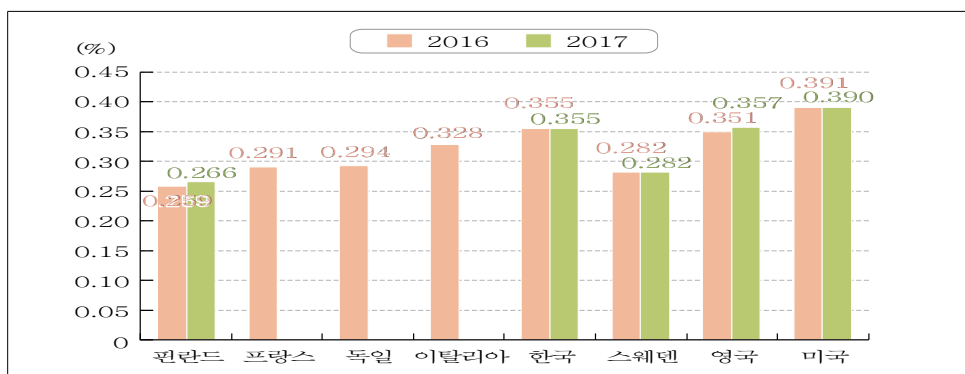
주: 노인 연령: 한국은 65세 이상, OECD는 66세 이상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소득은 일반적으로 처분가능소득, 부분적으로 시장소득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조사는 2016년 이전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사용, 2017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공식 소득분배지표 산출하였음.

자료: OECD Poverty rate (indicator). 연령 66세 이상 기준(2017년 기준, 뉴질랜드는 2014년, 일본은 2015년, 호주, 이탈리아, 멕시코, 독일은 2016년 기준)

14.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로서, 소득분배가 완전 평등한 경우 0, 완전 불평등한 경우 1을 나타낸다. 따라서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55이다. OECD의 주요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미국(0.390), 영국(0.357)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그림 3-37] OECD 주요 국가의 지니계수 (2016, 2017년)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Gini Coefficient. <https://data.oecd.org/>에서 2019. 11.26.인출.

15. 아동 자살률

아동·청소년 자살률(자살사망률)은 연간 고의적 자해(자살)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사망자의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값을 말하며 자살률은 그 나라의 정신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아동·청소년의 자살자 수 및 자살률을 살펴보면, 9세 이하의 저연령 아동의 자살자 수는 2009년 이후부터 2018년 사이에 인구 10만 명당 5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10-19세 사이의 10대 자살률은 2018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5.8명으로 나타났다.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2017년까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여자 청소년의 자살률이 5.9%로 남자 청소년 보다 0.1% 높아졌다. 아동·청소년의 자살자 수 및 자살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5-19세의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5-14세까지의 저연령 아동들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15-19세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2018년 인구 10만 명당 8.7명으로 10-14세 아동의 자살률 2.1명보다 4배 이상 높았다.

<표 3-22> 연령별 아동·청소년 자살률 (2009~2018년)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

연도	구분	전체				남자				여자			
		5-9세	10-14세	15-19세	10-19세	5-9세	10-14세	15-19세	10-19세	5-9세	10-14세	15-19세	10-19세
2009	자살자수	4	77	369	446	3	36	211	247	1	41	158	199
	자살률	0.1	2.3	10.7	6.5	0.2	2.0	11.5	6.9	0.1	2.6	9.8	6.2
2010	자살자수	0	61	292	353	0	27	165	192	0	34	127	161
	자살률	-	1.9	8.3	5.2	-	1.6	8.8	5.3	-	2.2	7.7	5.0
2011	자살자수	0	56	317	373	0	30	191	221	0	26	126	152
	자살률	-	1.8	8.9	5.5	-	1.8	10.1	6.2	-	1.7	7.6	4.8
2012	자살자수	1	47	289	336	1	27	163	190	0	20	126	146
	자살률	0.0	1.5	8.2	5.1	0.1	1.7	8.8	5.5	-	1.4	7.6	4.7
2013	자살자수	0	37	271	308	0	21	165	186	0	16	106	122
	자살률	-	1.3	7.9	4.9	-	1.4	9.1	5.6	-	1.2	6.5	4.1
2014	자살자수	2	31	243	274	2	20	154	174	0	11	89	100
	자살률	0.1	1.1	7.2	4.5	0.2	1.4	8.7	5.5	-	0.8	5.6	3.4
2015	자살자수	0	31	214	245	0	17	122	139	0	14	92	106
	자살률	-	1.2	6.5	4.2	-	1.3	7.1	4.6	-	1.1	5.9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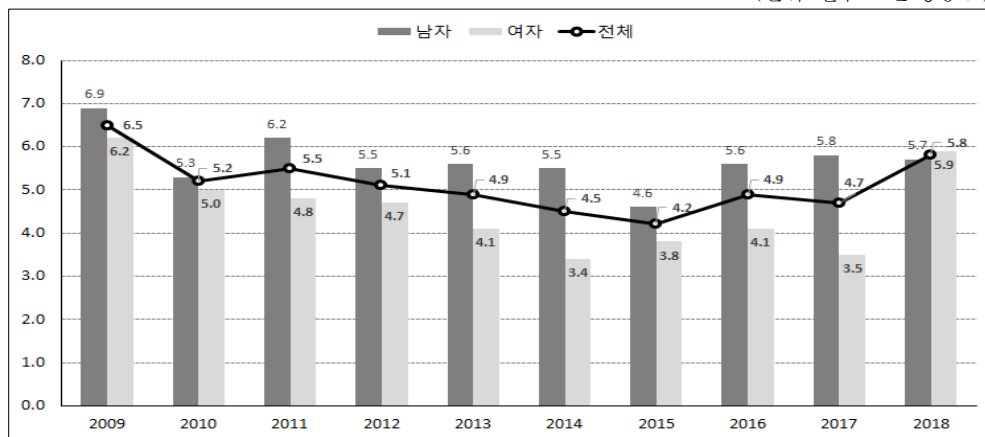
연도	구분	전체				남자				여자			
		5-9세	10-14세	15-19세	10-19세	5-9세	10-14세	15-19세	10-19세	5-9세	10-14세	15-19세	10-19세
2016	자살자수	0	22	251	273	0	12	150	162	0	10	101	111
	자살률	-	0.9	7.9	4.9	-	1.0	9.0	5.6	-	0.9	6.6	4.1
2017	자살자수	1	35	219	254	1	22	141	163	0	13	78	91
	자살률	0.0	1.5	7.2	4.7	0.1	1.8	8.9	5.8	-	1.2	5.4	3.5
2018	자살자수	1	49	251	300	1	25	128	153	0	24	123	147
	자살률	0.0	2.1	8.7	5.8	0.1	2.1	8.5	5.7	-	2.1	8.9	5.9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중앙자살예방센터 내부자료, 한국자살현황. <http://spckorea-stat.or.kr/korea02.do>. 20.01.23. 인출

주: 0-4세 자살자 수는 집계되지 않거나 0명임.

[그림 3-38] 성별 10대 자살률 (2009~2018년)

(단위: 인구 10만 명당 %)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중앙자살예방센터 내부자료, 한국자살현황. <http://spckorea-stat.or.kr/korea02.do>. 20.01.23. 인출

16. 노인자살률

노인자살률은 자살로 인한 노인 사망자 수를 그해의 연앙인구로 나눈 값을 말한다. 2018년 노인자살률은 48.6%로 2017년에 비해 0.9%p 상승하였다. 하지만 2009년과 비교하면 노인 자살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자살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65세 이상 남성 노인의 자살률이 2018년 82.2%이나 여성 노인의 자살률은 23.7%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연령 상승과 성별(남성)은 노인자살 대책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23> 10년간 노인 자살률 (2009~2018년)

(단위: 10만 명당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65 - 69세	57.0	60.0	54.0	45.8	42.2	38.5	37.1	36.1	31.0	33.3
	70 - 74세	71.0	76.1	76.5	67.4	59.5	51.1	54.9	48.5	41.6	39.9
	75 - 79세	91.6	94.7	96.1	81.5	77.7	66.5	72.5	61.0	57.3	59.3
	80 - 84세	117.2	112.2	110.1	95.3	83.6	75.1	81.5	72.7	68.7	70.7
	85 - 89세	149.9	144.9	126.8	112.3	102.3	84.2	85.2	84.0	76.5	66.2
	90세 이상	127.1	129.7	129.1	135.2	134.5	83.7	91.6	93.2	61.6	73.2
	65세 이상	78.8	81.9	79.7	69.8	64.2	55.5	58.6	53.3	47.7	48.6
남자	65 - 69세	90.1	93.0	84.9	71.7	67.0	61.0	57.6	57.4	48.9	54.5
	70 - 74세	112.7	124.1	127.5	105.3	96.5	79.9	88.9	77.6	67.6	64.6
	75 - 79세	144.8	153.9	169.2	132.7	133.0	111.2	127.1	107.9	99.9	106.7
	80 - 84세	201.8	195.9	196.3	156.7	143.6	133.2	149.0	136.4	132.9	137.3
	85 - 89세	236.8	262.8	230.4	216.8	207.5	158.9	169.0	172.6	144.9	132.8
	90세 이상	233.2	306.3	244.5	271.4	251.3	177.2	214.1	203.8	165.9	166.3
	65세 이상	120.1	128.5	128.6	107.7	102.3	87.9	95.2	87.5	78.9	82.2
여자	65 - 69세	29.0	31.7	27.2	22.9	20.0	18.0	18.2	16.4	14.4	13.7
	70 - 74세	40.4	40.2	37.7	38.0	30.4	28.3	27.6	24.6	20.0	18.9
	75 - 79세	61.4	59.9	51.4	49.3	42.0	36.9	35.5	28.7	27.2	25.3
	80 - 84세	79.4	74.9	71.6	67.3	55.3	46.7	47.1	38.9	33.6	33.3
	85 - 89세	117.0	100.7	88.5	74.0	64.2	57.2	54.8	51.6	50.7	40.2
	90세 이상	98.8	81.3	97.4	97.6	102.0	57.3	57.1	62.6	33.1	47.9
	65세 이상	50.8	50.1	46.1	43.5	37.3	32.4	32.1	28.4	24.7	23.7

주: 사고율 = 10만 명당 사고자수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17. 노인학대율

2018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는 총 5,188명으로 2009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에 학대사례가 전체 접수된 사례의 43.4%였던 것이 2018년에는 33.5%로 변화하였다. 2018년 학대사례 5,188건 중 재학대는 488건이었으며 전체 학대사례의 9.4%가 재학대였다. 재학대 건수는 2009년과 비교해 증가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3-24> 연도별 학대 신고 접수 건수 (2009~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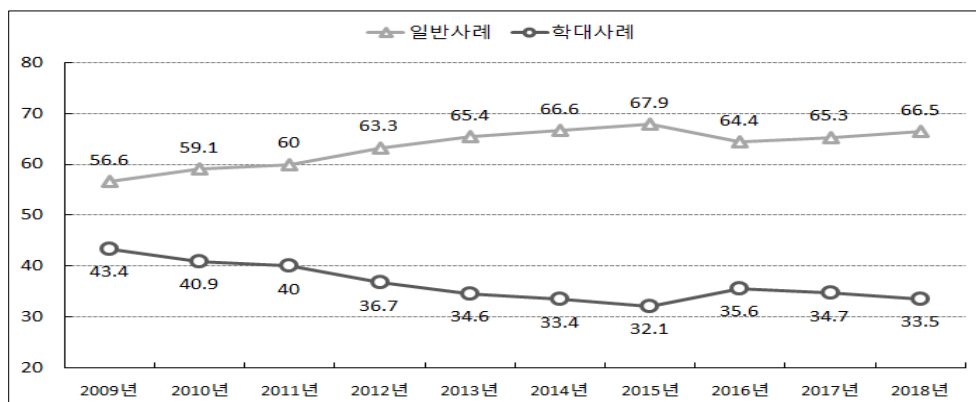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대 사례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	43.4	40.9	40	36.7	34.6	33.4	32.1	35.6	34.7	33.5
증감률	12.9	14.7	12.2	-0.5	2.8	0.3	8.1	12.1	8.0	12.2
전체 사례	6,159	7,503	8,603	9,340	10,162	10,569	11,905	12,009	13,309	15,482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증감률	17.2	21.8	14.7	8.6	8.8	4.0	12.6	0.9	10.8	16.3

자료: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8).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 173.

[그림 3-39] 연도별 학대 신고 접수 건수 (2009~2018년)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8).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표 3-25>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2009~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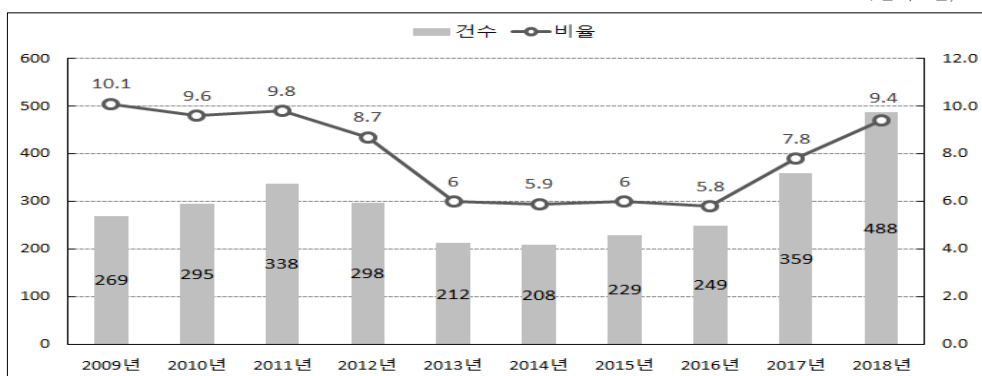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대사례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4,280	4,622	5,188
재학대	건수	269	295	338	298	212	208	229	249	488
	비율	10.1	9.6	9.8	8.7	6	5.9	6	5.8	9.4
증감률	23.4	9.7	14.6	-11.8	-28.9	-1.9	10.1	8.7	44.2	35.9

자료: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8).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 174.

[그림 3-40] 연도별 재학대 건수 및 비율 (2009~2018년)

(단위: 건, %)



자료: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8).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 174.

18.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도움 정도 및 중요도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기혼 여성의 인지도, 도움 정도 및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임신·출산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9.9%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해당정책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4.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해당정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도움정도를 질문한 결과 5점 만점에 4.2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인지도는 88.4%였고 중요도는 5점 만점에 4.5점, 해당 정책의 도움정도는 5점 만점에 4.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26>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인지율, 도움 정도 및 중요도 (2018년)

(단위: %, 점, 명)

구분	인지율	(명)	도움 정도 평균	(명)	중요도 평균	(명)
임신·출산 비용 지원(국민행복카드)	99.9	(1,784)	4.2	(1,779)	4.8	(1,78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88.4	(1,784)	4.3	(483)	4.5	(1,570)

주 : 1)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에 한하여 분석함.
2) 도움 정도는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분석하였으며, ‘전혀 도움받지 못함’ 1점, ‘별로 도움받지 못함’ 2점, ‘보통’ 3점, ‘다소 도움’ 4점, ‘매우 도움’을 5점으로 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음.
3) 중요도는 해당 정책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하였으며,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 ‘별로 중요하지 않음’ 2점, ‘보통’ 3점, ‘다소 중요’ 4점, ‘매우 중요’를 5점으로 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음.
자료: 이소영 외(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제3절 정책분야 통계

1. 청년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면 고용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고용형태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2009년에서 2018년까지의 연령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다른 연령집단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15세-29세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9년 33.9%에서 2018년 34.6%로 증가한 경향이 있다.

<표 3-27> 성별·연령별 비정규직 비율 (2009~2018년)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34.8	33.2	34.2	33.2	32.5	32.2	32.4	32.8	32.9	33.0
성	남성	28.1	26.9	27.7	27.0	26.4	26.4	26.4	26.3	26.3	26.3
	여성	44.0	41.7	42.9	41.4	40.6	39.9	40.2	41.1	41.2	41.4
연령 집단	15-29세	33.9	33.3	34.0	33.8	34.0	34.7	35.1	35.2	35.7	34.6
	30-39세	25.2	23.4	24.4	23.1	22.2	21.8	21.2	21.1	20.6	21.0
	40-49세	32.3	29.7	30.5	29.1	27.2	26.6	26.0	26.1	26.0	25.3
	50-59세	40.6	39.3	39.7	37.5	37.1	34.6	34.6	34.2	33.9	34.0
	60세 이상	72.6	69.7	70.6	70.4	67.3	68.5	67.2	67.9	67.3	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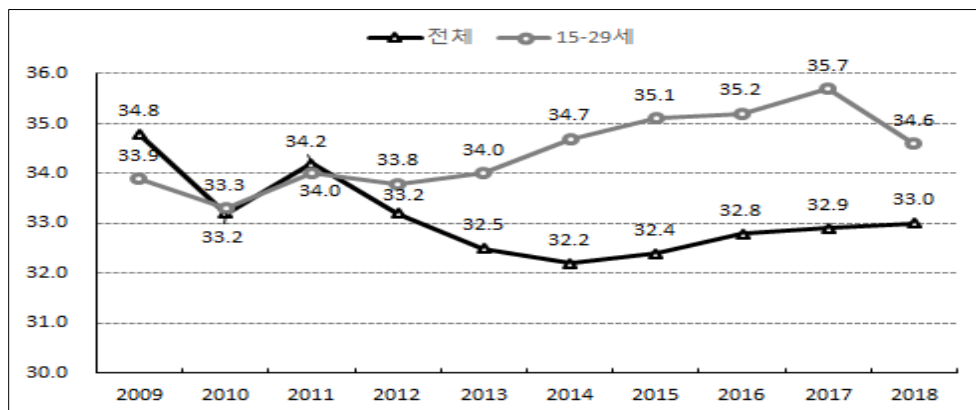
주: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 (비정규직근로자수/전체 임금근로자수)×100.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그림 3-41] 연도별 전체 비정규직 비율 및 청년 비정규직 비율 (2009~2018년)

(단위: %)



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 최저주거기준 미충족률

최저주거기준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에 의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침실, 시설을 기준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조건을 정해놓는 것을 말한다.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해당한다. 면적기준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4인 가구는 주거면적 43㎡에 방 3개를 최저기준으로 본다.

2010년에는 최저주거기준 미충족률은 조사가구 중 16.6%에 해당하였으나 2018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4%를 나타내었다.

<표 3-28> 최저주거기준 미충족률 (2010~2018년)

(단위: %, 인, 개, m²)

최저주거기준 미충족률							침실기준 및 면적기준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가구원수(인)	방수(개)	면적(m²)
전체	16.6	12.7	10.6	7.2	5.4	5.4	1	1	14
							2	1	26
							3	2	36
만 65세 이상	-	-	-	-	5.3	4.1	4	3	43
							5	3	46
							6	4	55

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 총가구수) × 100

자료: 국토교통부(각년도), 주거실태조사.

3.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산부들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에 소요되는 진료비(현금 급여에 해당)를 말하며 2009년에는 102,916,289천 원이었던 것이 증감을 반복하다 2018년에는 188,788,030천 원으로 나타났다.

<표 3-29> 연도별 임신·출산진료비 (2009-2018년, 연도별 보험)

(단위: 천 원)

연도	임신·출산 진료비
2009	102,916,289
2010	119,214,241
2011	166,438,616
2012	210,410,037
2013	237,636,988
2014	234,719,325
2015	230,115,141
2016	215,362,021
2017	186,839,803
2018	188,788,030

주: 임신·출산 진료건수는 예탁금 형식으로 불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각년도). 건강보험통계: 연도별 보험급여 실적.

4. 아동 1인당 진료비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한 금액을 말하며, 아동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0세-4세가 2,709,440,162천 원, 5세-9세가 1,754,238,014천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세-14세와 15세-19세 아동의 1인당 진료비 보다 높은 금액이다.

<표 3-30> 연령별 1인당 연간 진료비 크기별 실인원 및 진료비 현황 (2018년)

(단위: 명, 천원)

진료비 구간별 (천원)	0 - 4세		5 - 9세		10 - 14세		15 - 19세	
	실인원 (명)	진료비 (천원)	실인원 (명)	진료비 (천원)	실인원 (명)	진료비 (천원)	실인원 (명)	진료비 (천원)
계	1,966,630	2,709,440,162	2,255,561	1,754,238,014	2,179,155	1,135,703,910	2,512,590	1,261,888,543
1,000 이하	1,149,604	615,931,972	1,774,443	819,545,481	1,968,305	619,092,161	2,285,840	620,628,450
1,000 초과 2,000 이하	558,209	776,640,679	365,844	495,086,484	143,044	196,033,293	141,804	194,833,460
2,000 초과 3,000 이하	147,074	353,163,418	75,093	179,071,070	37,851	90,785,121	40,135	97,439,506
3,000 초과 4,000 이하	49,576	169,743,681	21,045	71,729,349	13,971	47,840,701	18,919	64,933,924
4,000 초과 5,000 이하	20,617	91,352,979	7,717	34,170,791	5,416	23,992,727	8,442	37,540,080
5,000 초과 10,000 이하	24,330	162,517,165	8,056	52,811,261	7,144	48,640,061	12,137	81,031,493
10,000 초과	17,220	540,090,265	3,363	101,823,578	3,424	109,319,844	5,313	165,481,629

주: 실인원(진료실 인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실제 진료받은 환자 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각년도). 건강보험통계.

아동 1인당 진료비는 0세가 2,893,760원, 1세-4세가 1,210,158원으로 5세에서 19세까지의 아동의 1인당 진료비보다 높은 편이다. 영유아기의 1인당 진료비가 다른 연령대의 아동보다 비교적 많이 투입됨을 알 수 있다.

<표 3-31> 연령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진료현황 (2018년)

(단위: 천 명, 억 원, 천 일, 일, 원)

구분	건강보험적용대상자 (천 명)	요양급여비용 (억 원)	입내원일수 (천 일)	1인당 진료일수 (일)	1인당 진료비 (원)
전체	51,072	779,141	1,053,795	20.63	1,525,575
0세	317	9,182	11,061	34.86	2,893,760
1~4세	1,658	20,063	56,048	33.81	1,210,158
5~9세	2,299	16,781	42,853	18.64	729,958
10~14세	2,269	11,002	24,674	10.88	484,933
15~19세	2,704	12,903	25,075	9.27	477,229

주: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1인당 진료비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는 매년 12월 말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이며, 진료일수는 총 입(내)원일수-약국 내
 원일수, 1인당 진료일수는 진료일수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 1인당 진료비는 요양급여비용⁶⁾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수이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8). 건강보험진료통계.

5.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이용 아동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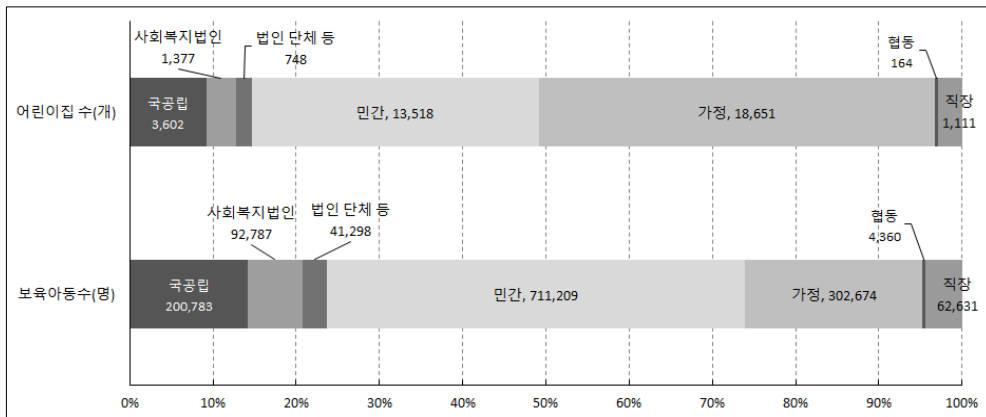
어린이집 시설수와 이용 아동수는 어린이집의 현황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보육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전체 어린이집 수는 2014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는데, 2018년 말 기준 39,171개소로 전년 대비 2.7% 감소하였다. 설립유형별(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가정, 직장) 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각각 18,651개소(47.6%), 13,518개소(34.5%)로 가장 높았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9.2%(3,602개소)였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오다 2015년부터 감소 경향에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1,416천 명으로 2017년 대비 2.4% 감소하였다.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은 시설수와 아동수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림 3-42] 어린이집 유형별 시설 및 아동수 (2018년)

(단위: 개소, 명)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8년 보육통계.

6)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으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 제1항에 따라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및 이송에 대한 비용을 말함(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표 3-32> 어린이집 시설수 및 아동수 현황 (2011~2018년)

(단위: 개소,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어린이집수	전체	39,842 (100.0)	42,527 (100.0)	43,770 (100.0)	43,742 (100.0)	42,517 (100.0)	41,084 (100.0)	40,238 (100.0)	39,171 (100.0)
	(전년대비, %)	(4.8)	(6.7)	(2.9)	(-0.1)	(-2.8)	(-3.4)	(-2.1)	(-2.7)
	국공립	2,116 (5.3)	2,203 (5.2)	2,332 (5.3)	2,489 (5.7)	2,629 (6.2)	2,859 (7.0)	3,157 (7.8)	3,602 (9.2)
	사회복지법인	1,462 (3.7)	1,444 (3.4)	1,439 (3.3)	1,420 (3.2)	1,414 (3.3)	1,402 (3.4)	1,392 (3.5)	1,377 (3.5)
	법인 단체 등	870 (2.2)	869 (2.0)	868 (2.0)	852 (1.9)	834 (2.0)	804 (2.0)	771 (1.9)	748 (1.9)
	민간	14,134 (35.5)	14,440 (34.0)	14,751 (33.7)	14,822 (33.9)	14,626 (34.4)	14,316 (34.8)	14,045 (34.9)	13,518 (34.5)
	가정	20,722 (52.0)	22,935 (53.9)	23,632 (54.0)	23,318 (53.3)	22,074 (51.9)	20,598 (50.1)	19,656 (48.8)	18,651 (47.6)
	협동	89 (0.2)	113 (0.3)	129 (0.3)	149 (0.3)	155 (0.4)	157 (0.4)	164 (0.4)	164 (0.4)
	직장	449 (1.1)	523 (1.2)	619 (1.4)	692 (1.6)	785 (1.8)	948 (2.3)	1,053 (2.6)	1,111 (2.8)
보육아동수	전체	1,348,729 (100.0)	1,487,361 (100.0)	1,486,980 (100.0)	1,496,671 (100.0)	1,452,813 (100.0)	1,451,215 (100.0)	1,450,243 (100.0)	1,415,742 (100.0)
	(전년대비, %)	5.4	10.3	0.0	0.7	-2.9	-0.1	-0.1	-2.4
	국공립	143,035 (10.6)	149,677 (10.1)	154,465 (10.4)	159,241 (10.6)	165,743 (11.4)	175,929 (12.1)	186,916 (12.9)	200,783 (14.2)
	사회복지법인	112,688 (8.4)	113,049 (7.6)	108,834 (7.3)	104,552 (7.0)	99,715 (6.9)	99,113 (6.8)	96,794 (6.7)	92,787 (6.6)
	법인 단체 등	50,676 (3.8)	51,914 (3.5)	51,684 (3.5)	49,175 (3.3)	46,858 (3.2)	45,374 (3.1)	43,404 (3.0)	41,298 (2.9)
	민간	706,647 (52.4)	768,256 (51.7)	770,179 (51.8)	775,414 (51.8)	747,598 (51.5)	745,663 (51.4)	738,559 (50.9)	711,209 (50.2)
	가정	308,410 (22.9)	371,671 (25.0)	364,113 (24.5)	365,250 (24.4)	344,007 (23.7)	328,594 (22.6)	321,608 (22.2)	302,674 (21.4)
	협동	2,286 (0.2)	2,913 (0.2)	3,226 (0.2)	3,774 (0.3)	4,127 (0.3)	4,240 (0.3)	4,508 (0.3)	4,360 (0.3)
	직장	24,987 (1.9)	29,881 (2.0)	34,479 (2.3)	39,265 (2.6)	44,765 (3.1)	52,302 (3.6)	58,454 (4.0)	62,631 (4.4)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

6.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현황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으로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하며,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설치의무가 있어 단독 또는 공동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보육하는 형태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3,602개소로 전체 어린이집(39,171개소)의 9.2% 수준이며, 직장어린이집은 1,111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2.8%를 차지하였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그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전체 어린이집 정원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13.3%, 직장어린이집 4.7%로 이전에 비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개소수와 정원 대비 비중은 절대량 측면에서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원 규모별 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50~80명에 상당수가 집중되어 있으며 161명 이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40~80명대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표 3-33> 정원 규모별 국·공립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2011~2018년)

(단위: 개소,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 공 립 어 린 이 집	전체(개소)	2,116	2,203	2,332	2,489	2,629	2,859	3,157	3,602
	20명 이하	48	53	68	75	85	190	325	390
	21~39명	287	301	322	355	376	402	432	554
	40~49명	283	300	330	361	388	418	468	555
	50~80명	719	759	795	845	894	957	1,014	1,149
	81~99명	432	441	468	497	522	542	558	593
	100~160명	300	299	297	303	311	297	307	309
	161~200명	34	37	39	39	39	39	39	40
	201~240명	9	8	9	10	10	10	10	8
	241~300명	4	5	4	4	4	4	4	4
	300명 초과	0	0	0	0	0	0	0	0
	전체 어린이집 정원 대비 비중(%)	9.7	9.5	9.5	10.0	10.5	11.2	11.9	13.3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직 장 어 린 이 집	전체	449	523	619	692	785	948	1,053	1,111
	20명 이하	43	48	55	60	64	91	105	112
	21~39명	81	90	111	120	130	147	162	158
	40~49명	114	138	171	176	200	235	256	276
	50~80명	81	97	121	142	168	211	233	247
	81~99명	54	60	61	71	79	100	120	130
	100~160명	41	46	48	63	74	88	94	101
	161~200명	15	18	19	23	30	33	39	37
	201~240명	6	6	11	11	15	16	17	19
	241~300명	12	18	20	24	23	25	25	29
	300명 초과	2	2	2	2	2	2	2	2
	전체 어린이집 정원 대비 비중(%)	2.0	2.2	2.5	2.9	3.3	3.9	4.4	4.7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

7.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남녀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일·가정 양립의 실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이다. 2008년에서 2018년 사이 남녀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2018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5시간으로 전년보다 1.3시간 감소하였다. 근로시간별로 살펴보면,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21만 명으로 남녀 각각 39만 1천 명, 40만 6천 명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20만 9천 명으로 남녀 각각 41만 1천 명, 31만명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일·가정 양립 정책 실현 정도에 부여하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OECD 국가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OECD 주요국의 취업자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8년 기준 1,734시간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취업자 연평균 근로시간 1,993시간에 비해 짧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2,163시간에서 2018년 1,993시간으로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길다.

<표 3-34>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근로시간별 취업자 수 (2008~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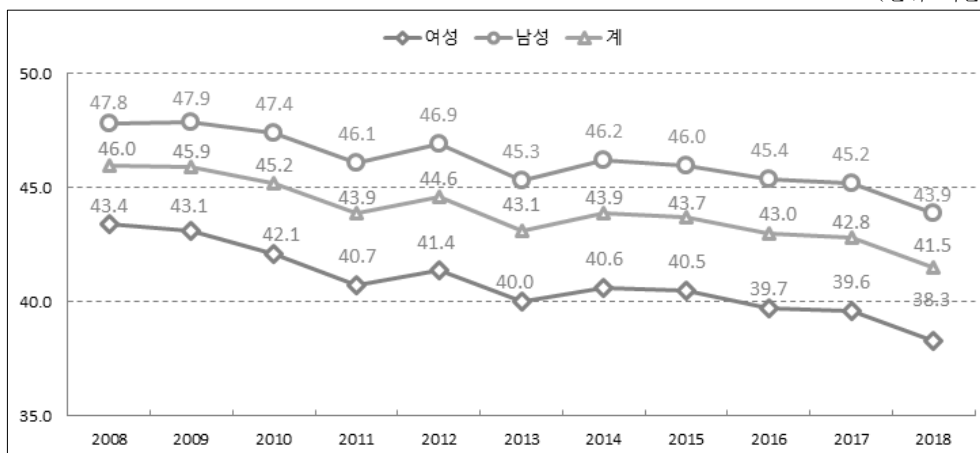
(단위: 시간, 천 명)

구분	주당 평균 근로시간			근로시간별 취업자 수					
				주 36시간 미만			주 36시간 이상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008	46.0	47.8	43.4	3,461	1,538	1,923	19,962	12,135	7,827
2009	45.9	47.9	43.1	3,126	1,283	1,842	20,195	12,380	7,815
2010	45.2	47.4	42.1	3,637	1,511	2,127	20,020	12,364	7,657
2011	43.9	46.1	40.7	4,575	2,055	2,521	19,527	12,098	7,430
2012	44.6	46.9	41.4	3,650	1,478	2,173	20,891	12,923	7,969
2013	43.1	45.3	40.0	4,730	2,073	2,657	20,155	12,510	7,646
2014	43.9	46.2	40.6	3,984	1,576	2,408	21,501	13,314	8,187
2015	43.7	46.0	40.5	4,006	1,564	2,442	21,766	13,434	8,333
2016	43.0	45.4	39.7	4,487	1,760	2,727	21,509	13,327	8,182
2017	42.8	45.2	39.6	4,413	1,714	2,699	21,930	13,519	8,411
2018	41.5	43.9	38.3	5,210	2,105	3,105	21,209	13,108	8,101

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43] 전체 및 성별 취업자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08~2018년)

(단위: 시간)



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3-35> OECD 주요 국가의 취업자 연평균 근로시간 (2010~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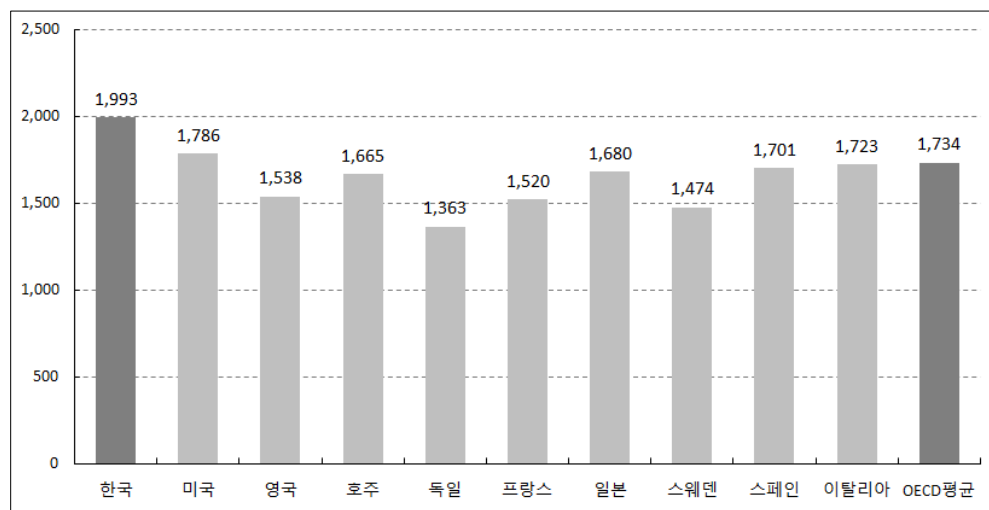
(단위: 시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	2,163	2,136	2,119	2,106	2,076	2,083	2,068	2,018	1,993
미국	1,773	1,780	1,783	1,781	1,784	1,785	1,781	1,780	1,786
영국	1,506	1,518	1,531	1,541	1,547	1,531	1,545	1,543	1,538
호주	1,700	1,700	1,693	1,689	1,683	1,684	1,673	1,675	1,665
독일	1,390	1,393	1,375	1,363	1,367	1,370	1,363	1,360	1,363
프랑스	1,540	1,546	1,541	1,526	1,518	1,519	1,526	1,522	1,520
일본	1,733	1,728	1,745	1,734	1,729	1,719	1,714	1,709	1,680
스웨덴	1,494	1,491	1,478	1,470	1,470	1,471	1,482	1,470	1,474
스페인	1,710	1,716	1,701	1,694	1,695	1,700	1,702	1,690	1,701
이탈리아	1,777	1,773	1,734	1,720	1,717	1,718	1,722	1,719	1,723
OECD평균	1,751	1,750	1,748	1,744	1,742	1,743	1,743	1,737	1,734

자료: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database): Hours Worked. <https://data.oecd.org/>에서 2019. 11.26.인출.

[그림 3-44] OECD 주요 국가의 취업자 연평균 근로시간 (2018년)

(단위: 시간)



자료: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database): Hours Worked. <https://data.oecd.org/>에서 2019. 11.26.인출.

8. 여성 전문·관리직 종사자⁷⁾ 구성비

여성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구성비는 여성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변동 추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여성권한척도 측정 및 여성인력개발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여성 취업자 수는 2009년 9,847명에서 2018년 11,450천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여성취업자 중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2018년 기준으로 23.6%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6> 여성 전문·관리직 종사자 구성비 (2008~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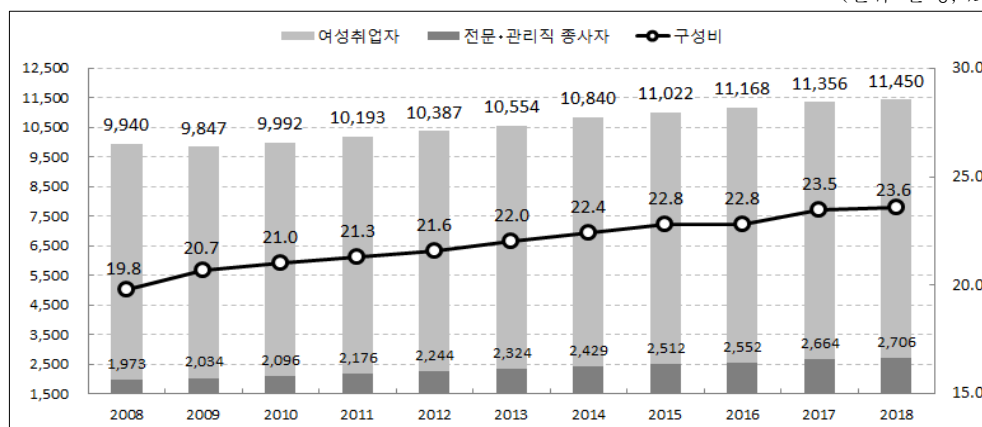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여성 취업자	9,847	9,992	10,193	10,387	10,554	10,840	11,022	11,168	11,356	11,450
전문·관리직 종사자	2,034	2,096	2,176	2,244	2,324	2,429	2,512	2,552	2,664	2,706
구성비	20.7	21.0	21.3	21.6	22.0	22.4	22.8	22.8	23.5	23.6

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45] 여성 전문·관리직 종사자 구성비 (2008~2018년)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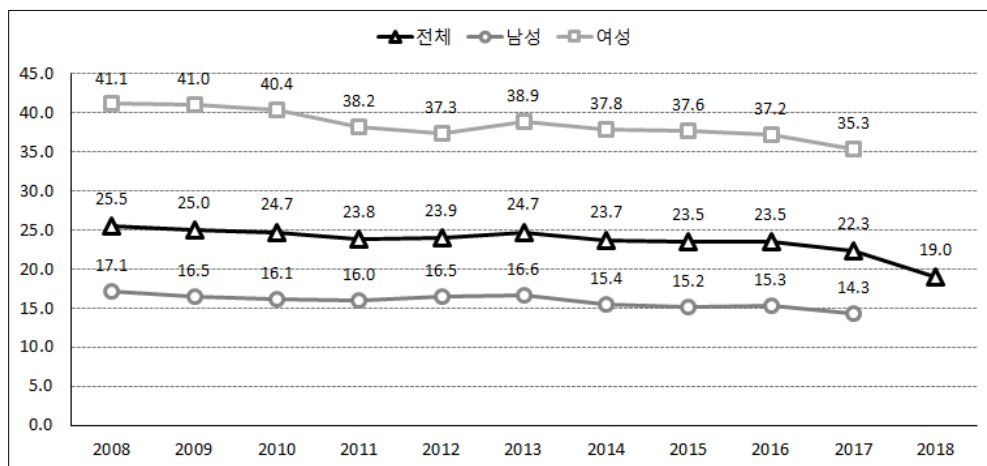
7) 한국표준직업분류 6차 개정(2007년) 기준에 따른 것으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의미함.

9. 저임금근로자 비율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임금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핵심지표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월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면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근로빈곤에 처해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08년 25.5%에서 2018년 19.0%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지만 저임금근로자의 성별 격차는 여전히 크다. 2017년 기준 남성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4.3%인데 반해 여성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비율은 35.3%에 달한다. 국제적으로 한국은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22.3%)은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미국(24.5%) 다음으로 높다. 덴마크나 핀란드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한국의 1/3수준에 불과하다.

[그림 3-46] 성별 저임금근로자비율 (2008~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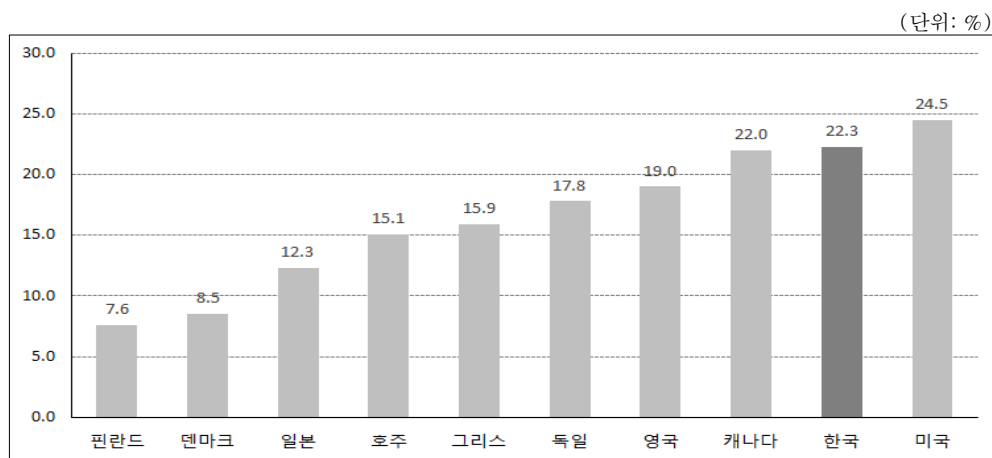
(단위: %)



주: 저임금근로자비율 =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 임금근로자수 ÷ 전체 임금근로자수) × 100

자료: OECD Earnings. <https://stats.oecd.org>,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에서 2019. 5. 1 인출.

[그림 3-47] OECD 저임금근로자 비율 (2017년)



주: 저임금근로자비율 =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 임금근로자수 ÷ 전체 임금근로자수) × 100

자료: 자료: OECD Earnings. <https://stats.oecd.org>,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에서 2019. 5. 1 인출.

10.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여성의 고용률은 2009년 47.8%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8년 현재 50.9%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8년 기준, 40-49세의 고용률이 65.7%로 가장 높았고, 50-59세가 63.5%로 뒤를 이었으며 30-39세(60.7%), 60-64세(47.2%), 15-29세(44.6%), 65세 이상(24.0%) 순으로 나타났다.

15-29세 여성 고용률은 2009년 41.9%에서 2013년 41.0%까지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하여 2018년 44.6%로 나타났다. 15-29세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2009~2018년 기간 동안 모두 고용률이 증가하였으며, 30-39세 여성의 고용률이 2009년 52.8%에서 2018년 60.7%로 가장 급격히 증가하였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 속하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30~40대의 고용률이 70~80%대로 높은 역 U자형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 출산율이 낮은 일본과 한국의 경우 30~40대 여성들의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떨어지는 M자형 곡선 형태로 나타났고, 특히 한국의 경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탈이 일어나는 30대 후반의 여성고용률은 50%대 수준으로 일본에 비해서도 약 13% 낮은 수준이다.

<표 3-37>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2009~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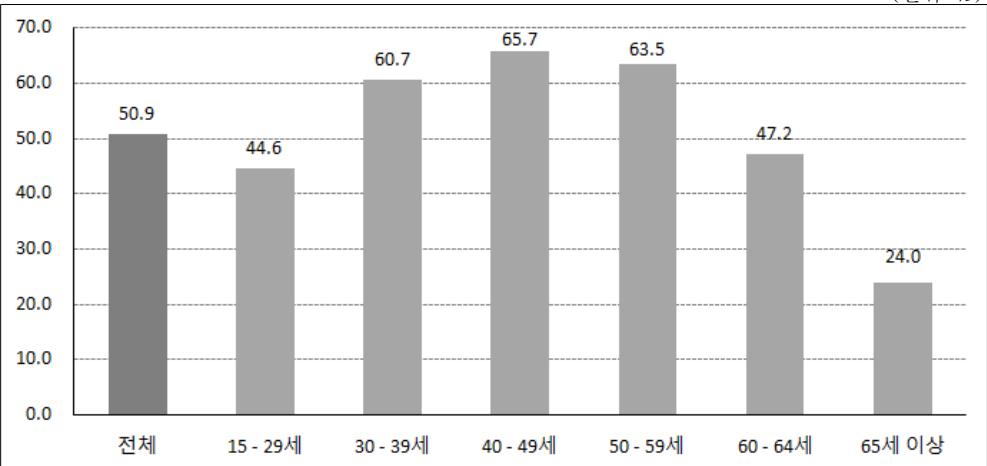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47.8	47.9	48.3	48.6	48.9	49.7	50.1	50.3	50.8	50.9
15 - 64세	52.3	52.7	53.1	53.5	54.0	55.0	55.7	56.1	56.9	57.2
15 - 29세	41.9	41.9	41.8	41.8	41.0	42.2	42.9	43.4	44.0	44.6
30 - 39세	52.8	53.8	53.8	54.6	55.5	56.3	56.9	58.2	59.4	60.7
40 - 49세	64.1	64.2	64.9	64.6	64.6	65.1	65.7	65.8	66.0	65.7
50 - 59세	56.1	56.9	57.8	58.2	59.6	61.0	61.8	61.7	62.9	63.5
60 - 64세	41.2	40.4	41.5	43.3	44.6	45.8	47.5	48.1	48.4	47.2
65세 이상	22.3	21.4	21.5	22.5	22.9	23.4	22.7	23.0	23.5	24.0

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48]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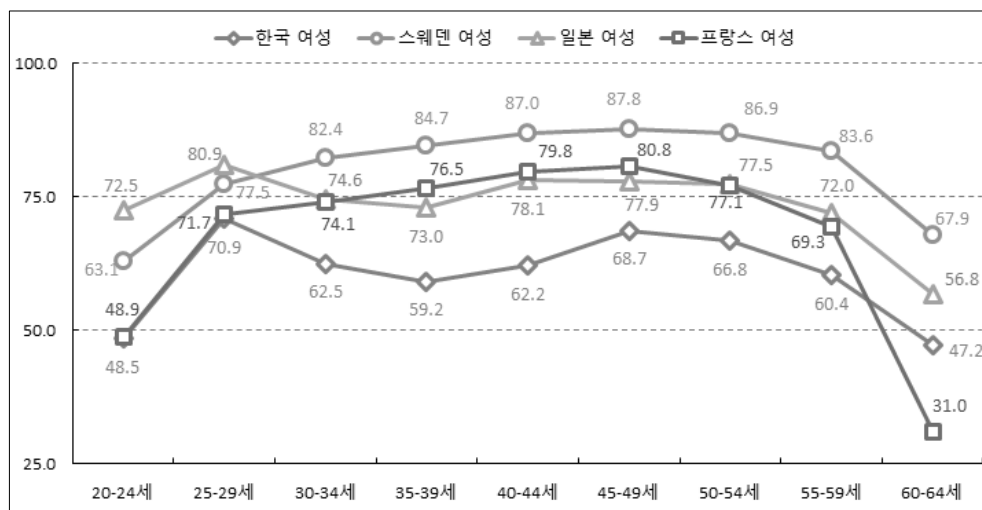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49]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국제비교 (2018년)

(단위: %)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https://data.oecd.org/> 에서 2019. 11.26.인출.

11. 기혼자의 성별 일평균 가사노동시간

2014년 기혼자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51분으로 2시간 30분 정도이다. 가사노동 중 가정관리 시간이 118분으로 약 2시간가량이며 가족 및 가구원을 돌보는 시간은 33분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사노동시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이 보여진다. 성별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은 가사노동시간이 약간 증가했으며 여성은 약간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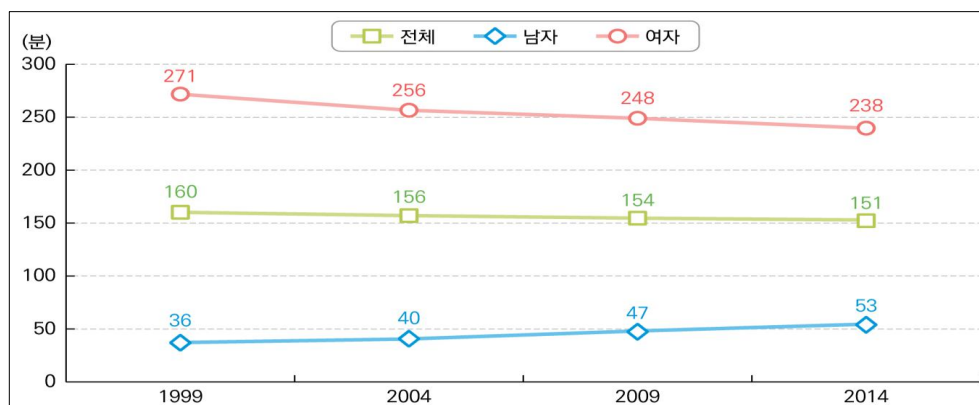
<표 3-38> 기혼자의 성 및 가사노동 종류별 가사노동시간 (1999, 2004, 2009, 2014년)

(단위: 분)

구분		1999	2004	2009	2014
전체	전체	160	156	154	151
	가정관리	125	119	118	118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35	37	36	33
남성	전체	36	40	47	53
	가정관리	25	27	33	38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11	13	14	15
여성	전체	271	256	248	238
	가정관리	214	199	193	189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57	57	55	49

자료: 통계청(각년도). 생활시간조사.

[그림 3-50] 기혼자의 성별 가사노동시간 (1999, 2004, 2009, 2014년)



자료: 통계청(각년도). 생활시간조사.

12.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로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모성보호 정책개발에 활용된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60일의 출산전후휴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별도로 출산전후휴가자 수에 대한 통계는 없었다. 2001년에 출산전후 휴가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면서 늘어난 3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되었고, 출산전후휴가자 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를 통해 그 수를 파악하게 되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인원은 2009년 70,560명에서 매년 증가하다가 2013년(90,507명), 2014년(88,756명)에는 감소하였으며, 2015년 94,590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 89,834명으로 다시 감소하여 2018년 현재는 77,062명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임금보전 등의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실적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2001년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 수를 토대로 육아휴직자 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육아휴직 사용인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근로자 수는 2015년에 82,467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8년 현재 81,537명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에 비하여 이용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표 3-39> 출산전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 수급자 수 (2009~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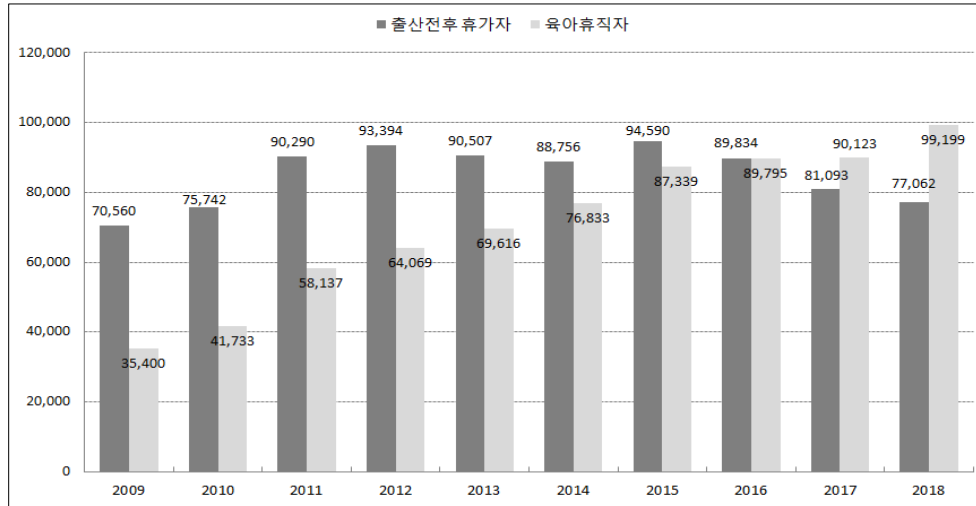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출산전후 휴가자 수	70,560	75,742	90,290	93,394	90,507	88,756	94,590	89,834	81,093	77,062
육아 휴직자 수	계	35,400	41,733	58,137	64,069	69,616	76,833	87,339	89,795	90,123
	여성 근로자	34,898	40,914	56,735	62,279	67,323	73,412	82,467	82,179	78,080
	남성 근로자	502	819	1,402	1,790	2,293	3,421	4,872	7,616	12,043

자료: 고용노동부(각년도). 고용보험DB.

[그림 3-51] 출산전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 수급자 수 (2009~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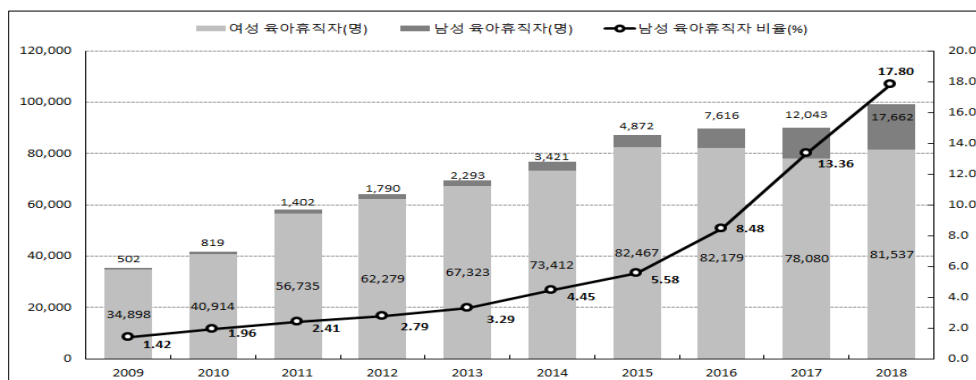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고용노동부(각년도), 고용보험DB.

[그림 3-52] 성별 육아휴직자 수 현황 및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2009~2018년)

(단위: 명, %)



자료: 고용노동부(각년도), 고용보험DB.

13. 육아휴직 사용근로자의 고용유지율

육아휴직 사용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은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후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일·가정양립 정책의 효과와 약은 물론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경력단절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2017년 육아휴직

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후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중은 79.1%로 전년보다 2.3% 증가하였다. 육아휴직 후 복직자는 78,460명으로 이중 62,044명이 복직 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은 2009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40>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고용유지율 (2009~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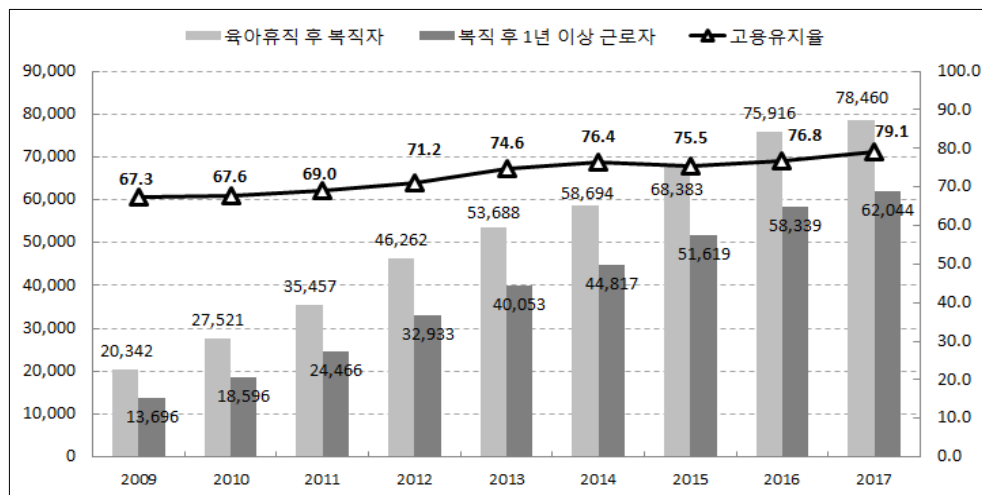
(단위: %, 명)

연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고용유지율	육아휴직 후 복직자	복직 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 있는 근로자
2009	67.3	20,342	13,696
2010	67.6	27,521	18,596
2011	69.0	35,457	24,466
2012	71.2	46,262	32,933
2013	74.6	53,688	40,053
2014	76.4	58,694	44,817
2015	75.5	68,383	51,619
2016	76.8	75,916	58,339
2017	79.1	78,460	62,044

자료: 고용노동부(각년도). 고용보험DB.

[그림 3-53]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고용유지율 (2009~2017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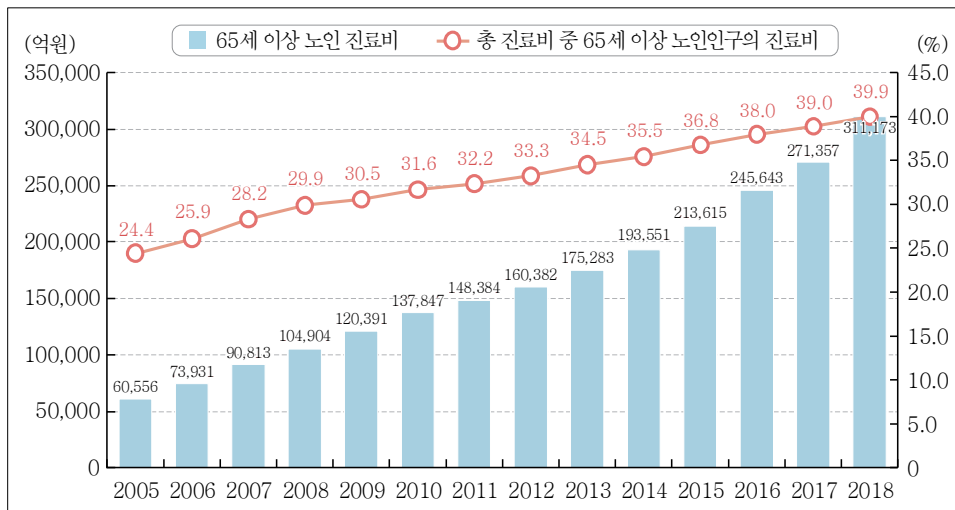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각년도). 고용보험DB.

14. 노인 진료비

노인 진료비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진료비를 나타내는 지표로, ‘노인 진료비의 비율⁸⁾’과 ‘노인 1인당 진료비⁹⁾’를 통해 노인 인구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부담 정도를 확인하고 노인 1인의 부담 수준을 점검할 수 있다.

2018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31조 1,1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증가세에 힘입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31.6%에서 2018년 39.9%로 크게 늘었다. 연도별 노인 1인당 진료비 역시 2005년 1,545천 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3,987천 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노인인구비율은 13.8%이다.

[그림 3-54] 연도별 노인진료비 및 구성비 (2005~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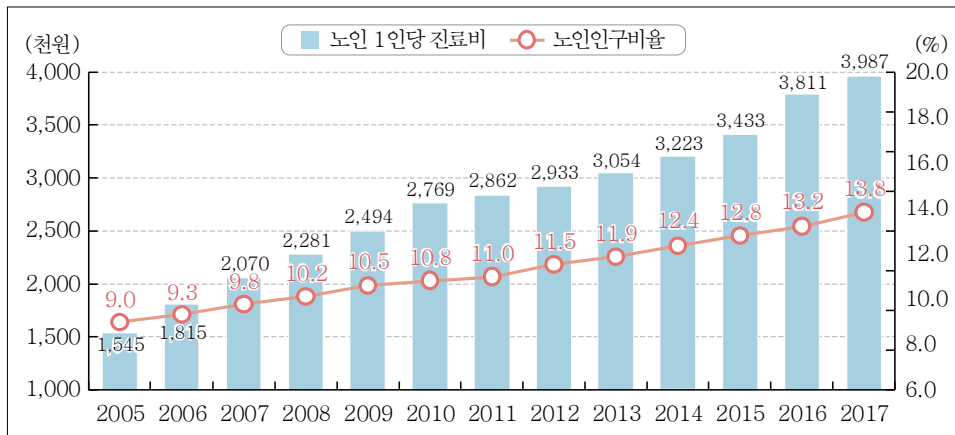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 2005년~2007년 건강보험통계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 2008년~2017년 진료비통계지표.

8) ‘노인 진료비의 비율’은 총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9) ‘노인 1인당 진료비’는 65세 이상 인구의 연간 진료비를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로 나눈 수치를 뜻함.

[그림 3-55] 연도별 노인 1인당 진료비 및 노인인구비율 (2005~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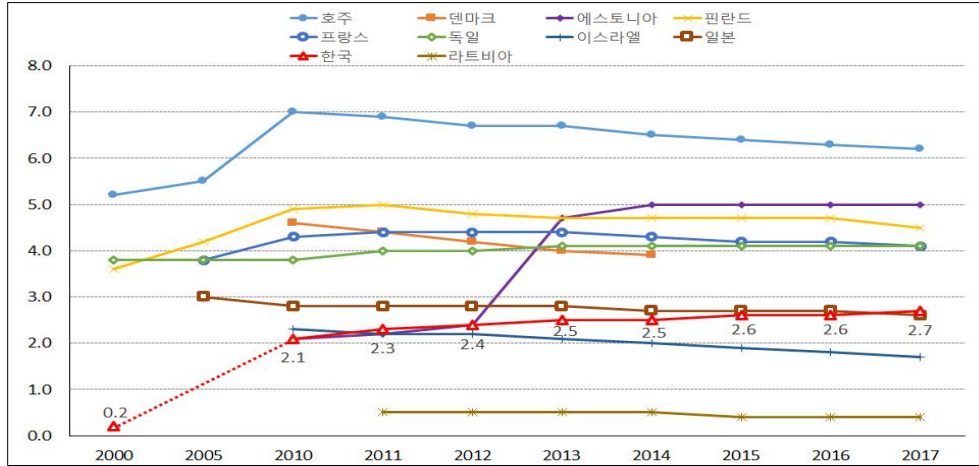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 2018년 진료비 심사실적.

15. 노인장기요양 보호율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보호율은 2000년 0.2%에서 2017년 2.7%로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들 중 라트비아(0.4%), 이스라엘(1.7%), 일본(2.6%)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재가서비스 보호율은 2000년 0.2%에서 2017년 5.6%로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율을 보이며 2012년 재가서비스 보호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56] 노인장기요양 시설기관 보호율 (200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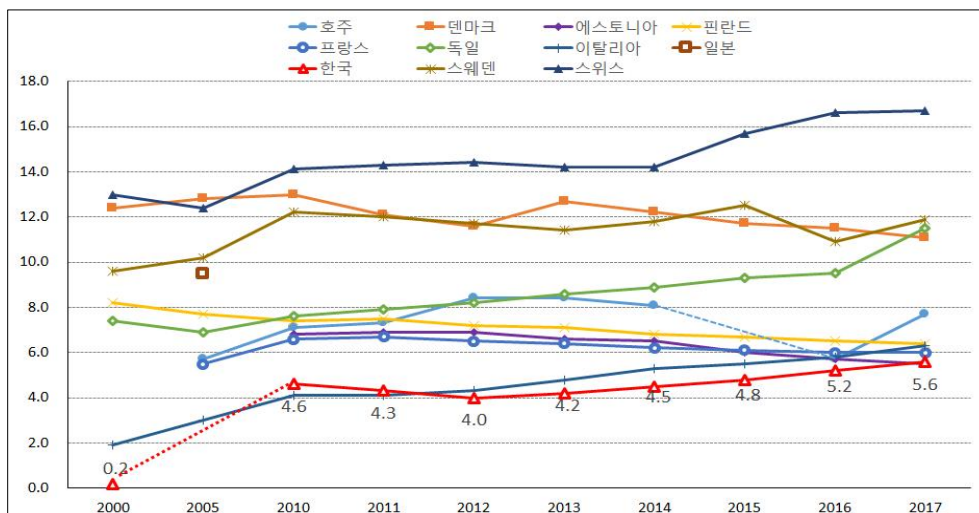
(단위: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



자료: OECD Health stats: Long term care recipients in institutions. <https://data.oecd.org/> 에서 2019. 9. 19. 인출.

[그림 3-57] 노인장기요양 재가기관 보호율 (2000~2017년)

(단위: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



자료: OECD Health stats: Long term care recipients in institutions. <https://data.oecd.org/> 에서 2019. 9. 19.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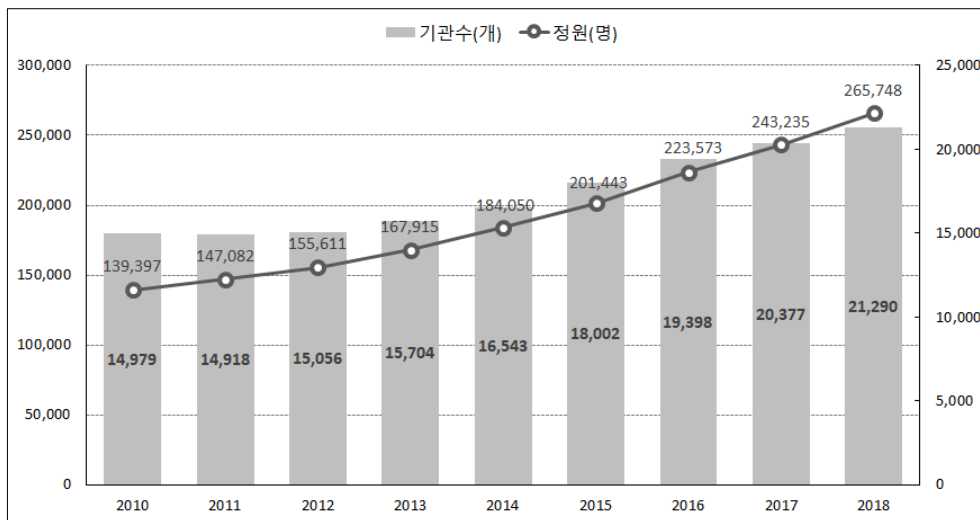
16. 노인장기요양기관 수

노인장기요양기관 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를 말한다. 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재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와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모두 해당된다.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4,979개소에서 2018년 21,290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기관 정원 수 역시 2010년 139,397명에서 2018년 265,748명으로 증가하였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수를 OECD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2017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1000명당 장기요양기관 수는 24.2개소로 이탈리아, 일본 다음으로 낮은 편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1000명당 장기요양기관 수는 2013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핀란드와 프랑스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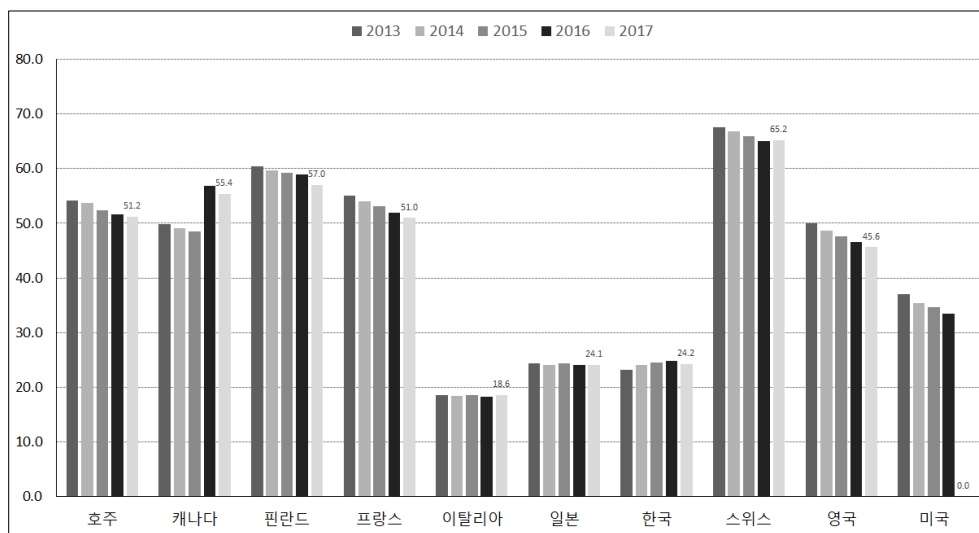
[그림 3-58] 노인 장기요양기관 현황 (2010~2018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각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그림 3-59] OECD 주요국가 노인 장기요양기관 현황 (2013~2017년)

(단위: 65세 이상 노인 1,000명당 개소)

자료: OECD Stat: Long-Term Care Resources and Utilisation. <https://stats.oecd.org/>에서 2019.11.26. 인출.

<표 3-41> OECD 주요국가 노인 장기요양기관 현황 (2013~2017년)

(단위: 65세 이상 노인 1,000명당 개소)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54.1	53.7	52.4	51.6	51.2
캐나다	49.8	49.1	48.5	56.9	55.4
핀란드	60.5	59.7	59.3	58.9	57
프랑스	55.1	54	53.1	52	51
이탈리아	18.5	18.4	18.5	18.3	18.6
일본	24.4	24	24.3	24	24.1
한국	23.2	24.1	24.5	24.8	24.2
스위스	67.6	66.8	65.9	65	65.2
영국	50	48.7	47.6	46.5	45.6
미국	37	35.4	34.7	33.4	—

주: 이탈리아는 잠정치임.

자료: OECD Stat: Long-Term Care Resources and Utilisation. <https://stats.oecd.org/>에서 2019.11.26. 인출.

17. 노인 최저주거기준 미충족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저주거기준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에 의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침실, 시설을 기준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해놓는 것을 말한다.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해당한다. 면적기준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4인 가구는 주거면적 43m²에 방 3개를 최저기준으로 본다.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충족률은 2017년 5.3%에서 2018년 4.1%로 줄어들고 있다. 2018년 전체 연령대의 최저주거기준 미충족률이 5.4%보다 낮은 수치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선 변수들 간 조합을 통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65세 이상 노인은 1인 가구의 형태가 많은데 이것이 최저주거기준 미충족률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표 3-42> 최저주거기준 미충족률 (2010~2018년)

(단위: %, 인, 개, m²)

최저주거기준 미충족률							침실기준 및 면적기준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가구원수(인)	방수(개)	면적(m ²)
전체	16.6	12.7	10.6	7.2	5.4	5.4	1	1	14
							2	1	26
							3	2	36
만 65세 이상	-	-	-	-	5.3	4.1	4	3	43
							5	3	46
							6	4	55

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 총가구 수) × 100

자료: 국토교통부(각년도). 주거실태조사.

제4절 소결

국내 인구정책 관련 주요 통계들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통계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주제별 추이를 살펴보기에 적합하였다. 이는 자료 생성이 산출 기준의 통일성을 가지고 지속성 있게 구축되었다는 의미로 정책 설계 및 수립·추진에 있어 향후에도 담보되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통계들의 산출 주기가 1년으로 통계의 추이를 상세하게 파악하기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신혼부부 통계와 같이 사회 정책적으로 자료 구축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최근 들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규로 구축 중인 자료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하여 정책대상이나 사회경제적 현상 등에 있어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신규통계 발굴도 계속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구축·관리되고 있는 국내 인구정책 통계들을 종합해볼 때, 주제 혹은 항목, 산출 주기 등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으나, 다음의 몇 가지 요소의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주제별 통계 제시에 대한 다른 쿼터별 접근이 필요하다. 상당수의 통계들이 대상 집단 혹은 내용에 관해 연령별, 성별 위주의 접근을 취하고 있었다. 2016년(2015년 자료 기준)부터 신규 제공 중인 ‘신혼부부 통계’처럼 혼인연차, 경제활동, 주택소유 등의 특성별 통계를 제시하여 자료 이용자에게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OECD나 EU의 통계사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며, 개별 지표의 배경과 원인 탐색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연령별, 세대별, 종사자 지위별, 소득규모별 등으로 개별지표들의 수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별 구체적인 통계 제시는 정책수립 및 성과 측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인구, 사회, 정책 분야 통계들을 상호 교차한 통계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인구정책 통계의 분야별 통계들이 서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처럼 상호 분야별 요소를 고려한 통계 산출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학령인구의 연령별·지역별 분포는 해당 지역의 보육 및 교육 인프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지금처럼 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인프라 공급에 대한 걱정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는 통계들은 인구와 보육·교육 인프라는 별도로 제공되고 있다. 꼭 미래에 대한 추계는 아니더라도 인구, 사회, 정책 분야의 통계들

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여 자료의 상세한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 NEET율, 노인 디지털 사용 기회지표(연령대별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고령인구 비율, 연령대별 인터넷 소통 활동 가능자 비율과 인터넷 구매자 비율 등), 사회적 보호수준 관련 지표(주간 20시간 이상 비공식 홈케어 서비스 제공 인구 비율, 성별·연령대별 손주 돌봄자 비율 등)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생산되지 않거나 혹은 정기적인 생산과 관리가 필요한 지표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인공임신중절률과 치매유병률 등은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핵심 목표인 전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주기적 관찰이 필요한 지표이나 인공임신중절률은 정기적으로 책임지고 생산하는 기관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으며, 치매유병률과 발생률은 국가 승인 통계가 아니므로 정밀한 표집 등을 통한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

제 4 장

인구정책 관련 통계 지표 개선방안

제1절 인구 분야

제2절 저출산 분야: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제3절 고령사회 분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

제4절 통계 지표 개선 방안

제5절 소결

4

인구정책 관련 통계 지표 < 개선방안 <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인구정책 관련 국내외 통계 현황과 전문가 조사 결과를 조합하여 기존 통계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도 깊게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는 사회 현상 혹은 문제들을 측정할 수 있는 신규 지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김은정 외, 2018, 박중서 외, 2019)를 참고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관련 주요 지표의 중요도와 적합도 등에 관한 조사표를 크게 인구분야, 저출산 대응 분야, 고령사회 대응 분야의 3파트로 구성하였다. 측정지표들은 앞서 국내외 인구정책 통계 현황에서 살펴본 인구분야, 사회분야, 정책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들 중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로드맵)에서 제시하는 정책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결과와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의 개선과 제안임을 고려하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로드맵)에서 제시하는 정책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¹⁰⁾들로 설문문항을 구성한 것이다. 작성된 문항에 대해서는 개별 지표가 해당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지 그리고 적합한지를 질문하였고, 이어서 해당 정책내용 및 성과측정을 위해 추가로 개발해야 하는 지표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를 실시하였다. 웹조사는 2019년 11월 21일에서 12월 3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었다.

1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로드맵)의 정책 영역구분 아래 재조정된 성과지표들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 지표들도 포함되어 있음. 다만 정책목표 변화(합계출산율 향상→삶의 질 향상)와 영역 구분에 따라 기존 지표들을 재구조화하였음.

제1절 인구 분야: 인구구조 변화 대비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수정)의 정책과제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 대비가 필요한 분야별 대책마련’, ‘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인구대응 사업 활성화’, ‘인구변화 대응기반 강화(인구통 계 생산관리체계 구축) 및 국민인식 개선’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인구 관련 통계 생산에 초점을 두고, 앞서 2장에서 살펴본 해외의 인구 통계사례와 박종서 외(2015, 2019)를 참고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신규로 개발해야 하는 인구통계 지표들을 정리하여 해당 지표의 중요도와 적합도¹¹⁾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인구분야의 기존 통계지표, 예를 들어 인구피라미드, 인구부양비, 합계출산율, 기대수명, 사망률 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통계 생산 및 산출, 관리방식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 기존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묻기보다 신규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표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2~3절과 조사표 구성 및 질문방식에 차이가 있고, 또 4절의 지표 개선 방안에 대한 서술 방식에 있어서도 차 이가 있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인구분야에서 검토된 지표들은 ‘혼인 이행률’, ‘유배 우 합계출산율’, ‘조정합계출산율’, ‘성별/연령별 미혼자 인구’, ‘혼인기간별 출산율’, ‘지역출산통계 개발’, ‘신혼부부 통계 개발’이다. 다만 지역출산 통계와 신혼부부 통계 는 통계청을 통해 일부 자료가 제공되고 있고, 여기서는 어떤 점에 주목하여 추가 개발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표 4-1>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 정책 지표

연번	지표명	지표 설명 및 지표 목적
1	혼인 이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건수/미혼자 인구 • 현재의 연령별 혼인율은 기혼여성을 모수로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혼인력(혼인수준)을 파악할 수 없음 • 우리나라 출산은 혼인-출산으로 이어지는 사실 상 2단계로 이뤄진다는 점, 청년정책으로서의 저출산 정책으로의 기조 변화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지표
2	유배우 합계출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배우 출산율

11) 해당지표가 인구구조 변화 및 대응, 관찰을 위해 중요한 지표인지, 적합한 지표인지를 질문하였음.

연번	지표명	지표 설명 및 지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을 통한 출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사회의 현실 반영 • 출산지원 정책들이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효과 및 출산변동을 살펴보기 위해 기혼 여성들의 출산율을 특화할 필요 • 합계출산율 체계는 사회의 전체적 출산력 수준을 제시하며, 기혼여성의 출산력을 특정할 수 없음 • 연구자별로 추산된 바는 있으나, 그 수치들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표준화 필요
3	조정합계출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율의 연도별 변동 수준이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 기간 및 템포효과(period effect, temo effect)를 통제할 수 있는 출산율의 보조지표 • 연구자별로 추산된 바는 있으나, 그 수치들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표준화 필요
4	성별/연령별 미혼자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이행률 및 유배우 출산율 등을 특정하는데 기초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 더불어 청년의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 고용, 출산,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
5	혼인기간별 출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 기간에 따른 출산율 • 총 출산뿐만 아니라, 순위별 출산율 작성 • 저출산 지속 상황에서 출산력의 총량이 아닌, 정책 방향에 맞는 지표 작성이 필요 • 혼인 기간에 따른 (순위별)출산율은 여성 고용, 보육 지원, 주거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표로 종합 정책적 효과 • 앞으로 총량적 출산율이 아닌 생애 출산아에 대한 정책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6	지역 출산통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데이터 제공으로는 지역의 출산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구조 • 지역 인구 및 출산정책에 대한 정책 흐름을 고려할 때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을 위한 지역(시군구)단위 세부적 통계지표 개발이 요구됨
7	신혼부부 통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 정보(주거관련) • 자녀 출산 정보 (출산이력) •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력의 세부 분석을 위해서는 단 시점의 스냅샷이 아닌 출산이력의 누적 자료가 필요

7개 지표 모두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 중에서도 ‘유배우합계출산율’, ‘조정합계출산율’과 ‘혼인이행률’ 지표의 중요도와 적합도 점수가 다른 지표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 지표들을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혼인이행률’에 대해서는 혼인 건수를 법적 혼인만 포함할 건지 사실혼도 포함할 것 인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재혼자의 혼인건수에 대한 통제 여부에 따라 정책적 함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유배우 합계출산율’에 대해서는 사실혼도 포함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혼인기간별 출산율’에 대해서는 출산율은 혼인기간뿐

아니라 혼인 시 연령, 부부관계의 질, 별거 여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과 보완해 사용할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성별/연령별 미혼자 인구’에 대해서는 미혼자 전체를 잠재적 혼인 이행자로 가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 출산통계 개발’의 경우 지역별 편차만으로 정책을 구성하기 어렵고, 지역별 편차 원인이 너무 다양하여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유의미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동통계를 함께 사용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표 4-2> ‘인구분야’ 영역 중요도-적합도 비교

(단위: 점)

연번	지표명	중요도 5점 평균 (표준편차)	적합도 5점 평균 (표준편차)
1	혼인 이행률	4.43 (0.90)	4.37 (1.03)
2	유배우 합계출산율	4.57 (0.57)	4.63 (0.67)
3	조정합계출산율	4.53 (0.57)	4.43 (0.63)
4	연령별 미혼자 인구	4.37 (0.72)	4.23 (0.86)
5	혼인기간별 출산율	4.20 (0.92)	4.13 (0.90)
6	지역 출산통계 개발	4.27 (0.91)	4.13 (1.04)
7	신혼부부 통계 개발	4.33 (0.71)	4.17 (0.83)

‘인구변화 적극대비’ 영역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할 지표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들이 제안되었다. ‘저출산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도시를 나타내는 지수/지방소멸 지수’, ‘외국인 여성의 출산율’, ‘순위별 출산율’, ‘기혼부부/미혼자 희망자녀수’이다.

<표 4-3> ‘인구변화 적극대비’ 영역 전문가 제안지표

연번	정책목표	전문가 제안지표
1	인구변화 적극대비	지방소멸 지수
2		외국인 여성의 출산율
3		순위별 출산율
4		기혼부부/미혼자 희망자녀수

주: 전문가 제안지표는 조사표에 제시된 지표 외에 정책 목표 ‘인구변화 적극대비’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를 제안 받은 것으로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통계일 수 있음

제2절 저출산 분야: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저출산 영역: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의 설문문항은 ‘임신·출산·양육의 국가 책임화’, ‘일생활 균형’, ‘돌봄’,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청년세대 지원’의 총 5개 영역, 4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각 지표별 중요도와 적합도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1. 출산·양육비 부담의 최소화

‘출산·양육비 부담의 최소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 내 정책과제로는 ‘아동수당 지급’, ‘건강보험 확대: 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가 있다. 정책지표로는 ‘건강한 출산 비율’, ‘저체중/조산아 출생률’, ‘신생아 예방접종률’, ‘아동 1인당 의료비’, ‘임신·출산 의료비 지출 부담 정도’로 구성되었고 각 지표가 정책목표 측정을 위해 중요한지 그리고 적합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4-4>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의 정책 지표

연번	지표명	지표 설명 및 출처
1	건강한 출산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임신자 중 비유사산 경험자 비율(유배우 부인 임신자 수 - 유산·임신중절 등 규모 / 15-44세 유배우 부인 임신자 수 × 100) -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작성주기: 3년
2	저체중/조산아 출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통계(통계청) 작성주기: 1년
3	신생아 예방접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필수예방 완전접종률 - 전국예방접종률조사 (질병관리본부) 작성주기: 1년
4	아동 1인당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미만 아동(아동복지법에 의거) 1인당 의료비 지출액 -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주기: 1년
5	임신·출산 의료비 지출 부담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작성주기: 3년

5개의 지표들은 모두 3점, 보통 수준 이상의 중요도,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또 중요도와 적합도 모두에서 ‘임신·출산 의료비 지출 부담 정도’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요도와 적합도 점수가 높았던 지표는 ‘아동 1인당 의료비’였다. 이를 통해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임신·출산·아동 양육에의 ‘의료비 지원’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건강한 출산 비율’, ‘저체중/조산아 출생률’, ‘신생아 예방접종률’ 모두 중요도가 적합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한 출산 비율’은 중요도 적합도 점수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요도와 적합도 지표가 낮은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건강한 출산 비율’은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와 관련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유산·사산 중 상당수는 출산의도와 상관없이 이유 불명인 특성이 있고, 자발성 여부에 따라 유산의 의미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이 중요도와 적합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로 제시되었다. ‘신생아 예방접종률’은 지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신생아 예방접종률은 95% 이상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국제 간 비교용 지표로 OECD 등과 예방접종 항목 기준의 동일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체중/조산아 출생률’ 역시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와는 관련성이 적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자료 출처에 대한 의견으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조사주기가 3년인 것에 대한 연속성의 한계, 최근에

임신·출산을 경험한 여성 사례의 충분성에 대한 의문, 과거 경험에 대한 응답의 정확성 문제 등이 지표 중요도와 적합도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로 제시되었다.

<표 4-5>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지표 중요도-적합도

(단위: 점)

연번	지표명	중요도 5점 평균 (표준편차)	적합도 5점 평균 (표준편차)
1	건강한 출산 비용	3.50 (1.11)	3.60 (1.10)
2	저체중/조산아 출생률	3.80 (0.76)	3.97 (0.85)
3	신생아 예방접종률	3.83 (1.15)	3.90 (1.21)
4	아동 1인당 의료비	4.07 (0.91)	4.03 (1.03)
5	임신·출산 의료비 지출 부담 정도	4.27 (0.83)	4.20 (0.85)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영역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할 전문가 제안 지표는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부 지원제도 인지율’ 등이 제시되었고 임신과 관련해서는 ‘난임부부 예산 및 지원수준(본인부담률 등)’, ‘태아관리율(검진율 등)’, ‘산모 영양 및 건강행위’ 등이 제시되었고, 출산과 관련해서는 ‘출산 비용’, ‘산후 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도우미서비스(이용자 수, 인력 수, 비용 등)’, ‘경산부 지원 확대’, ‘출산보너스 지급’, ‘산모도우미 비용’, ‘고위험 산모 수’,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수 등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영아 의료비 본인부담률’ 등이 제시되었다. 양육과 관련해서는 ‘1인당 아이돌봄 비용’, ‘가족 현금급여액’, ‘아동수당 지급 및 효과, 만족도’, ‘아동양육비용(사교육 비용 등)’, ‘양육비 중 국가 부담 비중’, ‘육아서비스(이용자 수, 인력 수, 비용 등)’, ‘0세 어린이집 취학 비율’, ‘(미취학)아동 건강검진 수검률’ 등이 제시되었다. 조사된 지표와 추가 개발 지표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로 ‘비용’이 주요 요소로 부각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현재 임신·출산·양육에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이며, 정부의 지원은 충분한지,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항목은 무엇인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들이다. 그 밖에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수를 비롯하여 난임부부 지원사업, 아동수당의 효과성 및 만족도, (미취학)아동 건강검진 수검률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표 4-6>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관련 전문가 제안지표

연번	정책목표	전문가 제안지표
1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2		정부 지원제도 인지율
3		난임부부 예산 및 지원수준(본인부담률 등)
4		태아관리율(검진율 등)
5		산모 영양 및 건강행위
6		출산 비용
7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8		산모도우미서비스(이용자 수, 인력 수, 비용 등)
9		경산부 지원 확대
10		출산보너스 지급
11		산모도우미 비용
12		고위험 산모 수
13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수 등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14		영아 의료비 본인부담률
15		1인당 아이돌봄 비용
16		가족 현금급여액
17		아동수당 지급 및 효과, 만족도
18		아동양육비용(사교육 비용 등)
19		양육비 중 국가 부담 비중
20		육아서비스(이용자 수, 인력 수, 비용 등)
21		0세 어린이집 취학 비율
22		(미취학) 아동 건강검진 수검률

주: 전문가 제안지표는 조사표에 제시된 지표 외에 정책 목표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지표를 제안 받은 것으로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통계일 수 있음

2.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를 정책 목표로 하는 이 영역은 ‘여성 고용률’, ‘임금 근로자 월간 근로시간’, ‘아동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 ‘남녀 가사 노동시간’, ‘여성 경력단절 경험 비율’, ‘여성 육아휴직 이용률/남성 육아휴직 이용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연간 출산건수 대비 여성(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유연근무 이용 관련 비율’, ‘가족친화지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 ‘육아휴직 사용 후 남성(여성) 업무 복귀 비율’의 13가지 지표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와 관련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로드맵) 내 정책 과제는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권 보장(육아휴직제도 내실화)’,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

<표 4-7>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의 정책 지표

연번	지표명	지표 설명 및 출처
1	여성고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64세 여성고용률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작성주기: 월
2	임금근로자 월간 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작성주기: 1년 - Labour Force Statistics (OECD) - 작성주기: 1년
3	아동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 함께 사는 만 10세 미만 아이돌봄 시간 함께 사는 10세 이상 초·중·고 학생 돌봄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 작성주기: 5년
4	남녀 가사노동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주중, 주말 가사노동시간(주당 평균 가사노동시간) -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 작성주기: 5년
5	여성 경력단절 경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 중 경력단절 경험 유무 -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 작성주기: 반년
6	여성 육아휴직 이용률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의 비율 - 고용보험 DB - 작성주기: 1년
7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육아휴직자/전체육아휴직자×100 - 고용보험 DB - 작성주기: 1년
8	연간 출산건수 대비 여성(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남성) 육아휴직자 / 전체 출산건수 - 고용보험 DB - 작성주기: 1년

연번	지표명	지표 설명 및 출처
9	유연근무 이용 관련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단축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재택 및 원격근무제, 탄력적 근무제, 기타유형(재량근무 등)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 작성주기: 월
10	가족친화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공공기관 가족친화수준조사 (여성가족부) - 작성주기: 3년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공공기관 가족친화수준조사 (여성가족부) - 작성주기: 3년
12	육아휴직 사용 후 남성(여성) 업무 복귀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공공기관 가족친화수준조사 (여성가족부) - 작성주기: 3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영역 관련 지표의 중요도와 적합도 점수를 분석한 결과, 13개 지표 모두 3점 이상으로 보통 수준 이상의 중요도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중요도와 적합도가 가장 높은 지표는 ‘여성 육아휴직 이용률/남성 육아휴직 이용률’로 나타났다. 이외의 대다수 지표들은 중요도와 적합도에서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4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은 유연근무 이용 관련 지표와 가족친화지수 지표였고, ‘유연근무 이용 관련 비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 지표는 중요도에 비해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합도 점수가 낮은 지표를 중심으로 개선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먼저 ‘유연근무 이용 관련 비율’과 ‘가족친화지수’ 지표의 경우 대상자 수가 많지 않고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가족관계) 보다 표본으로 추출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에 대해서는 해당 지표가 매년 이용률 편차가 상당히 클 것 같아 지표의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점과 조사대상 기업이 이를 산정할 때 수치로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연간 출산건수 대비 여성(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육아휴직사용 기간의 제도적 범위(만 8세)와 연간 출산건수 사이에는 지표 산출에 있어 시차가 있어 호응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성 경력단절 경험 비율의 경우, 연령대가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점, 경력단절 사유가 육아와 무관할 수 있다는 점, 여성 경력단절 경험과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와는 연관성이 떨어지며 경력단절은 그 기간의 누적적 특성이 있다는 점 등을 지표의 한계로 제시하였다.

<표 4-8>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지표 중요도-적합도

(단위: 점)

연번	지표명	중요도 5점 평균 (표준편차)	적합도 5점 평균 (표준편차)
1	여성고용률	4.17 (0.87)	4.27 (0.91)
2	임금근로자 월간 근로시간	4.40 (0.67)	4.30 (0.75)
3	아동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	4.43 (0.68)	4.43 (0.73)
	함께 사는 만 10세 미만 아이돌봄 시간		
	함께 사는 10세 이상 초·중·고 학생 돌봄시간		
4	남녀 가사노동시간	4.13 (1.04)	4.13 (0.97)
5	여성 경력단절 경험 비율	4.07 (0.94)	4.03 (0.96)
6	여성 육아휴직 이용률	4.60 (0.67)	4.53 (0.73)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		
7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4.23 (0.82)	4.27 (0.87)
8	연간 출산건수 대비 여성(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4.10 (0.99)	3.90 (0.99)
9	유연근무 이용 관련 비율	3.90 (0.96)	3.60 (1.10)
10	가족친화지수	3.63 (0.89)	3.60 (0.86)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	4.27 (0.78)	3.97 (1.00)
12	육아휴직 사용 후 남성(여성) 업무 복귀 비율	4.17 (0.95)	4.00 (0.98)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영역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할 지표에 대해서는 ‘국민인식 개선 지표’, ‘남성 육아휴직 기간(평균)’, ‘아동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구성(아이 연령별, 시간내역 등)’, ‘육아 중 시간제 전환 근로자 비율’, ‘육아 중 재택근무자 비율’,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및 생계비 조달 방법’, ‘한부모 등 가족유형별 육아참여’, ‘부모 동시휴직률’ 등이 제시되었다. ‘남성 육아휴직 기간(평균)’은 남성의 육아휴직이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3개월만 사용하는지 더 길게 이용하는지 추이를 확인할 수 있어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지표의 한계(육아휴직기간과 관계없이 한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전체 이용률이 높아지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육아 중 시간제 전환 근로자 비율’, ‘육아 중 재택근무자 비율’ 역시 육아 중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확보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는 장점이 있다.

<표 4-9>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영역 전문가 제안지표

연번	정책목표	전문가 제안지표
1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국민인식 개선 지표
2		남성 육아휴직 기간(평균)
3		아동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
4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구성(아이 연령별, 시간내역 등)
5		육아 중 시간제 전환 근로자 비율
6		육아 중 재택근무자 비율
7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및 생계비 조달 방법
8		한부모 등 가족유형별 육아참여
9		부모 동시휴직률

주: 전문가 제안지표는 조사표에 제시된 지표 외에 정책 목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를 제안 받은 것으로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통계일 수 있음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정책 목표로 하는 이 영역은 ‘아동빈곤율’,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평가인증(평가) 어린이집 비율’, ‘보육수준 만족도’, ‘취학 전 보육에 대한 공적 지출 비율’, ‘방과후 보육에 대한 공적 지출’, ‘사회 관계적 결핍 수준’, ‘돌봄 일치도’, ‘아동 삶의 만족도’,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인구 10만 명 당)’, ‘재학대 발생률’, ‘아동학대율’, ‘아동자살률’의 12가지 지표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와 관련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 내 정책 과제는 ‘공보육 확충’,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 ‘아동이 안전한 사회(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 강화)’가 있다.

<표 4-10>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의 정책 지표

연번	지표명	지표 설명 및 출처
1	아동빈곤율	- Poverty rate (OECD) - 작성주기: 1년
2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작성주기: 1년
	평가인증(평가) 어린이집 비율	- 평가인증운영시스템,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작성주기: 1년
3	보육수준 만족도	-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연번	지표명	지표 설명 및 출처
		- 작성주기: 3년
4	취학 전 보육에 대한 공적 지출 비율	
5	방과후 보육에 대한 공적 지출 비율	
6	사회 관계적 결핍 수준	- 여가, 친구 및 가족과의 활동 등 -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작성주기: 5년
7	돌봄 일치도	- 희망하는 돌봄 유형을 실제 이용하는 비율 -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작성주기: 3년
8	아동 삶의 만족도	-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작성주기: 5년
9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인구 10만 명 당)	-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 작성주기: 1년
10	재학대 발생률	- 아동학대주요통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작성주기: 1년
11	아동학대율	- 아동 1만명 당 아동학대율 - 아동학대주요통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작성주기: 1년
12	아동자살률	-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 작성주기: 1년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영역 관련 지표의 중요도와 적합도 점수를 분석한 결과, 12개 지표의 중요도와 적합도가 모두 3점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중요도와 적합도가 가장 높은 지표는 ‘아동빈곤율’로 나타났다. ‘아동빈곤율’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지표로는 ‘아동학대율’,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평가인증(평가) 어린이집 비율’, ‘인구 10만 명당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이 있었고, 적합도가 높게 나타난 지표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평가인증(평가) 어린이집 비율’, 인구 10만 명당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들 중, ‘보육수준 만족도’, ‘방과후 보육에 대한 공적 지출’, ‘사회 관계적 결핍 수준’, ‘돌봄 일치도’, ‘재학대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적합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보육수준 만족도’는 보통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 점수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고 OECD 등 국가 비교에서 만족도가 갖는 의미가 모호하다는 점이 한계로 제시되었다. ‘방과후 보육에 대한 공적 지출’은 지출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집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었고, ‘사회 관계적 결핍 수준’은 아동에게 사회적 관계 결핍이라는 개념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이러한 지표들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확인 및

표준화가 어려우며, 산출 데이터 역시 5년 주기로 지표 산정에 시의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돌봄 일치도’는 희망하는 돌봄 유형이 부모(직접)일 경우 다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도 돌봄 일치도가 떨어질 수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재학대 발생률’은 돌봄과 연관성이 적고, 재학대보다는 학대발생률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재학대 여부는 관리감독이 강화되면 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충충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를 구축할수록 재학대 발생률이 높아질 수도 있어 해석에 유의), 은폐되다가 밝혀지는 특성이 있어 비율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표 4-11> ‘충충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지표 중요도-적합도

(단위: 점)

연번	지표명	중요도 5점 평균 (표준편차)	적합도 5점 평균 (표준편차)
1	아동빈곤율	4.57 (0.77)	4.37 (0.89)
2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4.23	4.17
	평가인증(평가) 어린이집 비율	(0.77)	(0.91)
3	보육수준 만족도	3.97 (0.89)	3.93 (1.01)
4	취학 전 보육에 대한 공적 지출 비율	4.07 (0.83)	4.03 (0.93)
5	방과후 보육에 대한 공적 지출 비율	3.93 (0.91)	3.83 (0.99)
6	사회 관계적 결핍 수준	3.77 (0.94)	3.63 (1.07)
7	돌봄 일치도	4.03 (0.81)	3.97 (1.00)
8	아동 삶의 만족도	4.17 (0.79)	4.00 (0.91)
9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인구 10만 명 당)	4.23 (0.82)	4.13 (0.94)
10	재학대 발생률	4.20 (1.00)	3.97 (1.16)
11	아동학대율	4.47 (0.73)	4.07 (1.05)
12	아동자살률	4.10 (0.96)	4.00 (1.02)

‘충충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에 관한 목표를 측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할 지표에 대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형태’,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률 및 사각지대 노출 비율’,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청소년기 관련 지표’, ‘초등돌봄 및 다함께 돌

봄센터 이용 현황’, ‘학생 1인당 어린이집 사고/학대 건수’, ‘민간보육 대비 공공보육 비율’,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자 비율’ 등이 제안되었다.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제안 지표들은 기존의 영유아 돌봄 중심의 정책에서 초등 돌봄으로 돌봄 정책이 확대되어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으로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표 4-12> ‘참참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영역 전문가 제안지표

연번	정책목표	전문가 제안지표
1	참참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국공립 보육시설 형태
2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률 및 사각지대 노출 비율
3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4		청소년기 관련 지표
5		초등돌봄 및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현황
6		학생 1인당 어린이집 사고/학대 건수
7		민간보육 대비 공공보육 비율
8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자 비율

주: 전문가 제안지표는 조사표에 제시된 지표 외에 정책 목표 ‘참참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를 제안 받은 것으로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통계일 수 있음

4.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을 정책 목표로 하는 이 영역은 ‘사회적 인식 및 차별 개선 필요도’, ‘한부모의 “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이라는 인식의 변화’, ‘한부모 가족의 취업시간 비율’, ‘한부모 가족의 취업유형’,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 경험률’, ‘차별이나 사회통합, 사회적 신뢰지표’의 6가지 지표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와 관련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 내 정책 과제는 ‘가족 다양성 관련 법제도 정비’,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인식 개선’이 있다.

<표 4-13>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의 정책 지표

연번	지표명	지표 설명 및 출처
1	사회적 인식 및 차별 개선 필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1순위 중 사회적 인식 및 차별 개선을 응답한 비율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작성주기: 3년
2	한부모의 “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이라는 인식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내 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이라는 인식(평균점수)의 변화 정도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작성주기: 3년
3	한부모 가족의 취업시간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취업시간 차이 - OECD
4	한부모 가족의 취업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작성주기: 3년
5	다문화 가족 자녀의 차별 경험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제시 -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작성주기: 3년
6	차별이나 사회통합, 사회적 신뢰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조사 (통계청) - 작성주기: 1년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영역 관련 지표의 중요도와 적합도 점수는 6개 지표 모두 3점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 중에서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 경험률’, ‘차별이나 사회통합, 사회적 신뢰지표’가 중요도와 적합도 점수가 타 지표 대비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의 “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이라는 인식의 변화’와 ‘한부모가족의 취업유형’의 점수는 중요도와 적합도 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한부모에 대하여 자녀의 재정부담 인식 정도’ 지표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어느 가정이나 동일하게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측정을 위해서는 한부모 뿐 아니라 양부모 모두가 조사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한부모가족의 취업유형’은 취업유형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취업유형은 가족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과 취업유형과 함께 고용의 안정성도 함께 고려된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한부모가족의 취업시간 비율 지표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의 취업시간 자체로는 정책목표인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부모가족의 취업시간이 길다고 해서 포용적 가족문화라고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산출된 수치의 의미가 모호하고 미취업 한부모의 수치가 빠질 수 있어 수치가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오히려 한부모가족이 사회보험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절히 보호를 받는지 혹은 정규직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 지표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표 4-14>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지표 중요도-적합도

(단위: 점)

연번	지표명	중요도 5점 평균 (표준편차)	적합도 5점 평균 (표준편차)
1	사회적 인식 및 차별 개선 필요도	3.93 (0.87)	3.77 (0.97)
2	한부모의 “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이라는 인식 (한부모에 대하여 자녀의 재정부담 인식 정도)	3.37 (0.85)	3.13 (0.94)
3	한부모가족의 취업시간 비율	3.83 (1.09)	3.70 (1.21)
4	한부모가족의 취업유형	3.70 (1.02)	3.70 (1.02)
5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 경험률	4.37 (0.72)	4.30 (0.75)
6	차별이나 사회통합, 사회적 신뢰지표	4.20 (0.81)	4.13 (0.82)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영역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할 지표로는 ‘비혼·동거가족 비율 및 사회적 인식’, ‘비혼·동거가족 유형별 자녀 출산 및 육아 비율과 유형’, ‘한부모 및 다문화 가구의 사회자본 및 사회적 관계지수’, ‘가족 다양성 수용인식’, ‘다양한 가족의 비율’, ‘재혼가족의 비율 및 재혼가족의 아동발달’,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각종 가족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현황에 관한 지표들로 구성되었다.

<표 4-15>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영역 전문가 제안지표

연번	정책목표	전문가 제안지표
1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비혼·동거가족 비율 및 사회적 인식
2		비혼·동거가족 유형별 자녀 출산 및 육아 비율과 유형
3		한부모 및 다문화 가구의 사회자본 및 사회적 관계지수
4		가족 다양성 수용인식
5		다양한 가족의 비율
6		재혼가족의 비율 및 재혼가족의 아동발달
7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8		각종 가족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주: 전문가 제안지표는 조사표에 제시된 지표 외에 정책 목표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를 제안 받은 것으로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통계일 수 있음

5.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을 정책 목표로 하는 이 영역은 ‘청년고용률’, ‘청년 비정규직 비율’, ‘청년 실질실업률’, ‘연령별/혼인상태별 여성고용률’, ‘유자녀부모 여성고용률’, ‘저임금근로자 중 여성 비율’, ‘여성근로자 비율’, ‘여성관리자 비율’,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사교육비 부담’, ‘가구 소득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청년니트율’의 13가지 지표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와 관련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 내 정책 과제는 ‘청년 일자리 안전망 강화’, ‘남녀 평등한 노동환경 마련’, ‘청년·신혼부부 생애주기에 맞는 주거지원’,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양질의 공교육 강화’가 있다.

<표 4-16> 청년세대 지원 영역 정책 지표

연번	지표명	지표 설명 및 출처
1	청년고용률	- 15-29세 취업자/청년경제활동인구×100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작성주기: 월
2	청년 비정규직 비율	- 전체 비정규직자에서 15~24세 청년 비중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작성주기: 월
3	청년 실질실업률	-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작성주기: 월
4	연령별/혼인상태별 여성고용률	-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통계청) - 작성주기: 반년
5	유자녀부모 여성고용률	-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통계청) - 작성주기: 반년
6	여성 임금 비율	- 전체 근로자 임금 중 여성 근로자 임금 비율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작성주기: 월
7	저임금근로자 중 여성 비율	-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율 - 저임금근로자 중 여성 비율
8	여성근로자 비율 평균	- 15세 이상 여성인구 중 취업자 비율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작성주기: 월
9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	- 안전행정 통계연보 (행정자치부), 인사통계 (인사혁신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작성주기: 1년, 월
10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 공공임대 신혼부부 지원물량 / 초혼부부 수 - 국토교통통계연보 (국토교통부) - 작성주기: 1년
11	사교육비 부담	-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통계청)

연번	지표명	지표 설명 및 출처
		- 작성주기: 1년
12	가구 소득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가구소득수준별(200만원 미만~800만원 이상)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통계청) - 작성주기: 1년
13	청년니트율	- 전체 청년인구 대비 청년니트자 비율 - Neet rate (OECD) - 작성주기: 1년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영역 관련 지표의 중요도와 적합도 점수는 13개 지표 모두 3점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특히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을 제외한 12개 모든 지표의 중요도와 적합도가 4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점수는 ‘청년 실질실업률’, ‘청년고용률’, ‘청년 비정규직 비율’, ‘연령별/혼인상태별 여성고용률’, ‘유자녀부모 여성고용률’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적합도 점수는 ‘청년 실질실업률’, ‘청년고용률’, ‘청년니트율’, ‘연령별/혼인상태별 여성고용률’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040세대의 노동시장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역 내 중요도와 적합도 점수가 비교적 낮은 지표들로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사교육비 부담’, ‘가구 소득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로 나타났다. 낮은 점수를 받은 지표들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은 현재 공공임대 주택 수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일부 수혜집단을 토대로 수혜율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었다. 또 모든 초·혼부부가 공공임대를 희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희망자 대비 수혜율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사교육비 부담’, ‘가구 소득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 지표는 가구를 구성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사교육비 문제가 공교육 강화로 해결되기에는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저임금근로자 중 여성 비율’, ‘여성근로자 비율’, ‘여성관리자 비율’은 중요도 적합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저임금근로자 중 여성 비율’은 ‘저임금근로자’의 기준이 모호하고, ‘여성근로자 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은 ‘여성고용률’과 정책적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2가지 지표 모두 명확한 정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여성근로자 비율’은 여성취업률과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고 ‘여성관리자 비율’은 일반 여

성을 분모로 할 것인지 전체 관리자를 분모로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여성 임금 비율 지표는 중요도, 적합도 모두 높았으나 지표를 단순히 총액 비중이 아닌 연령, 직종 등 대상자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표 4-17>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지표 중요도-적합도

(단위: 점)

연번	지표명	중요도 5점 평균 (표준편차)	적합도 5점 평균 (표준편차)
1	청년고용률	4.60 (0.56)	4.57 (0.86)
2	청년 비정규직 비율	4.60 (0.62)	4.40 (0.81)
3	청년 실질실업률	4.63 (0.56)	4.57 (0.68)
4	연령별/혼인상태별 여성고용률	4.47 (0.73)	4.43 (0.77)
5	유자녀부모 여성고용률	4.47 (0.68)	4.37 (0.76)
6	여성 임금 비율	4.03 (0.96)	4.13 (1.01)
7	저임금근로자 중 여성 비율	4.37 (0.81)	4.13 (0.94)
8	여성근로자 비율 평균	4.13 (1.01)	4.20 (0.89)
9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	4.23 (0.94)	4.27 (0.98)
10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3.90 (0.84)	3.93 (0.91)
11	사교육비 부담	4.17 (1.02)	4.03 (0.93)
12	가구 소득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17 (0.91)	4.17 (0.91)
13	청년니트율	4.37 (0.72)	4.43 (0.68)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영역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할 지표들로는 주거와 노동의 영역 관련 지표들이 제안되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년 주거형태’, ‘청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주거비 부담 정도’, ‘최저수준 주거 미달 가구 수’ 등이며, 고용과 관련해서는 ‘청년 고용유지율’, ‘청년취업률’, ‘청년일자리 수’, ‘청년 직업교육 관련 지표’, ‘청년 직업훈련경력 비율’, ‘빈곤 청년실업률 및 니트율’, ‘청년 임금’, ‘여성의 퇴직시기 및 근속기간’, ‘경력단절여성 비율 및 사회복귀율’, ‘고

위 공직자 중 여성 비율’, ‘남녀 근무기간 대비 승진 비율’, ‘여성취업률’, ‘여성고용정책 만족도’, ‘직급별 여성근로자 비율’, ‘여성고용 중 시간제일자리 비율’, ‘기업에서의 여성 및 남성 고용 비율’, ‘여성이직률’ 등이 제시되었다.

지표 제안의 이유로는 주거의 경우 현재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청년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 청년세대의 전반적인 주거안정성 측정이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에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청년 고용률(청년 고용유지율)과 상호보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청년 취업률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년의 삶의 기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직업교육 및 훈련, 청년일자리 개발 관련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관심 및 지원(관련 지표가 필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여성의 근로 여부뿐 아니라 성별 차이 및 평등한 고용, 고용안정성, 일자리 형태, 근무기간 등 여성고용의 질적 측면을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표 4-18>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영역 전문가 제안지표

연번	정책목표	전문가 제안지표
1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주거
2		
3		
4		
5		고용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연번	정책목표		전문가 제안지표
19			여성고용 중 시간제일자리 비율
20			기업에서의 여성 및 남성 고용 비율
21			여성이직률

주: 전문가 제안지표는 조사표에 제시된 지표 외에 정책 목표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를 제안 받은 것으로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통계일 수 있음

제3절 고령사회 분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

‘고령사회 영역: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의 설문문항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역사회중심의 건강, 돌봄환경 조성’,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의 총 5개 영역,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각 지표별 중요도와 적합도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1.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정책목표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1인 1 국민연금 확립’, ‘기초연금 내실화’, ‘퇴직연금·개인연금 확산과 정착’, ‘노후준비 지원확대’가 있다. 정책지표로는 ‘노인상대빈곤율’, ‘노인고정빈곤율’, ‘노인가구 가처분소득률’, ‘노인가구 가계부채 비율’, ‘저소득가구(1~2분위) 중 노인가구 비중’, ‘국민연금 수급률/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국민연금 가입률’, ‘기초연금 수급률’, ‘퇴직연금 도입률’, ‘개인연금 가입률’로 구성되었고 각 지표가 정책목표 측정을 위해 중요한지 그리고 적합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4-19>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의 정책 지표

연번	지표명	지표 설명 및 출처
1	노인상대빈곤율	-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 수/전체 노인 수 -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OECD) - 작성주기: 1년
2	노인고정빈곤율	- 중위소득 50% 미만 기준 적용 -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작성주기: 1년
3	노인가구 가처분소득률	-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작성주기: 1년
4	노인가구 가계부채비율	-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작성주기: 1년
5	저소득가구 중 노인가구 비중	- 균등화 10분위 소득 기준 - 통계청
6	국민연금 수급률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 국민연금통계 (국민연금공단) - 작성주기: 1년
7	국민연금 가입률	- 공적연금 수급하고 있는 응답 노인 수/65세 이상 노인 수*100

연번	지표명	지표 설명 및 출처
		- 국민연금통계 (국민연금공단) - 작성주기: 1년
8	기초연금 수급률	- 시행계획
9	퇴직연금 도입률	- 시행계획 - 신중년 생활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	개인연금 가입률	- 시행계획

10개의 지표들은 모두 3점, 보통 수준 이상의 중요도,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또 중요도와 적합도 모두에서 ‘노인상대빈곤율’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중요도와 적합도 점수가 높았던 지표는 ‘국민연금 수급률/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국민연금 가입률’이었다. 이를 통해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의 내실화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10개 지표들 중 중요도 적합도 점수가 비교적 낮은 4점 이하의 지표들은 ‘노인가구 가계부채비율’, ‘개인연금 가입률’, ‘노인고정빈곤율’, ‘저소득 가구 중 노인가구 비율’, ‘퇴직연금 도입률’, ‘기초연금 수급률’로 나타났다.

4점 이하의 지표들을 중심으로 지표의 문제와 개선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노인가구 가계부채비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노인가구는 청장년보다 부채비율의 중요성이 낮고 또 노후 소득보장의 관점에서 부채의 중요성은 약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개인연금 가입률’은 가입대상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개인의 노후 대비를 보여주는 지표로 극히 개인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노인고정빈곤율’에 대해서는 연도별 물가나 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또 시기에 따라 생계비가 변동되므로 노인고정빈곤율 지표가 갖는 대표성(타당성)이 낮아 노후소득보장을 측정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저소득 가구 중 노인가구 비율’은 에 대해서는 전체 연령대의 빈곤이 악화될 수도 있어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즉 전체 저소득가구가 늘면 저소득 노인가구 비중이 줄어든다 하여도 노후소득보장이 잘 되었다(노인빈곤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지표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도입률’은 기업마다 도입에 차이가 있고 강제성(완전의무가 아님)을 띄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노후 소득보장을 대표하는 지표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표 4-20>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지표 중요도-적합도

(단위: 점)

연번	지표명	중요도 5점 평균 (표준편차)	적합도 5점 평균 (표준편차)
1	노인상대빈곤율	4.53 (0.63)	4.43 (0.82)
2	노인고정빈곤율	3.70 (1.09)	3.67 (1.15)
3	노인가구가처분소득률	4.17 (0.87)	4.03 (0.85)
4	노인가구가계부채비율	3.50 (0.86)	3.43 (0.82)
5	저소득가구 중 노인가구 비중	3.77 (0.86)	3.67 (0.84)
6	국민연금수급률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4.20 (1.03)	4.27 (0.87)
7	국민연금 가입률	4.20 (0.85)	4.17 (0.79)
8	기초연금 수급률	3.97 (1.03)	3.90 (1.03)
9	퇴직연금 도입률	3.87 (1.01)	3.77 (1.04)
10	개인연금 가입률	3.70 (1.09)	3.63 (1.10)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할 전문가 제안 지표로는 ‘전체 총 연금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 ‘공적연금 가입률’, ‘공적연금 성별 수급률’, ‘1인 1공적연금 가입비율’, ‘연금부담률’, ‘필요생활비 중 기초연금수급액 비율’, ‘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 노후소득보장 급여액’, ‘사적이전소득 비율’, ‘중위소득 30% 빈곤율’, ‘최저생계비 기준 국민연금 대체비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지표들은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연금 외에 사적이전소득 비율이나 기업연금 가입률 등 보완지표를 다양하게 조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공적연금의 성별 수급률 등은 성별 차이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비율 파악이 추가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공적연금 가입률과 공적연금 성별 수급률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통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사학연금통계연보 등을 활용해 개괄적인 데이터를 산출이 가능해 보인다.

<표 4-21>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영역 전문가 제안지표

연번	정책목표	전문가 제안지표
1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전체 총 연금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
2		공적연금 가입률
3		공적연금 성별 수급률
4		1인 1 공적연금 가입비율
5		연금부담률
6		필요생활비 중 기초연금수급액 비율
7		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 노후소득보장 급여액
8		사적이전소득 비율
9		중위소득 30% 빈곤율
10		최저생계비 기준 국민연금 대체비율
1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주: 전문가 제안지표는 조사표에 제시된 지표 외에 정책 목표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를 제안 받은 것으로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통계일 수 있음

2.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을 달성하기 위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 내 정책과제로는 ‘계속고용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중·고령자 취업 지원 활성화’가 있다. 정책지표는 ‘고령자 고용률’, ‘고령자 실업률/사업체 고령근로자 비율’, ‘장년근로자(55~64세) 고용률’,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 수’로 구성되었고 각 지표가 정책목표 측정을 위해 중요한지 그리고 적합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4-22>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의 정책 지표

연번	지표명	지표 설명 및 출처
1	고령자 고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55~64세, OECD 기준)취업자/고령자 생산가능인구×100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작성주기: 월
2	고령자 실업률 /사업체 고령근로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실업자/고령자 경제활동인구×100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작성주기: 월
3	장년근로자(55~64세) 고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작성주기: 월
4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 둔 평균연령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작성주기: 월
5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을 측정하기 위한 5개 지표들은 모두 3점, 보통 수준 이상의 중요도,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중요도와 적합도가 4점 이상으로 높았던 지표로는 ‘장년근로자 고용률’, ‘고령자 고용률’,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를 들 수 있다. 3점 보통 이상의 중요도와 적합도를 나타내었지만 5개 지표 중에서 중요도와 적합도가 낮은 편에 속하였던 것은 ‘고령자 실업률/사업체 고령근로자 비율’,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 비율’로 나타났다.

4점 이하의 지표들을 중심으로 지표의 문제와 개선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고령자 실업률/사업체 고령근로자 비율’에서 고령자 실업률 계산은 고령자가 모두 일을 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산출하는 것이며, 고령자 실업률은 청장년 세대에 비해 별도의 지표로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었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 비

율'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가 주로 공공에 의해서 창출되는 일자리이므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 비율이 낮고 또 대상자 수가 적어 '신중년 새로운 인생 지원'이라는 정책목표 측정을 위한 지표로서 대표성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노인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정책목표에 보다 적합성이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중요도 적합도 모두 4점대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평생 직장시대가 지난 만큼 한 직업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기에 지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4-23>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지표 중요도-적합도

(단위: 점)

연번	지표명	중요도 5점 평균 (표준편차)	적합도 5점 평균 (표준편차)
1	고령자 고용률	4.13 (0.90)	4.20 (0.89)
2	고령자 실업률 (사업체 고령근로자 비율)	3.43 (0.94)	3.33 (0.88)
3	장년근로자 고용률	4.30 (0.79)	4.17 (0.99)
4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	4.03 (0.85)	4.07 (0.91)
5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 비율	3.53 (0.86)	3.40 (0.93)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할 전문가 제안 지표로는 '중고령자 계속 고용률', '중고령자 재취업률',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 은퇴 후 다시 두 번째 일자리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 '중고령자 재취업 교육 참여율', '중고령자 전직 지원 프로그램 참여율', '중고령자 취업 지속(근속)기간/이직률', '희망일자리 계속고용 비율', '가교일자리 취업 현황', '장년근로시간단축제 활용률', '중장년의 노후생활준비율', '사업/분야별 노인고용률'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지표들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주로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고령자의 재취업 관련 지표들을 다양하게 설정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현재 중고령자의 재취업 관련 현황자료(예를 들어 중고령자 계속 고용률, 재취업률, 두 번째 일자리 취업 기간 등)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산출지표들을 설정한 뒤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중년층 근속기간 등은 1년 주기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중장년층행정 통계를 이용해 데이터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분야별 노인 고용률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일부 산출 가능할 것이다.

<표 4-24>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관련 전문가 제안지표

연번	정책목표	전문가 제안지표
1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중고령자 계속 고용률
2		중고령자 재취업률
3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 은퇴 후 다시 두 번째 일자리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
4		중고령자 재취업 교육 참여율
5		중고령자 전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율
6		중고령자 취업 지속(근속)기간과 이직률
7		희망일자리의 계속고용 비율
8		가교일자리 취업 현황
9		장년근로시간단축제 활용률
10		중장년의 노후생활준비율
11		중년층 근속기간
12		사업/분야별 노인고용률
13		
14		

주: 전문가 제안지표는 조사표에 제시된 지표 외에 정책 목표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를 제안 받은 것으로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통계일 수 있음

3.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 내 정책과제로는 ‘노인일자리 80만 개 창출’,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공익활동 내실화’가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은 ‘공익활동 일자리 창출 비율’, ‘노인운동실천률’, ‘자원봉사활동 참여율’로 구성되었고 각 지표가 정책목표 측정을 위해 중요한지 그리고 적합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4-25>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의 정책 지표

연번	지표명	지표 설명 및 출처
1	공익활동 일자리 창출 비율	- 노인일자리 창출 수의 합 -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작성주기: 1년
2	노인운동실천률	-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 작성주기: 3년
3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 작성주기: 3년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관련 지표의 중요도와 적합도 점수는 3개 지표 모두 3점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 중에서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중요도와 적합도가 모두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익활동 일자리 창출 비율’, ‘노인운동실천률’의 중요도 적합도 점수는 3점 후반대로 나타났고 지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공익활동 일자리 창출 비율’에 대해서는 공익활동 일자리 창출 그 자체가 매우 강제적이어서 인위적인 수치를 창출할 수 있고 공익의 정의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인운동실천률’에 대해서는 고령자의 사회참여 지표라기보다 건강분야 지표로서 보다 적합하며 운동강도, 시간 등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표 4-26>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표 중요도-적합도

(단위: 점)

연번	지표명	중요도 5점 평균 (표준편차)	적합도 5점 평균 (표준편차)
1	공익활동 일자리 창출 비율	3.80 (0.96)	3.73 (1.01)
2	노인운동실천률	3.87 (1.04)	3.83 (1.05)
3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4.23 (0.82)	4.10 (0.80)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할 지표로는 ‘고령자 사회고립도’, ‘정치활동 참여율’, ‘시민단체 참여율’, ‘노인 평생교육 참여율’,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만족도’, ‘자원봉사 의향’, ‘여가활동 참여율’, ‘고령자 사회활동 참여율/ 고령자 사회공헌활동 참여율’, ‘시민서비스 참여율’ 등이 제시되었다. 제안지표들은 주로 노인 자원봉사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참여(지역사회 참여) 관련 지표들의 개발 필요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정치활동 참여율’, ‘시민단체 참여율’, ‘여가활동 참여율’은 통계청의 사회조사나 노인실태조사 데이터를 통해 산출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표 4-27>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영역 전문가 제안지표

연번	정책목표	전문가 제안지표
1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고령자 사회고립도
2		정치활동 참여율
3		시민단체 참여율
4		노인 평생교육 참여율
5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만족도
6		자원봉사 의향
7		여가활동 참여율
8		고령자 사회활동 참여율/ 고령자 사회공헌활동 참여율
9		시민서비스 참여율

주: 전문가 제안지표는 조사표에 제시된 지표 외에 정책 목표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를 제안 받은 것으로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통계일 수 있음

4.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돌봄환경 조성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돌봄환경 조성’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 내 정책과제로는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치매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한 주거여건 마련’, ‘노인안심생활 지원’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건강수명’, ‘노인만성질환유병률’, ‘노인미치료율’, ‘평균 만성질환 보유수’, ‘장기요양보험수혜자 중 재가급여 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율’,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수혜자 비율’, ‘치매안심센터 수혜자 비율’,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혜자 비율’, ‘노인교통사고 사망률’, ‘노인학대율’, ‘노인사고율’, ‘최저주거기준 미충족률’로 구성되었고 각 지표가 정책목표 측정을 위해 중요한지 그리고 적합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4-28>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돌봄환경 조성’의 정책 지표

연번	지표명	지표 설명 및 출처
1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 0세에서의 기대수명-건강수명 - 생명표 (통계청), Healthy Life Expectancy(WHO) - 작성주기: 1년
2	건강수명	- 기대수명-유병기간 제외 - Healthy Life Expectancy(WHO)
3	노인 만성질환 유병률	- 65세 이상 만성질환 환자 수/65세 이상 인구 수 -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본부) - 작성주기: 1년
4	노인 미치료율	- 치료를 원하였음에도 치료받지 못한 응답 노인 수
5	평균 만성질환 보유수	-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작성주기: 1년
6	장기요양보험수혜자 중 재가급여 비율	-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작성주기: 1년
7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율	-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작성주기: 1년
8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수혜자 비율	-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작성주기: 1년
9	치매안심센터 수혜자 비율	- 대한민국 치매현황 (중앙치매안심센터)
10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혜자 비율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1	노인교통사고사망률	-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수/65세 이상 인구 수×10만 명 -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경찰청) - 작성주기: 1년

연번	지표명	지표 설명 및 출처
12	노인학대율	- 노인학대현황보고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작성주기: 1년
13	노인사고율	-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 작성주기: 1년
14	최저주거기준 미충족률	- 노인가구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수/노인 가구 수×100 -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 작성주기: 1년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돌봄환경 조성’ 관련 지표의 중요도와 적합도 점수는 14개 지표 모두 3점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 중에서도 ‘건강수명’,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노인만성질환유병률’, ‘장기요양보험수혜자 중 재가급여 비율’,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혜율’, ‘노인학대율’, ‘최저주거기준 미충족률’ 등은 중요도 적합도 점수가 4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혜자 비율’,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수혜자 비율’, ‘치매안심센터 수혜자 비율’, ‘평균 만성질환 보유 수’, ‘노인 미치료율’ 지표 등은 15개 지표 중 중요도 적합도 점수가 비교적 낮은 점수(3점대)를 나타내었다. 낮은 점수대 지표를 중심으로 지표 개선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출되었다. 먼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혜자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비스가 널리 확대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를 지역사회 중심 돌봄환경을 대표하는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수혜자 비율’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없어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되므로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이용률과 같이 지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치매안심센터 수혜자 비율’에 대해서는 치매대응체계 측정하는 지표로서 안심센터 수혜자 비율이 적절한 것인지, 수혜자 비율을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이용률)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 질이나 중요도가 다른 서비스기관보다 더 낮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안심센터 수혜율을 대표지표로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평균 만성질환 보유수’는 만성질환 발생률이 높고 여러 개가 중복되어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는 의견이었고, ‘노인미치료율’은 미치료라는 부분의 개념 정의가 애매하고 질병마다 치료를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작성이 어렵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4점 이상의 중요도와 적합도를 나타낸 지표 중 ‘노인학대율’에 대해서는 노인학대 현황이 신고 기반이므로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혜율'의 수혜율 증가가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므로 지표 해석에 유의할 필요
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4-29>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돌봄환경 조성' 지표 중요도-적합도

(단위: 점)

연번	지표명	중요도 5점 평균 (표준편차)	적합도 5점 평균 (표준편차)
1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4.67 (0.48)	4.70 (0.47)
2	건강수명	4.73 (0.45)	4.73 (0.45)
3	노인 만성질환 유병률	4.33 (0.76)	4.33 (0.76)
4	노인 미치료를	3.83 (0.83)	3.73 (0.83)
5	평균 만성질환 보유수	3.80 (0.85)	3.67 (0.99)
6	장기요양보험수혜자 중 재가급여 비율	4.27 (0.64)	4.07 (0.94)
7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율	4.27 (0.87)	4.17 (1.09)
8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수혜자 비율	3.57 (1.07)	3.37 (1.22)
9	치매안심센터 수혜자 비율	3.60 (0.93)	3.43 (1.10)
10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혜자 비율	3.23 (0.86)	3.10 (0.96)
11	노인교통사고사망률	4.03 (0.85)	4.07 (0.91)
12	노인학대율	4.27 (0.69)	4.03 (0.93)
13	노인사고율	3.87 (0.82)	3.87 (0.78)
14	최저주거기준 미충족률	4.10 (0.88)	4.13 (0.78)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돌봄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할 전문가
제안 지표로는 '고령친화주거 보급률', '고령자 임대주택 수혜율', '노인사회관계망 지
표', '비공식 가족돌봄자 비율', '치매유병률', '치매발생률', '고령자 인구 대비 병의원
수', '치매환자의 재가거주비율/시설입소 비율', '돌봄 공동체의식 정도', '노인맞춤돌
봄서비스 이용률', '노인 우울증 유병률/경험률',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 비중', '장
기요양 등급 외 노인의 지원서비스 수혜율' 등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비공식 가족돌봄
자 비율, 치매유병률, 치매발생률, 고령자 인구 대비 병의원 수, 노인 우울증 유병률/경

험률,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 비중에 관한 지표는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돌봄환경 조성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안 지표들로, 기존 건강보험 행정데이터나 장기요양보험 행정데이터 등을 통해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치매유병률과 발생률은 중앙치매센터에서 데이터 산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계청 미승인 통계로 이를 국가승인 통계화하기 위한 노력(표본 샘플링과 조사방법의 신뢰성 확보)이 필요해 보인다. 노인사회관계망 지표는 1년주기의 통계청 사회조사를 통해 데이터 산출이 가능하고, 노인 우울증 유병률/경험률 지표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3년주기의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 산출이 가능해 보인다.

<표 4-30>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돌봄환경 조성’ 영역 전문가 제안지표

연번	정책목표	전문가 제안지표
1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돌봄환경 조성	고령친화주거 보급률
2		고령자 임대주택 수혜율
3		노인사회관계망 지표
4		비공식 가족돌봄자 비율
5		치매유병률
6		치매발생률
7		고령자 인구 대비 병의원 수
8		치매환자의 재가거주비율/시설입소 비율
9		돌봄 공동체의식 정도
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률
11		노인 우울증 유병률/경험률
12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 비중
13		장기요양 등급 외 노인의 지원서비스 수혜율

주: 전문가 제안지표는 조사표에 제시된 지표 외에 정책 목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돌봄환경 조성’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를 제안 받은 것으로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통계일 수 있음

5.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 내 정책과제로는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마련’, ‘노인자살 예방 적극 대응’이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수’, ‘노인자살률’로 구성되었고 각 지표가 정책목표 측정을 위해 중요한지 그리고 적합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4-31>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의 정책 지표

연번	지표명	지표 설명 및 출처
1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자료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수 -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가능 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	노인자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 작성주기: 1년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관련 지표의 중요도와 적합도 점수는 2개 지표 모두 3점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노인자살률’에 대한 중요도, 적합도 점수는 4점 후반대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수’는 3점 후반대의 중요도, 적합도를 나타내었고 그 이유로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수’에 대해서는 아직 등록기관 수가 많지 않고 이용자 수도 많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4-32>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지표 중요도-적합도

(단위: 점)

연번	지표명	중요도 5점 평균 (표준편차)	적합도 5점 평균 (표준편차)
1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수	3.70 (0.88)	3.63 (1.10)
2	노인자살률	4.60 (0.56)	4.63 (0.56)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할 전문가 제안 지표로는 ‘원인별, 연령별 노인자살률’, ‘사전돌봄지시서 이용률’, ‘SMART CARE 적용율’이 있다.

<표 4-33>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영역 전문가 제안지표

연번	정책목표	전문가 제안지표
1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원인별, 연령별 노인자살률
2		사전돌봄지시서 이용률
3		SMART CARE 적용률

주: 전문가 제안지표는 조사표에 제시된 지표 외에 정책 목표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를 제안 받은 것으로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통계일 수 있음

제4절 통계 지표 개선방안

1. 인구 분야 지표 개선방안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거나 신규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인구통계 지표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검토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구분야의 기존 통계지표, 예를 들어 인구피라미드, 인구부양비, 합계출산율, 기대수명, 사망률 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통계 생산 및 산출, 관리방식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 기존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질문하기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표들을 선행연구(박종서 외, 2015, 김은정 외, 2018, 박종서 외, 2019)를 참고로 추출한 후, 해당 지표의 중요도와 적합도, 그리고 데이터 산출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본 장의 2~3절과 조사표 구성과 질문방식에 차이가 있고, 또 지표 개선 방안에 대한 서술 방식(인구 분야에서는 데이터 산출 등의 방법을 2~3절과 달리 구체적으로 제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먼저 인구 분야 지표의 각 영역별 중요도-적합도가 높게 나타난 지표들에 대한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시된 ‘혼인 이행률’, ‘유배우 합계출산율’, ‘조정합계출산율’, ‘성별/연령별 미혼자 인구’, ‘혼인기간별 출산율’, ‘지역출산통계 개발’, ‘신혼부부 통계 개발’ 관련 통계들의 중요도와 적합도는 모두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유배우 합계출산율’, ‘조정합계출산율’, ‘혼인 이행률’순으로 중요도

와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출산은 혼인-출산과 같이 사실상 2단계로 이루어지고, 출산지원 정책들이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효과 및 출산변동을 살펴보기 위해 기혼여성들의 출산율과 이행률 등을 특화한 지표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어서, 비교적 중요도와 적합도가 낮게 나타난 지표들의 개선 방안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기존 데이터에 자녀 출산 연도나 신혼 초기 주거 형태와 같이 다른 지표들과 조합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추가 정보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관련 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 주거문제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이며, 출산뿐만 아니라 출산의 전제조건이기도 한 혼인에 대해서도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거실태는 저출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핵심적 사안이다. 출산과 관련성이 높은 신혼부부의 주거 상황에 대해서는 ‘신혼실태 패널조사’가 3회에 걸쳐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황이며, 현재 ‘주거실태조사’에는 혼인 연령, 자녀 출산 연도 등에 대한 가구 정도가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 주거실태조사에 혼인 관련 정보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상황에 대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자녀 출산 연도와 신혼 초기의 주거 형태 등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다면 현재 중단된 ‘신혼실태 패널조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조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주거문제가 저출산 정책에 핵심 정책으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통계 정보를 축적한다는 의의도 있다. 한편 통계청의 신혼부부통계에서도 일부 주거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주거정보에는 거주유형별(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소유별(자가여부), 주택자산가액별 구분(소유주택), 소유주택명의(다른 주택 보유)가 있다. 그러나 이들 주거관련 정보들은 신혼부부 주거 정보의 가장 핵심이라고 점유형태가 포함되지 않고, 월세 부담 또는 주거 관련 융자 원금 및 이자 상환 부담 등 종합적 주거 부담을 의미하는 ‘(주관적)주거비 부담’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신혼부부 통계가 행정자료를 통해 작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혼부부 통계의 주거관련 정보는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신혼부부 통계는 대부분 집합적 자료(aggregate data) 수준에서만 제공되고 있으며, 개별 사례자료(individual data)의 활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에

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현재까지 큰 활용성이 나타나지 않는 신혼부부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고, 출산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지역단위 출산수준 파악과 주거정책 마련과 관련한 이동 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현재 지역단위의 혼인력/출산력 측정은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신혼부부의 비율이 지역 출산율 수준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상림·이지혜 2017)에서 신혼부부가 혼인 이전에 어디서 거주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혼인력과 지역의 출산력 수준 이해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혼인 이후 어떠한 이동 이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 역시 신혼부부의 주거실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산 정보(출산이력)를 제공해주는 것 역시 앞서 주거실태조사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력의 세부 분석을 위해서는 단시점의 스냅샷이 아닌 출산이력의 누적 자료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신혼부부 통계에 추가적 정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혼인신고서 자료 등 몇몇 한정된 행정자료만을 사용하였는데, 출산이력 정보와 이동 이력 정보를 추가 반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누적된 행정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횡단면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한편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에도 이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 대상이 당해 년도 조사의 2~5년차만을 대상으로 하고, 인구이동의 이력도 전년도에 이주범위(예를 들어 같은 시도내, 다른 시군구 등)로 제한적이어서 이와 관련한 이동정보(이주정보의 대상년도 확대, 이주범위 확대)를 개선해야 한다.

지역 출산통계 세부화와 관련된 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 사회정책 집행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지방인구 감소, 지방쇠퇴 등 지방 관련 현안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출산 관련 정보들 역시 지역수준에서 제공되고 분석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인구동태 데이터는 지역의 출산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개인단위 출산/혼인 마이크로 데이터는 시군구 단위 정보를 삭제한 채로 제공되고 있어 시군구 단위의 출산수준이나 혼인수준을 분석할 수가 없다. 단지 지역단위의 총괄자수(aggregated data)만 제공되고 있어서 연령별 혼인/출산 경향 지수의 산출이나,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 분석(예를 들어 지역 유배우자 비율이나 지역 혼인이행률)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보의 보안도 중요하지만,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나 연

계 정보가 조절된 구분된 별도 자료 제공 등의 방식을 통해 지역단위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이를 통해 지역(시군구) 단위에서도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을 세부적 통계지표를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신혼부부 통계는 출산 정책에서 있어서 핵심적 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행정 통계를 종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혼인이나 출산 이행의 통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혼인/출산 행위 이전의 특성에 관한 관찰 정보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신혼부부 대상으로 한 패널 조사의 추가개발 및 보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횡단적 자료로부터는 출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이전 변인(예를 들어 출산 이전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 경제적 상태, 주거상황 등)의 정보 없이 현재의 정보로만 차별 출산력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의 경우에는 출산행위 자체에 크게 영향(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계열적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통계는 혼인/출산 행위 이후의 정보들이 대부분이라 이행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청년 코호트의 생애과정 이행에 관한 변화를 담아내기에도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신혼부부 통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출산, 주거, 노동, 맞벌이, 육아, 가족 시간 등에서 대한 신혼부부 대상의 조사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및 정책의 규모, 성격 측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신규 지표들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혼인이행률에 관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혼인은 사실상 출산의 전제요인이며, 출산력 수준 측정과 관련해 혼인율은 출산율의 선행지표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일부 연구나 정부 지표에서 사용되는 (연령별) 혼인율은 (연령별)혼인건수를 (연령별) 인구로 나누는 방식이기 때문에 혼인의 리스크에 놓여있지 않은 유배우 인구(기혼인구)를 분모로 설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계산으로 인해 혼인이 진행될수록 실제 혼인력은 과소추정 되는 결과를 낳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혼인율은 실제 혼인력(혼인수준)을 정교하게 제시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혼인이행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행률은 (연령별)혼인건수를 (해당연령) 미혼자 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지표는 이전 혼인추세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혼인력의 변동을 제시해준다는 장점이 있으며, 혼인-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과정에서 혼인의 변동에 의한 출산력 변화를 측정해낼 수 있다는 효용성도 함께 갖고 있다. 더불어 연령별 이행률

들을 적용하여 생명표 방식으로 생애과정 내 혼인이행 확률(또는 평생 미혼으로 남아 있을 확률)을 산출할 수도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혼인이행률 지표의 장점은 저출산 정책을 미혼인구를 포함한 청년정책으로 확대하고, 출산이나 양육 서비스 지원과 같은 출산-양육 관련 직접적 지원 이외의 다른 구조적 요인들을 정책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는데 기초적 정당성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 지표는 측정보다는 추산의 과정을 걸쳐 추정값의 형태로 생성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 미혼자 인구(비율) 지표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유배우 출산율은 말 그대로 유배우 상태에 있는 여성의 출산율을 의미한다. 기존 합계출산율 체계는 사회의 전체적 출산력 수준을 제시하며, 기혼여성의 출산력을 특정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혼인을 통한 출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여성이 아닌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 변동 제시가 기존의 출산력 지표들(합계출산율이나 연령별 출산율)보다 정책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 또는 육아지원 정책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혼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배우 출산율에 대해 국내에서도 연구자별로 추산된 바는 있으나, 산출방식과 그 수치들이 상이하다. 하지만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의 산출식(연령별 유배우 출산아/연령별 유배우 여성 인구)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을 산출하여 공식 발표하는 것은 우리나라 출산력 변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을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는 유배우 합계출산율에 대해서는 산출 방식에 대한 기본적 견해에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이철희 2019, 변용찬 외 2010). 이에 정부 부처에서 이러한 유배우 합계출산율을 표준화하여 그 값을 제시하는 것에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지표 산출 시 특정 연구자의 방식을 적용하여 매년 그 값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한 출산력 지표의 제시와, 출산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저출산 정책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앞서 설명한 혼인이행률 및 유배우 출산율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혼인상태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혼인상태별 인구는 5년마다 조사되는 인구주택총조사(샘플조사) 자료를 통해서만 한정된 연도의 자료를 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도별로 연령/성별 미혼자 인구는 인구주택총조사(샘플조사) 결과와 혼인통계(또는 필요에 따라 국제이동통계, 사망통계)를 결합하여 추산되어야 한다. 실제 값의 산출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요구하지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이미 장래가구 추계값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연령별 혼인상태 값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산출 통계를 정부의 공식 지표로 공표하는 데는 통계 작성부서의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값을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산출자료 정도의 수위로 공개한다면 우리나라 출산력 변동에 관한 연구에서 매우 커다란 유용성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 지표는 혼인이행률이나 유배우 출산율 등의 출산력 관련 지표의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가질 뿐 아니라 혼인 이전의 인구를 다룬다는 점에서 청년의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고용, 출산,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지표 또는 출산 결정력을 파악하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이 단순 출산/양육지원의 복지서비스 지원의 성격에서 저출산의 원인구조 해소에 전향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기초 자료들은 정책의 발전과 패러다임 전환의 근거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조정합계출산율과 관련한 것인데, 출산율의 연도별 변동 수준이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 기간 및 템포효과(period effect, tempo effect)를 통제할 수 있는 출산율의 보조지표, 조정합계출산율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해외사례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불안정성(fluctuation)의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변동성은 실제 출산력의 변동이라기보다는 출산 연령과 순위구성의 변화에 따른 템포효과(tempo effect)의 속성에 의해 설명될 수도 있다(Kohler, Philipov 2001). 국내에서도 템포효과를 조정하는 몇몇 연구들이 시도된 적은 있으나 추산 결과가 연구자별로 상이한데 이에 대한 표준화 필요가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정 합계출산력 지표는 우리나라 출산력의 실제 변동 추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출산의 80% 이상이 혼인기간 5년 이하의 신혼부부에게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혼인 초기의 출산 동향, 즉 혼인기간별 출산율 (Duration of Marriage Specific Fertility Rate, DSFR)은 주의 깊게 모니터링 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혼인연령이 늦어지면서 출산 연령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 초기의 출산은 일생에 걸쳐 갖게 될 총 자녀의 수를 결정하는 핵심 결정요인이 된다. 그러나 합계출산율 등 지금까지의 출산력 지표들은 (가임연령 동안의)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출산의 핵심 결정요인인 혼인기간의 중요성을 무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혼인기간별 출산율은 앞서 설명한 유배우 출산율과도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점

은 혼인 초기에 놓인 여성(부부)의 출산을 모니터링 하면서 출산의 연도별 환경에 따른 변동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급작스러운 경기 침체기에서는 출산이 미뤄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동향은 해당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출산력 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추가 출산 이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혼인기간별 출산율 지표는 혼인 초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혼인기간에 따른 출산이행의 상황을 정교하게 추적할 수 있어 우리나라 출산동태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단순한 ‘아이 많이 낳기’의 프레임을 벗어난 새로운 정책 방향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출산의 모니터링은 총 출산아 수뿐 아니라 순위별 출산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혼인 기간에 따른 (순위별)출산율은 여성 고용, 보육 지원, 주거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표로 종합 정책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총량적 출산율이 아닌 생애 출산아에 대한 정책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혼인 초기의 출산이행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이 모아질 것이다. 이 지표의 작성을 위해 별도의 조사를 이행할 필요는 없는데, 이는 이미 행정자료를 통해서 작성되고 있는 ‘신혼부부 통계’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통계는 통계청 내 센서스과에서 작성을 맡아 인구동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볼 수 있다. 신혼부부 통계가 작성하고 있는 정보는 혼인기간별 총 자녀의 수 정도인데, 이들 자녀들이 언제 출산되었는지에 대한 출산이력 정보를 연계한다면 혼인기간별 출산율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도시를 나타내는 지수/지방소멸 지수’, ‘외국인 여성의 출산율’, ‘기혼부부/미혼자 희망자녀 수’등의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 지수 등은 무엇을 지방소멸로 볼 것인지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며 관련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외국인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등을 통해 시군구별 외국인 현황, 외국인 고용률 등의 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나 외국인 여성 출산율에 대한 정보 등은 부재하다. 또 OECD 데이터에서 기혼부부와 미혼자의 이상과 현실의 자녀수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고 있고 이는 출산에 관한 희망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또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각종 요인들을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기적인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파악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4-34> 인구분야 지표 개선안

정책목표	지표명	지표 개선안
인구변화 적극대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 기존 주거실태조사에 혼인 관련 정보(자녀 출산 연도)와 신혼 초기의 주거형태 등에 대한 정보가 추가 필요
	신혼부부 통계 활용	- 자녀 출산 정보(출산이력)를 추가 제공 필요 - 이동정보(이주정보의 대상년도 확대, 이주범위 확대)추가 필요
	지역 출산통계 세부화	- 지역의 출산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개인단위 출산/혼인 마이크로 데이터를 시군구 단위 정보를 포함에서 제공할 필요
	신규 지표	
	혼인 이행률	
	유배우 출산율	
	조정합계출산율	
	성별 연령별 미혼자 인구	
	혼인기간별 출산율	
	지방소멸 지수	
	외국인 여성의 출산율	
	기혼부부/미혼자 희망자녀수	

2. 저출산 대응 분야 지표 개선방안

‘저출산 대응’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거나 신규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인구통계 지표들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검토하였다.

먼저 저출산 대응 분야 지표의 각 영역별 중요도-적합도가 높게 나타난 지표들에 대한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영역의 정책 지표에서는 중요도와 적합도에 있어 ‘임신·출산 의료비 지출 부담 정도’와 ‘아동 1인당 의료비’가 높게 나타났다. 의료비 지원이 국가 정책적으로 핵심 요소였기 때문이다. 의료비 이외에도 필요 지표 제안으로 ‘출산 비용’, ‘1인당 아이돌봄 비용’, ‘가족 현금급여액’ 등이 제시되어 이 영역의 정책 지표 설정을 관통하는 주요 개념은 ‘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영역은 대다수의 지표들이 중요도와 적합도에서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고, ‘여성 육아휴직 이용률’,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여가시간’, ‘자녀의 돌봄시간’이었다. 종합해볼 때, 이 영역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책 추진의 결과이자 성과로서 평가될 수 있는 정책 지표이고, 육아휴직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과 근로시간 등 사회환경적 요소를 포함한 지표들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영역은 ‘아동빈곤율’, ‘아동학대율’의 중요도와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률 및 미이용률/사각지대 노출 비율’,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자 비율’ 등이 필요 지표로 제시된 것을 통해 돌봄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질적인 측면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영역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 경험률’, ‘차별이나 사회통합, 사회적 신뢰지표’가 중요도와 적합도 점수가 타 지표 대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추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표로 제안된 ‘비혼·동거가족 비율 및 사회적 인식’, ‘가족 다양성 수용 인식’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영역에서의 핵심적 요소는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 차원의 통계 지표 구축 및 관리였다.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영역은 중요도 점수는 ‘청년 실질실업률’, ‘청년고용률’, ‘청년 비정규직 비율’, ‘연령별/혼인상태별 여성고용률’, ‘유자녀부모 여성고용률’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적합도 점수는 ‘청년 실질실업률’, ‘청년고용률’, ‘청년 니트율’, ‘연령별/혼인상태별 여성고용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040세대의 노동시장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각 영역별 중요도와 적합도가 낮게 나타난 지표들의 개선 방안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중요도와 적합도가 낮게 나타난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정책 목표 측정 등을 위해, 국제기구와의 비교를 위해 조작적 정의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개별 지표를 다른 지표와 보완해서 함께 사용하는 것, 더 나아가 대체 지표를 개발하는 것 등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서는 지표 개선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표를 통해 같음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각 영역별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및 정책의 규모, 성격 측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신규 지표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영역은 ‘정부 지원제도 인지율’, ‘태아관리율’, ‘산모 영

양 및 건강행위’, ‘출산 비용’, ‘고위험 산모 수’, ‘아동수당 지급 및 효과, 만족도’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 지원제도 인지율’은 국민행복카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정부 지원제도의 이용과 원활한 출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출산의 선택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혼남녀를 포함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 산출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수행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나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아관리율’, ‘고위험 산모 수’는 건강보험 급여 실적을 통해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비급여 항목이 있을 수 있어 데이터 산출 시 조작적 정의에 근거한 통계 산출이 필요하다. 특히 ‘고위험 산모 수’는 만혼화 등으로 인해 향후에도 고연령 산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임신 당뇨, 고혈압 등 각종 합병증 예방과 안전한 출산 등을 위해 정책 지표로서 파악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반면, ‘산모 영양 및 건강 행위’나 ‘출산 비용’은 개인적 행위이거나 파악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등이 있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에 의해 3년마다 실시하는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에 출산에 관한 추가 문항으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수당’의 경우, 제도가 최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행정관련 데이터를 구축 후 효과 만족도 등을 측정가능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표 4-35> 저출산 분야 영역별 지표 개선안

정책목표	지표명	지표 개선안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건강한 출산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사산 중 상당수는 출산의도와 상관없이 이유 불명일 수 있음 - 자발성 여부에 따라 유산의 의미는 다르게 해석되므로 국제기준에 맞는 건강한 출산 비율에 대한 정의가 검토되어야 함 - 비자발적 유산과 사산, 출산의도와 관계있는 유산, 사산 통계를 별도 제시해서 건강한 출산비율 지표와 보완할 필요
	저체중/조산아 출생률	-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와는 관련성 적으므로 다른 지표 개발
	신생아 예방접종률	- OECD 등과의 국제비교를 위해 예방접종 항목 기준의 동일 여부 검토 후 수정 필요
	아동 1인당 의료비	-
	임신·출산 의료비 지출 부담 정도	-
	신규 지표	
	정부 지원제도 인지율	
	태아관리율(검진율 등)	

정책목표	지표명	지표 개선안
	신규 지표	
	산모 영양 및 건강행위	
	출산 비용	
	고위험 산모 수	
	아동수당 지급 및 효과, 만족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영역은 ‘남성 육아휴직 기간(평균)’, ‘육아 중 시간제 전환 근로자 비율’, ‘육아 중 재택근무자 비율’, ‘육아휴직 시 생계비 조달 방법’, ‘부모 동시휴직률’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육아휴직 부분은 휴직자 수와 지원 금액을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된다. 때문에 휴직기간(평균 등)과 육아휴직 시 생계비 조달 방법에 대한 정보는 부재한 상황이다. 휴직기간의 경우, 이는 가사/육아의 남녀 참여 및 일생활 균형 정도를 측정하기에 필요한 요소이며, 이와 관련된 노동시장의 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현황 파악도 필요하다. 육아휴직 시 생계비 조달 방법은 육아휴직급여가 기존의 임금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부족 분에 대한 파악을 통해 가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생계비 조달방법 뿐만 아니라 부족 분 수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휴직기간의 선택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과 관련된 부분은 맞벌이 등 가구형태에 따른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육아 중 시간제 전환 근로자 비율’과 ‘육아 중 재택근무자 비율’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확보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이에 대한 조사 진행이 요구된다.

<표 4-36> 저출산 분야 영역별 지표 개선안(계속)

정책목표	지표명	지표 개선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여성고용률	- 여성 고용유지율, 여성 취업률 지표와 보완 활용 필요
	임금근로자 월간 근로시간	-
	아동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	-
	함께 사는 만 10세 미만 아이돌봄 시간	
	함께 사는 10세 이상 초·중·고 학생 돌봄시간	

정책목표	지표명	지표 개선안
	남녀 가사노동시간	-
	여성 경력단절 경험 비율	- 연령대 세분화 필요 - 경력단절 사유가 육아와 무관할 수 있으므로 조사 설계 유의
	여성 육아휴직 이용률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	- 육아휴직 이용률과 함께 이용기간별(유급, 무급기간별) 이용률을 보완해서 사용할 필요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
	연간 출산건수 대비 여성(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 육아휴직사용 기간(만 8세)과 연간 출산건수 사이에는 지표 산출에 있어 시차가 있어 호응성이 떨어지므로 대체 지표 개발이 필요하거나 해석에 유의해야함
	유연근무 이용 관련 비율	- 대상자 수가 많지 않음 -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가족관계) 보다 표본으로 추출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해석에 유의필요
	가족친화지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	- 이용률 편차가 상당히 클 것 같아 지표의 안정성이 우려됨(조사주기 3년, 연속성 문제), 조사주기 단축 필요 - 조사대상 기업의 지표 산출 능력, 표준화 문제 개선 필요
	육아휴직 사용 후 남성(여성) 업무 복귀 비율	-
신규 지표		
	남성 육아휴직 기간(평균) +(여성)	
	육아 중 시간제 전환 근로자 비율	
	육아 중 재택근무자 비율	
	육아휴직 시 생계비 조달 방법 + (부족분 수준)	
	부모 동시휴직률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영역은 ‘초등아동 이상의 돌봄 사각지대 비율’과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자 비율’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 전문가 조사에서 제안된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률 및 사각지대 노출 비율’과 ‘초등돌봄 및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현황’을 통합하여 제시한 것이다. ‘초등아동 이상의 돌봄 사각지대 비율’은 대상적 측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돌봄 현황 파악이 중요하고, 제도권 내에서는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의 연계와 돌봄 공백 발생 여부 및 정도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특히 초등아동 이상의 돌봄 서비스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부처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연령, 소득 등 기준과 서비스 이용시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별 돌

불공백 발생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간 연계정도에 따라서도 돌봄 공백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맞벌이 가구 등의 가구형태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상세한 통계 산출이 필요하여 면밀한 파악을 통해 부처별 정책 간 연계 방안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현재 지적되고 있는 공급의 충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에 필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표 4-37> 저출산 분야 영역별 지표 개선안(계속)

정책목표	지표명	지표 개선안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아동빈곤율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
	평가인증(평가) 어린이집 비율	
	보육수준 만족도	- OECD 등 국가 비교를 위해서는 만족도가 갖는 의미를 국가별로 표준화 필요
	취학 전 보육에 대한 공적 지출 비율	- 공적 지출 범위의 명확화 필요
	방과후 보육에 대한 공적 지출 비율	- 공적 지출 범위의 명확화 필요
	사회 관계적 결핍 수준	- 아동에게 사회적 관계 결핍이라는 개념의 정합성이 떨어짐 - 주관적인 지표로 표준화에 어려움이 있어 oecd 데이터 등을 참고로 조작적 정의에 대한 합의 필요 - 데이터 집계가 5년 주기로 지표 산정의 시의성 문제 개선 필요
	돌봄 일치도	- 희망하는 돌봄 유형이 부모(직접)일 경우 다른 (공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여도 돌봄 일치도가 떨어질 수 있어 해석에 유의 필요
	아동 삶의 만족도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조사주기는 5년으로 너무 길어 조사주기 개선 필요 - 만족도에 관한 표준화가 어렵고 국가 비교시 단순비교가 어려움을 염두해 둔 해석 필요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인구 10만 명 당)	-
	재학대 발생률	- 아동학대율이 정책목표에 보다 부합하므로 재학대율 보다 아동학대율의 정확한 집계에 노력할 필요 있음 - 재학대 여부는 관리감독이 강화되면 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 재학대발생률이 높다고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어 해석에 유의
	아동학대율	- 아동학대율이 과소 추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느 곳으로 신고, 접수되던지 관계없이 책임기관에서 아동학대 건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 필요 - 경찰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아동학대 정보 공유
	아동자살률	- 연령별, 세대유형별 아동 자살률 구체화 필요

정책목표	지표명	지표 개선안
	신규지표	
	초등아동 이상의 돌봄 사각지대 비율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자 비율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영역은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 차원의 통계 지표 구축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별도의 신규 지표 제시는 없다. 비혼, 동거, 이혼, 재혼, 다문화, 미혼모/부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일부 조사되었고, 2019년에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에서 조사를 진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 통계청 사회조사에 비해 다양한 가족의 포괄성이나 개인적·사회적 수용도로의 접근 등 보다 상세한 내용들이 조사되었음에도 자체 진행한 조사라는 한계가 있다. 향후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수용도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통계 산출과 관리를 위해서는 공식 통계로 전환하거나 통계청 사회조사 내 문항 추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38> 저출산 분야 영역별 지표 개선안(계속)

정책목표	지표명	지표 개선안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 문화 조성	사회적 인식 및 차별 개선 필요도	—
	한부모의 “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이라는 인식	— 한부모/양부모의 “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이라는 인식정도
	한부모가족의 취업시간 비율	— 한부모가족의 사회보험 가입비율
	한부모가족의 취업유형	— 한부모가족의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등의 대체지표 산출 필요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 경험률	—
	차별이나 사회통합, 사회 신뢰지표	— OECD의 데이터 정의와 산출 기준 활용할 필요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에서 전문가 제안지표들은 무엇보다 노동시장 참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었다. 이 외의 주거에 대한 부분도 있었으나, 상당수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거실태조사’와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고용 측면에서 신규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표로는 ‘청년 고용유지율’과 ‘빈곤 청년실업률 및 니트율’이다. ‘청년 고용유지율’은 아직 공식 통계가 산출되

고 있지 않고 한국고용정보원 등에서 진행한 추가 분석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청년 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 DB에서 산출이 가능한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의 고용유지율만 산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 밖에 통계청 경제활동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는 첫 직장 근속기간을 파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정기간 동안 현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비율인 고용유지율 파악에는 한계가 있어 이들을 종합한 통계 산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밖에 ‘빈곤 청년 실업률’은 취약계층 청년에 특성화된 지표개발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표이나 빈곤에 대한 개념 정의와 조사표 상에서 자료 산출 가용 여부 등을 파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청년니트율은 현재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상황인데, 국내에 청년 니트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기 때문일 것이다(김기현, 2017). 해외사례에 대한 검토와 국내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공식적인 지표 산출 결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39> 저출산 분야 영역별 지표 개선안(계속)

정책목표	지표명	지표 개선안
2040 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청년고용률	- 청년 고용유지율, 취업률과 상호보완, 연령별, 기간별 지표 구체화 필요
	청년 비정규직 비율	-
	청년 실질실업률	-
	연령별/혼인상태별 여성고용률	-
	유자녀부모 여성고용률	-
	여성 임금 비율	- 임금 총액 비중이 아닌 연령, 직종 등 대상자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
	저임금근로자 중 여성 비율	- 저임금근로자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조작적 정의 필요
	여성근로자 비율 평균	- 여성취업률과 함께 사용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	- 데이터 산출 목적에 따라 일반 여성을 분모로 할 것인지 전체 관리자를 분모로 할 것인지 검토 필요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 신혼부부, 청년의 공공주택 희망자 대비 수혜율로 수정
	사교육비 부담	- 가구를 구성하지 않은 미혼 2040세대에게는 해당 안되는 지표로 성과지표로서는 제외될 필요
	가구 소득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공교육비 부담으로 개선(공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음)
	청년니트율	- OECD 기준의 지표 산출 필요
	신규지표	
	청년 고용유지율	
	빈곤 청년실업률 및 니트율	

3. 고령사회 대응 분야 지표 개선방안

‘고령사회 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거나 신규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인구통계 지표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검토하였다.

먼저 고령사회 대응 분야 지표의 각 영역별 중요도-적합도가 높게 나타난 지표들에 대한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영역에서 중요도와 적합도가 가장 높았던 지표는 노인상대빈곤율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국민연금수급률과 국민연금가입률, 노인가구가처분소득률로 나타났다. 또,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영역에서 중요도와 적합도가 높았던 지표는 ‘장년근로자 고용률’, ‘고령자 고용률’,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책은 노후 소득 보장과 장년근로자 고용률과 같은 신중년의 노동시장 참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영역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의 중요도, 적합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노인운동실천률’과 ‘공익활동 일자리 창출 비율’이었다. 다른 영역과 비교해 정책의 규모(수준)와 이를 측정 가능한 지표가 적었다는 점에서 고령자 사회참여와 관련된 정책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돌봄환경 조성’ 영역에서는 ‘건강수명’,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노인만성질환유병률’, ‘장기요양보험수혜율’, ‘장기요양보험수혜자 중 재가급여 비율’, ‘노인학대율’, ‘최저주거기준 미충족률’ 순으로 중요도와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중심 건강, 돌봄환경 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식 돌봄서비스의 이용비율, 노인학대율과 같은 안전한 지역사회의 수준과 관련된 지표의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각 영역별 중요도와 적합도가 낮게 나타난 지표들의 개선 방안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중요도와 적합도가 낮게 나타난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보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성별, 연령별, 세대특성별 등으로 지표를 구체화해서 보완,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또 정책시행 초기단계에 있는 지표들은 대상자가 매우 적으나 국제비교를 위해 시계열적인 수집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지표 개선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갈음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각 영역별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및 정책의 규모와 성격 측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신규 지표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영역은 ‘전체 총 연금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 ‘1인 1 공적연금 가입비율’, ‘필요생활비 중 기초연금수급액 비율’, ‘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 노후소득보장 급여액’, ‘사적이전소득 비율’, ‘중위소득 30% 빈곤율’, ‘최저생계비 기준 국민연금 대체비율’이 신규지표로 제안되었다. 제시된 지표들은 노후소득 보장을 다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유용한 지표들이다. 국민연금수급률 외에 사적이전소득 비율이나 필요생활비 중 기초연금수급액 비율 등과 같이 보완지표로써 다양하게 조합해서 사용하면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내실화 정도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국민연금(사학,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데이터를,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데이터,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데이터 등을 조합하면 전체 총 연금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으나, 개별 데이터들은 각각의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에 한정된 데이터라는 한계가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개별 데이터를 개인별(ID별)로 통합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사적 연금가입률과 가입액에 관한 이와 관련된 공식 통계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다. 노인실태조사에 문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초 데이터를 산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노인실태조사는 자기보고식 패널조사라는 점에서 노인이 정확히 본인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 규모나 금액을 인지하지 못하면 산출되는 데이터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필요생활비 중 기초연금수급액 비율 등은 필요생활비를 어떻게 조작할 지에 따라 데이터 산출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표 4-40> 고령사회 분야 지표 개선안

정책목표	지표명	지표 개선안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노인상대빈곤율	-
	노인고정빈곤율	- 연도별 물가나 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시기에 따라 생계비가 변동되므로 노인고정빈곤율 지표가 갖는 대표성(타당성)이 낮음 - 노인상대빈곤율과 함께 사용하거나 지표에서 제외할 필요
	노인가구가처분소득률	- 노인가구의 가처분 소득률은 개인별 편차가 크기에 성별, 연령별, 세대특성별 지표 보완 필요
	노인가구가채부채비율	- 노인가구는 청장년보다 노후소득에 있어 부채비율의 중요성이 낮음
	저소득가구 중 노인가구 비중	- 전체 연령대의 빈곤이 악화되는 경우 노인빈곤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어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
	국민연금수급률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성별, 연령별 수급률 등 지표 구체화 필요
	국민연금 가입률	-
	기초연금 수급률	-
	퇴직연금 도입률	- 기업마다 도입에 차이가 있고 강제성(완전의무가 아님)을 띄지 않는 한계를 지님 - 가입 대상자 수가 많지 않음 - 하지만 국제 비교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는 지표
	개인연금 가입률	- 가입대상이 매우 적음 - 개인의 노후 준비를 보여주는 극히 개인적 지표 - 하지만 국제 비교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는 지표
	신규 지표	
	전체 총 연금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	
	1인 1개 공적연금 가입비율	
	필요생활비 중 기초연금수급액 비율	
	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 노후소득보장 급여액	
	사적이전소득 비율	
	중위소득 30% 빈곤율	
	최저생계비 기준 국민연금 대체비율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영역에서는 신규 개발지표로 ‘중고령자 계속 고용률’, ‘중고령자 재취업률’,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 은퇴 후 다시 두 번째 일자리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 ‘중고령자 재취업 교육 참여율’, ‘중고령자 전직 지원 프로그램 참여율’, ‘중고령자 취업 지속(근속)기간/이직률’, ‘희망일자리 계속고용 비율’, ‘가교일자리 취업 현황’, ‘장년근로시간단축제 활용률’, ‘중장년의 노후생활준비율’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지표들은 주로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 측정을 위해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 그 중에서도 중고령자의 재취업 관련 지표들을 다양하게 설정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중고령자의 계속 고용률이나 재취업률 등은 중고령자 취업 지속기간/이직률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에 추가문항을 넣어 산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취업 지속기간과 이직률 산출을 위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취업할 확률이 높은 중고령자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동일 기간, 동일 업종에서 여러 번 입퇴사를 반복할 수 있어 취업기간과 이직의 정의에 따라 산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중장년의 노후생활준비율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하는 노후준비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조사 작성 주기가 길어 데이터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표 4-41> 고령사회 분야 지표 개선안(계속)

정책목표	지표명	지표 개선안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고령자 고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직, 파트로 취업해도 고령자 고용률로 계산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취업한 고령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추가로 만들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고용형태별, 성별, 연령별로 구체화된 고령자 고용률 필요
	고령자 실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실업률은 고령자가 모두 일을 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산출 하는 것 - 고령자 실업률은 청장년 세대에 비해 별도의 지표로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약함 - 고령자 실업률 지표 제거
	장년근로자(55~64세) 고용률	-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 직장시대가 지난 만큼 한 직업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기에 지표 해석에 주의 필요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가 주로 공공에 의해서 창출되는 일자리이므로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 창출 비율이 낮고 또 대상자 수가 적어 ‘신중

	년 새로운 인생 지원'이라는 정책목표 측정을 위한 지표로서 대표성이 약함 - 노인일자리의 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정책목표에 보다 적합성 이 높은 결과 도출 가능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비용을 신중년 새로운 인생지원의 성 과지표로 포함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 필요. 연구자에 따 라서는 오히려 중고령자 사회참여 관련 지표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신규지표
	중고령자 계속 고용률
	중고령자 재취업률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 은퇴 후 다시 두 번째 일자리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
	중고령자 재취업 교육 참여율
	중고령자 전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율
	중고령자 취업 지속(근속)기간과 이직률
	희망일자리의 계속고용 비율
	가교일자리 취업 현황
	장년근로시간단축제 활용률
	중장년의 노후생활준비율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할 지표로는 ‘고령자 사회고립도’,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만족도’, ‘자원봉사 의향’, ‘시민서비스 참여율’ 등이 제시되었다. 제안지표들은 주로 노인 자원봉사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참여(지역사회 참여) 관련 지표들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 중에서도 ‘고령자 사회고립도’의 경우, 한국행정연구원에서 1년 주기로 조사하는 사회통합실태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나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고립감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구고령화로 70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사회통합실태 조사의 연구 대상에 70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만족도나 자원봉사 의향, 시민서비스 참여율은 3년 주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하는 노인실태조사 등에 추가 문항을 넣어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시민서비스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표 4-42> 고령사회 분야 지표 개선안(계속)

정책목표	지표명	지표 개선안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공익활동 일자리 창출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활동 일자리 창출 그 자체가 매우 강요적이어 인위적인 수치를 창출할 수 있어 해석에 주의 필요 - 공익의 정의 명확화 필요(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공되는 공익활동 일자리 정의가 약간씩 변화했음)
	노인운동실천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강도, 시간 등의 구체화가 필요 - 건강분야 지표로서 보다 적합할 수 있기에 해석 주의 - 사회참여 기회 확대 관련 다양한 정책과 지표 개발 필요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연간 시간, 기간, 주기로 구체화 필요
	신규지표	
	(연령별) 고령자 사회고령도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만족도	
	자원봉사 의향	
	시민서비스 참여율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돌봄환경 조성’ 영역에서는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할 신규 지표로 ‘고령친화주거 보급률’, ‘치매환자의 재가거주비율/시설입소 비율’, ‘돌봄 공동체의식 정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률’, ‘장기요양 등급 외 노인의 지원서비스 수혜율’ 등이 제시되었다. 위의 지표들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환경 조성을 측정하는 보다 세부적인 지표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에서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케어 진행상황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고령친화주거 보급률의 경우 고령친화주거를 주택의 구조변경 또는 고령자 적합 주택의 보급 등 어디까지를 고령친화주거로 정의하고 집계할 것인지에 따라 데이터 산출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 해외 사례 등을 참고로 조작적 정의 설정과 데이터 선정(장기요양데이터, 국토교통부 데이터 등)이 필요해 보인다. 또 치매환자의 재가거주 비율과 돌봄공동체의식 정도는 커뮤니티케어 추진의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나 다만 커뮤니티 케어는 아직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이고 치매환자의 재가거주를 위한 사회서비스 인프라 역시 부족하므로 먼저 정책의 규모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진행이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률 역시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므로 데이터 산출보다 정책확대가 선결되어야 하며 장기요양 등급 외 노인의 지원서비스 수혜율은 등급 외 노인의 서비스의 지원 범위 설정(공식, 비공식 서비스)에 따라 데이터 산출

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범위 설정에 합의가 필요하며, 2020년 시작된 노인맞춤형통합돌봄서비스와 2020년 이전 실시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의 데이터 결합이 필요해 보인다.

<표 4-43> 고령사회 분야 지표 개선안(계속)

정책목표	지표명	지표 개선안
지역 사회 중심의 건강, 돌봄 환경 조성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
	건강수명	—
	노인만성질환유병률	—
	평균 만성질환 보유수	— 만성질환 발생률이 높고 여러 개가 중복되어 정확한 산출이 어려우나 건강보험 데이터 등을 통해 데이터 산출 가능
	노인미치료율	— 미치료라는 부분의 개념 정의가 애매 — 질병마다 치료를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데이터 작성이 어려울 수 있음
	장기요양보험수혜자 중 재가급여 비율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율	— 수혜율 증가가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므로 지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필요한 지표임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수혜자 비율	— 2020년부터 없어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되므로 지표 재설정 필요 —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이용률로 대체
	치매안심센터 수혜자 비율	— 치매대응체계 측정하는 지표로서 안심센터 수혜자 비율이 적절한 것인지, 수혜자 비율을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이용률)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 —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 질이나 중요도가 다른 서비스 기관보다 더 낮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안심센터 수혜율을 대표지표로 설정하기에는 한계 존재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혜자 비율	— 아직까지 서비스가 널리 확대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를 지역사회 중심 돌봄환경을 대표하는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
	노인교통사고사망률	—
	노인학대율	— 노인학대 현황이 신고 기반이므로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경찰청에서 확보한 노인학대 사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확보한 노인학대 사례 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소 추정된 수치가 산출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 결합 필요, 통계생산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과 통계생산 책임기관 선정 필요
	노인사고율	—
	최저주거기준 미충족률	—
	신규지표	
	고령친화주거 보급률	
	치매환자의 재가거주비율/시설입소 비율	
	돌봄 공동체의식 정도	
	장기요양 등급 외 노인의 지원서비스 수혜율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할 지표로 '원인별, 연령별 노인자살률', '사전돌봄지시서 이용률', 'SMART CARE 적용율'이 제시되었다. 원인별, 연령별 노인자살률은 자살의 원인과 연령을 결합시켜 노인자살률을 파악하려는 지표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노인자살 의도의 원인 등은 파악할 수 있지만 이는 자살행동이 아닌 자살의도에 관한 데이터로 한정되며,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역시 연령별 노인자살률까지만을 산출 가능하고 자살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데이터 산출에 한계가 있다. '사전돌봄지시서 이용률', 'SMART CARE 적용율'은 아직 정책 추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먼저 데이터 집계와 집계를 위한 책임 있는 데이터 생산기관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표 4-44> 고령사회 분야 지표 개선안(계속)

정책목표	지표명	지표 개선안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기관 수가 많지 않고 이용자 수도 많지 않아 데이터 집계가 우선되어야 함 - 성숙한 노년기를 측정하기 위한 대체 지표 개발과 정책 집행 확대 필요
	노인자살률	-
	신규지표	
	원인별, 연령별 노인자살률	
	사전돌봄지시서 이용률	
	SMART CARE 적용율	

제5절 소결

앞서 살펴본 내용들에 근거해 인구정책 통계의 품질 개선을 위해 검토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분야, 저출산 대응 분야, 고령사회 대응 분야 관계없이, 통계지표들이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지표들인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신규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임신중절 통계나 치매유병률 통계 등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현황지표(고령사회의 현 문제나 대응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지표임)로 주기적인 통계 생산과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치매 유병률과 치매 발생률 지표는 치매 발생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치매는 가정 경제는 물론 국가의 사회적 비용 지출에도 큰 영향을 미침)에서 사전 예방과 진행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정책 집행 규모와 정책 목표 달성도와 관련된 치매유병률과 발생률 지표에 대한 통계 생산 및 관리의 시급성이 요구된다. 치매 유병률 지표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표본 표집 등의 대표성 부족 문제로 여전히 미승인 통계이므로 표본 설계의 대표성과 조사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보인다. 인공임신중절 통계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 태아의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지표에 대한 생산 및 관리가 정기적이지 않고, 생산(책임)기관도 불분명하다.

둘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기반이 되는 각 영역별 지표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중요도와 적합도가 낮게 나타난 지표들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5개 각 영역들의 중요도와 적합도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점수대의 영역은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이었고, 뒤로 이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등의 순이었다. 이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시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영역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지표수립을 통해 정책 개선의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기반이 되는 각 영역별 지표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첫 번째 내용과 유사할 수 있는데 정책을 수립·추진·평가하는데 있어 사회적

흐름, 최근에 변화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의 적극적인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다. 비혼·동거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 등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다뤄진 주제이지만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지표화되지 않았고 일부 가족형태에 대해서는 실제 공식적인 통계가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나 현황 파악을 비롯해 추후 정책 성과평가를 위한 통계 산출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정 과제 등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 추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초등돌봄과 관련된 부분이다. 온종일 돌봄체계 하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정부사업들에 대한 지표가 필요하다. 단, 단순히 사업별 목표 수혜인원의 output이 아닌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 등 전체 초등돌봄체계 안에서 outcome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여야 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을 포함해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중고령자의 계속고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고령자 계속 고용률, 두 번째 일자리에 취업하기까지의 기간, 희망일자리 계속고용 비율 등과 같이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표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수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 돌봄 환경 조성’ 영역에서도 최근 치매노인의 지역사회돌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치매유병률/발생률이나 치매노인 돌봄 공동체 의식 정도 등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 변화된 정책을 반영한 지표일수록 대상자 수가 적거나 아직 집계되지 않는 수치들이 많아 먼저 지표 수립의 전 단계로 데이터 축척(수치의 집계화) 작업을 선행할 필요가 있겠다. 산출(결과)지표를 도출하고 이후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지표의 양적·질적 다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년고용률이나 여성고용률의 경우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을 함께 파악하여 상호보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질적으로는 연령대별·직종별·취업유형별 지표 산출 등으로 질적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예로는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률 및 사각지대 노출 비율로 이 지표는 단순히 이용인원 수로 파악하기 어려운 초등돌봄교실의 수요 대비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높은 3개월만 휴직을 사용하는지 더 길게 이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 및 추진에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단, 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현재 정부 정책의 추진 현황과 정책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은 공급이 충분치 않고 또 모든 초혼부부가 공공임대를 희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산모도우미서비스 등과 같은 비교적 최근에 운영되고 있는 정부 제도에 대한 인지에 대한 지표를 추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표 산출의 근거가 되는 통계데이터의 조사주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나 아동종합실태조사, 생활시간조사의 경우 조사주기가 각각 3년, 5년으로 매년 지표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당 조사들은 통계청의 출생통계처럼 전수조사나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거나 부가조사 형태의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여성 노인 관련 지표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영역에서는 공적연금의 성별 수급률 등 성별 차이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비율이 파악될 필요가 있다.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1인 1연금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피부양자 가입제외) 국민연금이입률이라는 지표만으로 이러한 차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자칫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일곱째, 고령사회 대응이라는 정책목표를 측정하는 지표들은 고령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청년 고용률은 2040세대의 안정적 삶의 기반 측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표이지만 고령자 고용률과 실업률은 고령자가 노후에도 모두 일을 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산출하는 것이며, 특히 고령자 실업률은 신중년 새로운 인생출발 지원에 있어 청장년세대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고령자 고용률을 사용할 때, 고령자(신중년) 취업률과 보완해서 사용하거나 고용형태별, 성별, 연령별로 지표들을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령자 재취업의 경우 청장년보다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파트타임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높아 단순히 고용률 수치만으로는 정책목표를 바르게 측정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제 5 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내외 인구정책 관련 통계 현황을 분석하고 그래프와 그림 등을 활용해 국내 인구정책 관련 중요 정보(실태와 추세)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인구정책통계집을 발행하는 것, 둘째,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기존 통계지표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 동시에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는 통계지표를 제언하여 인구정책 관련 통계 품질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문헌검토를 통해 인구정책 통계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여기서 인구정책 통계는 인구, 사회, 정책이라는 세 영역의 상호 관계를 통해 형성되므로 전통적인 사망, 출생, 이동의 개념에서 보다 확장하여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통계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살펴본 OECD, EU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정책 통계를 인구분야, 사회분야, 정책분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인구분야 지표는 인구피라미드, 출산율, 노인부양비 등으로 구성되며, 출생, 사망, 이동의 규모, 증감, 구조에 관련된 핵심 통계 지표를 말한다. 사회분야 지표는 혼인율, 이혼율, 빈곤율 등으로 구성되며,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회의 주요 관심사와 관련된 현황을 기술하는 지표를 말한다. 정책분야 지표는 주택보급률, 청년고용률, 공적연금 수급율 등으로 구성되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들의 추진 현황과 규모 등을 기술하는 지표를 뜻한다.

이어서 위의 분류 체계에 근거해 국내 인구통계 현황을 개괄적인 설명을 중심으로 시계열로 작성, 분석하였다. 앞서 연구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알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표와 그래프를 통해 알기 쉽게 데이터를 설명하려 노력하였다. 또 데이터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학술적·정책적 함의와 그 현상이 변화하게 된 원인 및 배경에 대한 파악은 복수의 데이터 간 조합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데이터가 주는 직접적인 의미(증감 등)를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정책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 목

표와 달성도, 규모 등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로 정책지표를 도출하고 각각의 정책지표가 해당 영역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하고 적합한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요도와 적합도가 낮은 지표들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살펴보고, 정책목표 측정을 위해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표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전문가 제안 지표는 정책목표 측정을 위해 필요한 지표로 기존지표와 신규지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분야에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지표 중 점유형태에 관한 정보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고,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의 이주정보 대상년도 확대, 이주범위 공개 확대 등을 포함한 이동 관련 정보를 자세히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인구분야 신규지표로는 혼인이행률, 유배우출산율, 성별 연령별 미혼자 인구 관련 지표, 조정합계출산율, 지방소멸 지수 등 인구구조 변화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신규지표 개발을 제안하였다. 저출산 대응 분야에서는 각 영역별 기존 지표 개선안과 신규 지표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영역에서 기존 지표 개선안으로 신생아 예방접종률의 경우, OECD 등과의 국제비교를 위해 예방접종 항목 기준의 동일 여부 검토 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되었다. 또 신규지표로는 ‘정부 지원제도 인지율’, ‘태아관리율’, ‘산모 영양 및 건강행위’, ‘출산 비용’, ‘고위험 산모 수’, ‘아동수당 지급 및 효과, 만족도’에 대한 지표 개발이 제안되었다. 고령사회 대응 분야에서 역시 각 영역별 기존 지표 개선안과 신규 지표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영역에서 기존 지표 개선안으로 연금수급률의 경우 성별, 연령별 연금 수급률 등 지표를 보다 구체화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고령자의 수가 늘어나고 이는 고령자 집단별로 특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연령과 성별로 세분화된 정보의 산출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또 신규지표로는 ‘전체 총 연금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 ‘1인 1 공적연금 가입비율’, ‘필요생활비 중 기초연금수급액 비율’, ‘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 노후소득보장 급여액’, ‘사적이전소득 비율’, ‘중위소득 30% 빈곤율’, ‘최저생계비 기준 국민연금 대체비율’ 개발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근거 자료를 축적하고 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달성을 위해 검토해야 할 정책 지표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

- 권태환, 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기현. 2017. 한국 청년 니트(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 KLI 패널 워킹페이퍼, 8호
- 김은정, 이상림, 강은나, 김대중, 김종훈,...이지혜. (201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7년 모니터링.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종훈. (20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다원적 성격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8(7), 7-21.
- 김태현, 전광희, 이윤식, 조영태. (2011). 인구대사전. 통계청
- 박종서, 김동진, 이삼식, 이상림, 이윤경,... 차우규. (2015). 인구정책 관련 통계 생산·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종서, 이소영, 황남희, 장인수. (2019).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용찬, 김동희, 이송희. (2010).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8).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이상림, 이지혜. (2017).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철희. (2019). 출생아수 변화요인 분석과 장래전망. 한국경제의 분석, 25(1), 37-77.
- 장영식, 고경환, 도세록, 김나연, 고혜연,... 장현경. (2011). 2011 OECD 등 국제기구 통계생산 및 관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2019).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
- Adema, W., del Carmen Huerta, M., Panzera, A., Thevenon, O., & Pearson, M. (2009). The OECD family database: developing a cross-national tool for assessing family policies and outcomes. *Child Indicators Research*, 2(4), 437.
- Eurostat. (2019). Ageing Europe. Looking at the Lives of Older People in Europe.
- Kohler, H. P., & Philipov, D. (2001). Variance effects in the Bongaarts-Feeney formula. *Demography*, 38(1), 1-16.
- OECD. (2009). *Measuring and Fostering Well-Being and Progress: The OECD Roadmap*. OECD.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2005년-2007년 건강보험통계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2008년-2017년 진료비통계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2018년 진료비 심사실적.
고용노동부. (각년도).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각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교육부. (각년도). 교육기본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건강보험진료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각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년도). 건강보험통계.
국토교통부. (각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각년도). 보육통계.
중앙자살예방센터 내부자료. 한국자살현황. <http://spckorea-stat.or.kr/korea02.do>에서
2020. 1.23.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생명표: 기대수명(0세 기대여명) 및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건강수명).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8에서
2020. 1.14. 인출.
통계청. (2019). 출생통계.
통계청. (각년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각년도).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각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각년도).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각년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각년도).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각년도).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각년도). 장래인구추계(특별).
통계청. (각년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통계청. (각년도). 혼인·이혼통계.
행정안전부. (각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9). <http://www.ipss.go.jp/syoushika/tohkei/Popular/Popular2019.asp?chap=0>에서 2019.12. 1. 인출
- eurostat. Database.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statistics-by-theme>에서 2019.12.31.인출.
- KOSIS 국가통계포털(e-지방지표). <https://kosis.kr/index/index.do>에서 2019.12.1.일 인출
- OECD Health stats: Long term care recipients in institutions. <https://data.oecd.org/>에서 2019. 9.19. 인출.
- OECD Stat. <http://stats.oecd.org>.
- OECD Stat: Long-Term Care Resources and Utilisation. <https://stats.oecd.org/>에서 2019.11.26. 인출.
- OECD. Earnings. <https://stats.oecd.org>,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에서 2019. 5. 1 인출.
-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database): Hours Worked. <https://data.oecd.org/>에서 2019.11.26.인출.
-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9. 10.26.인출.
-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data.oecd.org/>에서 2019.11.26.인출.
- OECD. Income distribution Gini Coefficient. <https://data.oecd.org/>에서 2019.11. 26.인출.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https://data.oecd.org/>에서 2019.11.26.인출.
- OECD. Poverty rate (indicator). <https://data.oecd.org/>에서 2019.11.26.인출.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https://data.oecd.org/>에서 2019.11.26.인출.
- PISA. 국제학력조사 .

부 록 <

1. 조사표: 저출산인구정책분야

통계지표 품질개선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저출산인구정책분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통계지표 개발과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표들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각 분야 전문가 선생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목적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평가 관련 기존 지표의 문제점 발굴 및 보완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중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개발해야 하는 지표
- 인구정책 관련 기존 통계의 문제점 발굴 및 추가로 개발해야하는 지표

작성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종사자, 정보수집기관 등의 수집의무와 업무 목적 외 결과사용 불가)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통계 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모든 조사를 완료해주신 분들 전원에게는 백화점 상품권(10만원)을 송부 드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연구책임자 : 임정미 부연구위원

조사업체 : ㈜리서치앤리서치
문의처 : 김정민 전임연구원(02-3484-3031)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목표	관련 정책과제	지표명	① 지표 중요도 1~5점	② 지표 적합도 1~5점	①-1 중요도 (높은,낮은) 이유	②-1 적합도 (높은,낮은) 이유	③ 추가 개발 필요 지표	③ 추가 개발 필요 지표 이유
임신, 출산, 양육의 국가 책임화 → 출산, 양육비 부담 최소화	-아동수당 지급 -건강보험확대: 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산 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 업 운영 내실화)	건강한 출산 비율	점	점				
		저체중/조산아 출생률	점	점				
		신생아 예방접종률	점	점				
		아동 1인당 의료비	점	점				
		임신출산 의료비 지출 부담정도	점	점				
일생활 균형,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권 보장(육아휴직제도 내실화) -남성육아참여 활성화 -성평등 육아시간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여성고용률	점	점				
		여성 임금비율	점	점				
		임금근로자 월간근로시간	점	점				
		아동과 여가/돌봄 시간	점	점				
		남녀가사노동시간	점	점				
		여성경력단절경험비율	점	점				
		육아휴직이용률	점	점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점	점				
		연간출산전수대비 육아휴직자비율	점	점				
		유연근무 이용관련지표						

정책목표	관련 정책과제	지표명	① 지표 중요도 1~5점	② 지표 적합도 1~5점	①-1 중요도 (높은,낮은) 이유	②-1 적합도 (높은,낮은) 이유	③ 추가 개발 필요 지표	③ 추가 개발 필요 지표 이유
			점	점				
		가족 친화지수	점	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	점	점				
		육아휴직 사용 후 업무복귀비율	점	점				
돌봄 츄츄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공보육 확충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 육·유아교육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지역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 -아동이 안전한 사회(아동 학대예방 보호체계 강화)	아동빈곤율	점	점				
		어린이집 비율 및 이용아동 비율	점	점				
		보육 수준 만족도	점	점				
		취학전 보육에의 공적지출 비율	점	점				
		방과후 보육에의 공적지출 비율	점	점				
		사회 관계적 결핍 수준	점	점				
		돌봄 일치도	점	점				
		아동 삶의 만족도	점	점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점	점				
		재학대 발생율	점	점				
		아동학대율	점	점				

정책목표	관련 정책과제	지표명	① 지표 중요도 1~5점	② 지표 적합도 1~5점	①-1 중요도 (높은,낮은) 이유	②-1 적합도 (높은,낮은) 이유	③ 추가 개발 필요 지표	③ 추가 개발 필요 지표 이유
		아동자살률	점	점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가족다양성 관련 법제도 정비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 회적 차별 해소 및 인식 개 선	사회적 인식 및 차별 개선 필요도	점	점				
		한부모의 '자녀는 부모에게 재정 적 부담'이라는 인식의 변화	점	점				
		한부모가족의 취업시간	점	점				
		한부모가족의 취업유형	점	점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 경험률 (연령별 제시)	점	점				
		차별이나 사회통합, 사회적 신뢰 지표	점	점				
청년세대 지원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청년일자리, 주거지원, 공교육강화	청년고용률	점	점				
		청년비정규직비율	점	점				
		청년실질실업률	점	점				
		신혼부부 임대주택수혜율	점	점				
		사교육비 부담	점	점				
		가구 소득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점	점				
		청년니트율	점	점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연령별/혼인상태별 여성고용률						

정책목표	관련 정책과제	지표명	① 지표 중요도 1~5점	② 지표 적합도 1~5점	①-1 중요도 (높은,낮은) 이유	②-1 적합도 (높은,낮은) 이유	③ 추가 개발 필요 지표	③ 추가 개발 필요 지표 이유
	비율 제고		점	점				
		유자녀부모 여성고용률	점	점				
		저임금근로자 중 여성비율	점	점				
		여성노동자비율 평균(%)	점	점				
		여성관리자비율 평균(%)	점	점				

2. 조사표: 고령정책분야

통계지표 품질개선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고령정책분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통계지표 개발과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표들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각 분야 전문가 선생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목적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평가 관련 기존 지표의 문제점 발굴 및 보완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중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개발해야 하는 지표
- 인구정책 관련 기존 통계의 문제점 발굴 및 추가로 개발해야하는 지표

작성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종사자, 정보수집기관 등의 수집의무와 업무 목적 외 결과사용 불가)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통계 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모든 조사를 완료해주신 분들 전원에게는 백화점 상품권(10만원)을 송부 드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연구책임자 : 임정미 부연구위원

조사업체 : (주)리서치앤리서치

문의처 : 김정민 전임연구원(02-3484-3031)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목표	관련 정책과제	지표명	① 지표 중요도 1~5점	② 지표 적합도 1~5점	①-1 중요도 (높은,낮은) 이유	②-1 적합도 (높은,낮은) 이유	③ 추가 개발 필요 지표	③ 추가 개발 필요 지표 이유
<소득>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1인 1국민연금 확립 -기초연금 내실화 -퇴직·개인연금 확산·정착 -노후준비 지원 확대	노인상대빈곤율	점	점				
		노인고정빈곤율	점	점				
		노인가구가처분소득률	점	점				
		노인가구가계부채비율	점	점				
		저소득가구 중 노인가구 비중	점	점				
		국민연금수급 관련	점	점				
		국민연금가입률	점	점				
		기초연금 수급률(%)	점	점				
		퇴직연금 가입률(%)	점	점				
		개인연금 가입률(%)	점	점				
<준비>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계속고용을 위한 중장기개 선 방안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 성화 -중·고령자 취업지원 활성 화	고령자 고용률	점	점				
		고령자 실업률 (보조) 고령근로자 비율	점	점				
		장년근로자(55~64세) 고용률	점	점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	점	점				

190 인구정책 관련 통계 지표 품질 개선 연구

정책목표	관련 정책과제	지표명	① 지표 중요도 1~5점	② 지표 적합도 1~5점	①-1 중요도 (높은,낮은) 이유	②-1 적합도 (높은,낮은) 이유	③ 추가 개발 필요 지표	③ 추가 개발 필요 지표 이유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 비율	점	점				
<참여>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노인일자리 80만개 창출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사업 의 공익활동 내실화	공익활동 일자리 창출 비율	점	점				
		노인운동실천률	점	점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점	점				
<건강>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돌봄 환경 조성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치매에 대한 대응체계 강 화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 게 살기 위한 주거여건 마 련 -노인안심생활 지원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점	점				
		건강수명	점	점				
		노인만성질환유병률	점	점				
		노인미치료율	점	점				
		초기/고령노인만성질환유병률	점	점				
		평균 만성질환 보유수	점	점				
		장기요양보험수혜자 중 재가급 여 비율	점	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율(%)	점	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수혜자 비율	점	점				
		치매안심센터 수혜자 비율	점	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혜자						

정책목표	관련 정책과제	지표명	① 지표 중요도 1~5점	② 지표 적합도 1~5점	①-1 중요도 (높은,낮은) 이유	②-1 적합도 (높은,낮은) 이유	③ 추가 개발 필요 지표	③ 추가 개발 필요 지표 이유
		비율	점	점				
		노인교통사고사망률	점	점				
		노인자살률	점	점				
		노인학대율	점	점				
		노인사고율	점	점				
		고령자전세임대 공급률	점	점				
		최저주거기준미충족률	점	점				
<마무리>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수	점	점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 -유망 산업·서비스 육성 -R&D 종합지원체계 구축	고령친화산업 비율	점	점				